

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

2016 ~ 2035

2016. 1



관계부처합동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I 수립 배경 및 경과 | 1 |
| II 여건 분석 | 5 |
| III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| 13 |
| 1. 제2차 기본계획 개요 | 15 |
| 2.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| 16 |
| 3.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| 20 |
| 4. 시사점 | 26 |
| IV 제3차 기본계획 개요 | 27 |
| 1. 구성 및 특징 | 29 |
| 2. 비전 체계도 | 30 |
| V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| 33 |
| 1. 건강한 국토 환경 | 35 |
| 2. 통합된 안심 사회 | 64 |
| 3. 포용적 혁신 경제 | 100 |
| 4. 글로벌 책임 국가 | 133 |
| 5.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| 151 |
| VI 기대효과 | 159 |
| [참고 1] 제1·2차 기본계획 체계도 | 163 |
| [참고 2]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| 167 |

I

수립 배경 및 경과

- 1 수립 배경
- 2 수립 경과
- 3 주요개념 및 국내외 주요경과

mev

1 수립 배경

- **법적 근거** :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0조
 -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·시행
- **계획의 범위**
 -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
 -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, 목표, 추진전략과 원칙, 기본정책 방향,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
 -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

2 수립 경과

- '14.9월~ :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* 추진
 - *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(KEI) 수행,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 참여
- '15.6월~ : 관계 부처* 의견수렴 및 협의, 전문가 포럼(4회)
 - * 국무조정실 등 총 2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
- '15.10월 :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
 - 환경, 사회·건강, 산업, 기후·국제협력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
- '15.11.6 :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(수정의결)
- '15.12.22 : 녹색성장위원회 심의(원안의결)
- '16.1.12 : 국무회의 심의·확정

3 주요개념 및 국내외 주요경과

■ 지속가능발전 개념 : 환경+경제+사회

-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,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
- “지속가능성”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·사회·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

* (참고) UN Brundtland Report('87) : a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present generations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

■ 국내외 주요 추진 경과(기울임 : 국외)

| 연도 | 주요 추진 내용 |
|-------|---|
| 1992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UN환경개발회의(UNCED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리우선언, 의제21 채택 - UN 3대 환경협약(기후변화, 생물다양성, 사막화방지) 출범 |
| 1996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수립·시행 |
| 2000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•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|
| 2002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(WSSD), 요하네스버그 선언 채택 - 빈곤퇴치,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발전 세부 이행계획 합의 |
| 2005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|
| 2006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(2006-20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대 전략, 48개 이행과제, 238개 세부이행과제 • 지속가능발전지표(77개) 선정 |
| 2007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제정 |
| 2010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→「지속가능발전법」으로 개정 -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 |
| 2011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(2011-2015)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대 전략, 25개 이행과제, 84개 세부이행과제 • UN지속가능발전센터(UNOSD) 유치(인천 송도) |
| 2012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UN지속가능발전회의(UNCSD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개념 설정 - UN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설정 합의 |
| 2014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• 유엔사무총장보고서 발간 |
| 2015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70차 UN 총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30 발전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채택 • 제3차 기본계획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- 국무회의 심의·확정('16.1) |

II

여건 분석

- 1 대외 여건
- 2 대내 여건

mev

1 대외 여건

■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가 핵심적인 글로벌 의제로 부각

- 제70차 UN총회에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,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* 채택('15.9)

* 빈곤 퇴치 및 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천년개발목표(MDGs)와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발전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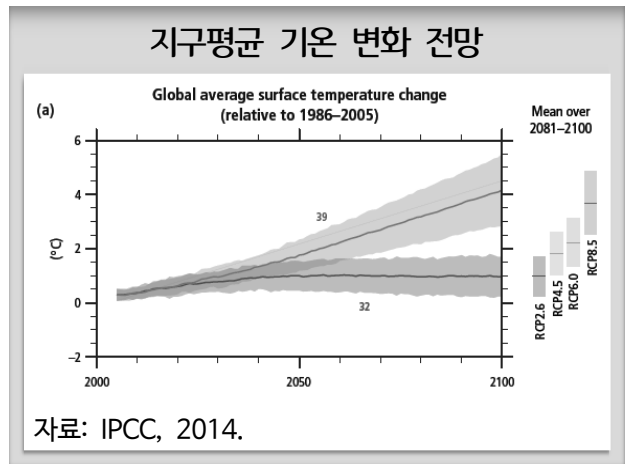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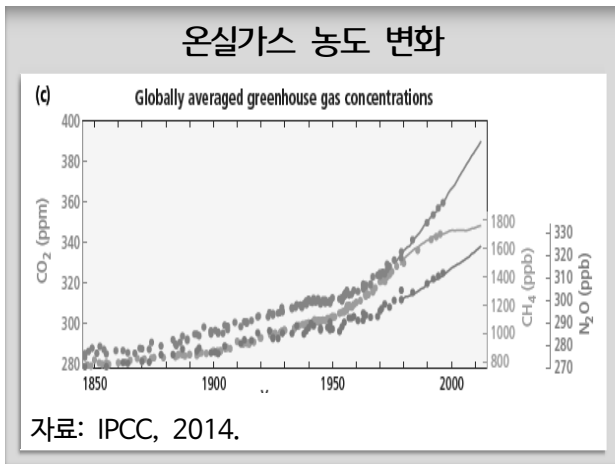
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

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빈곤 퇴치 | 9.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|
| 2.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| 10. 불평등 해소 |
| 3. 보건 증진 | 11. 지속가능도시 구축 |
| 4.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| 12.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|
| 5.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| 13. 기후변화 대응 |
| 6.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| 14.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|
| 7. 청정에너지 보급 | 15.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|
| 8.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| 16.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증진 |
| | 17.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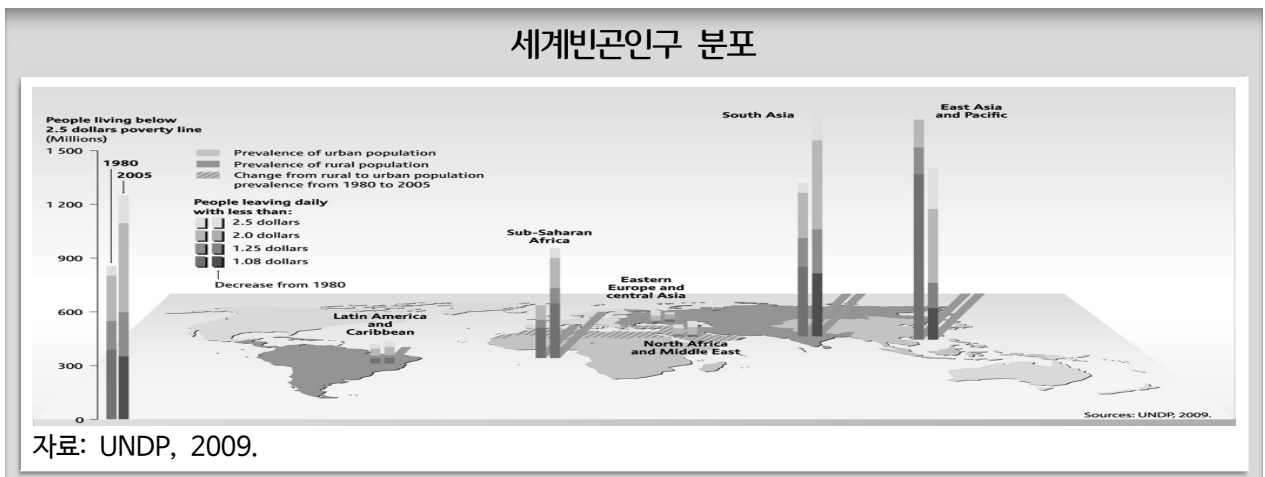
■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피해 확산

- 인구증가,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증가로 지구 온도 및 해수면 상승 전망
 - ※ 21c 말 지구 평균기온 3.7도 상승, 해수면 63cm 상승 전망(IPCC, Climate Change 2014)
-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
 - 기후변화 지속시 15년 내에 1억명 이상의 기후 빈민 발생 예상(WB, '15)
 - ※ '50년까지 생물다양성 10% 이상 감소, 물 부족 인구 23억 명(세계인구의 40%이상)에 이를 것으로 전망(OECD,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, 2012)
 - ※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연간 1.2조 달러(세계GDP 1.6%)로 추정(DARA, Climate Vulnerability Monitor, 2012)



■ 국가간 소득격차 및 불균형 심화

-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격차가 심해지고, 12억 인구가 절대빈곤 상황
 - ※ 전세계 부의 63%가 유럽·북미(세계인구 17%)에 집중(Credit Suisse, Global Wealth Databook 2010)
 - ※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 절반이 하루 1.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



2 대내 여건

■ 기후변화, 자원사용, 환경보건 등 주요 환경문제 악화

●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* 및 에너지 소비** 지속 증가

* '90~'13년간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증가율은 3.8%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

**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5.58toe('13년)로 OECD 평균(4.20toe)보다 30% 이상 높음

● 기온상승*, 극한기상**, 해수면 상승*** 등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전망

* '81~'10년간 연평균 기온 1.2℃ 상승

**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증가, 호우 일수 증가, 한파 발생빈도 증가 등

*** '71~'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은 2.64mm로 지구평균(2.00mm)을 30% 이상 상회

● 도시화·산업화에 따른 지속적 개발*, 외래종 유입·확산*** 등으로 서식지 파괴 및 생태계 교란 심화

* 도시화 용지개발 수요 증가 : 전국토의 5.8%('02) → 9.1%('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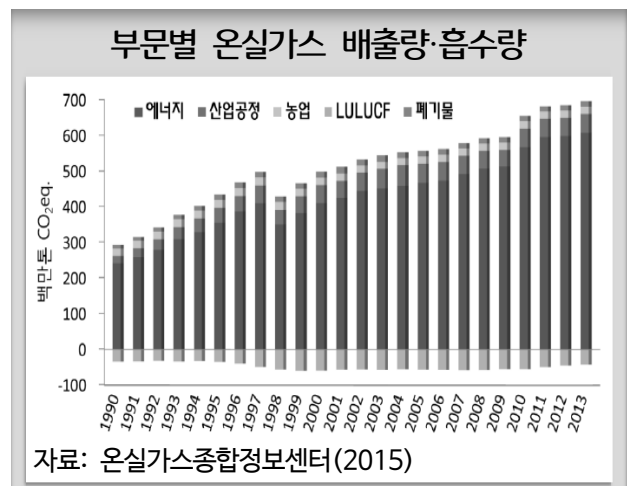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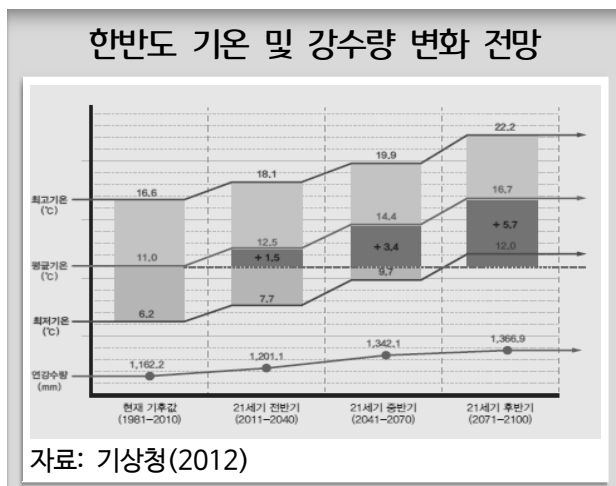
** 국내 유입 외래생물종 2,167종('14년) 중 18종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

● 기후변화, 유해화학물질*, 초미세먼지***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위험**** 증가

* 발암물질 취급량 : 15,814천톤('08) → 20,246천톤('13)

**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(25 $\mu\text{g}/\text{m}^3$)는 뉴욕(14 $\mu\text{g}/\text{m}^3$), 런던(16 $\mu\text{g}/\text{m}^3$), 파리(15 $\mu\text{g}/\text{m}^3$) 등 주요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매우 높음

*** 폭염 및 이상고온 질병부담 : 530억원('10) → 1,039억원('20) → 14,377억원('50)



■ 저출산·고령화,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

- 소득분배 악화로 상대적 빈곤 가구가 증가*하고 비정규직 및 여성**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

* 10분위배율(상위 10% 소득/하위 10% 소득) : '90년 8.5배 → '14년 11.9배
65세 이상 노인 빈곤율('11년 48.6%)이 OECD 최고 수준

** 전체 근로자의 1/3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수준(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)이 하락 추세 : 53.3%('10) → 52.5%('12) → 48.4%('14)
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0%대 수준으로, OECD 최하위권

- 수도권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고 지역불균형** 지속

* 수도권 인구 집중도 : 49.5%('10) → 49.7%('14)

** 16개 광역시·도의 1인당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: GRDP 표준편차 500만원('00) → 882만원('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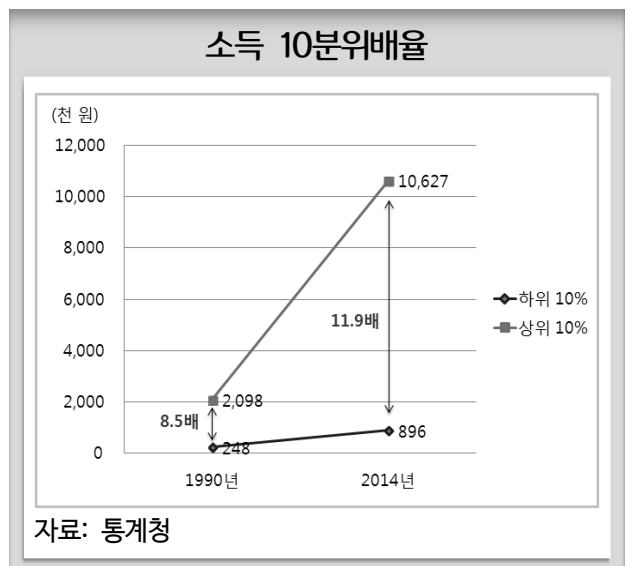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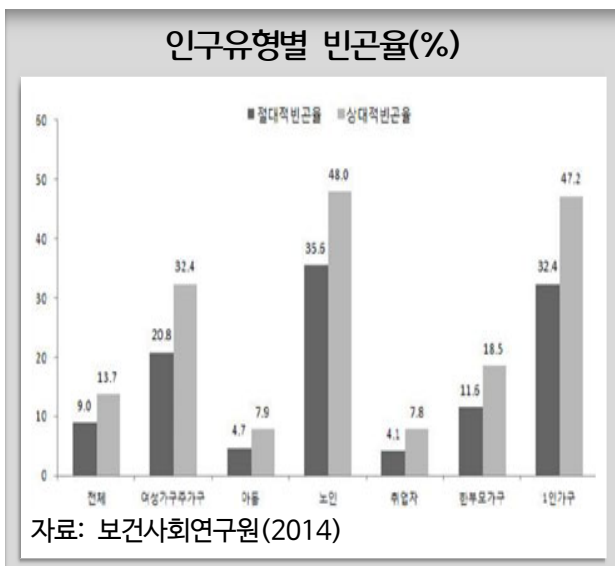
-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범죄, 사고, 재난 등 사회안전*에 대한 국민적 관심 급증

* 교통사고 사망률, 자연재해 피해 규모 등은 감소 추세이나, 싱크홀 등 새로운 이슈

- 공동체 붕괴,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*

* 자살률은 10년째 OECD 국가 1위를 유지(OECD 평균의 2배가 넘음)

한국의 행복지수(Better Life Index OECD, 2015) 순위는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



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진입

-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* 하고 있으며, 현재 3%대인 잠재성장률이 '30년대에는 1%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(KDI, 2014)

* 경제성장률 : 연평균 4.84%('00~'10) → 3.05%('11~'14)

- 설비투자 감소*, 낮은 R&D 효율성, 혁신인재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활력이 침체되고 생산성** 향상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음

* 총고정자본형성(투자)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

** 1인당 노동생산성('11) : 미국 100, OECD 평균 75.7 한국 60.2

- 저출산·고령화 추세의 지속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향후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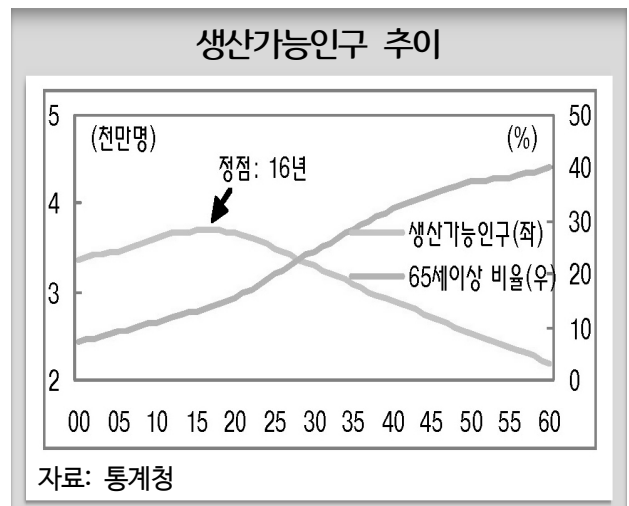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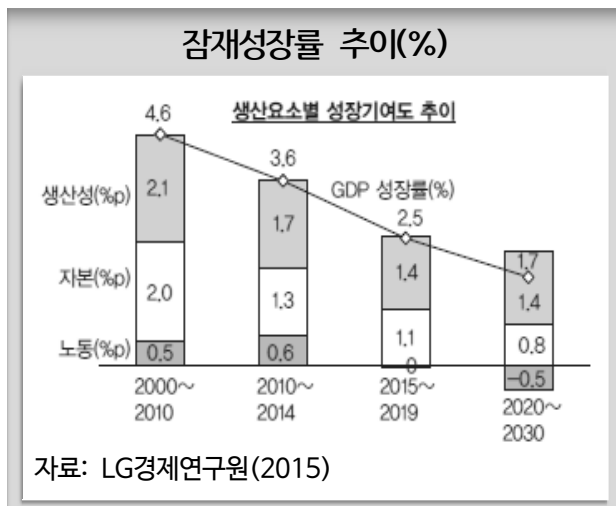
*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60%까지 감소 전망(통계청, 2015)

-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, 건강보험, 노령연금 등 사회안전망 수요가 급증**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

* 고령화사회(노인비중 7%)에서 고령사회(노인비중 14%)로의 진입 소요 연수 : 프랑스 115년, 미국 73년, 독일 40년, 일본 24년, 한국 18년

**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: 27.7%('10) → 30.0%('14)

- 선진국에 비해 전체 실업률은 높지 않지만, 청년 실업률('15년 11.1%)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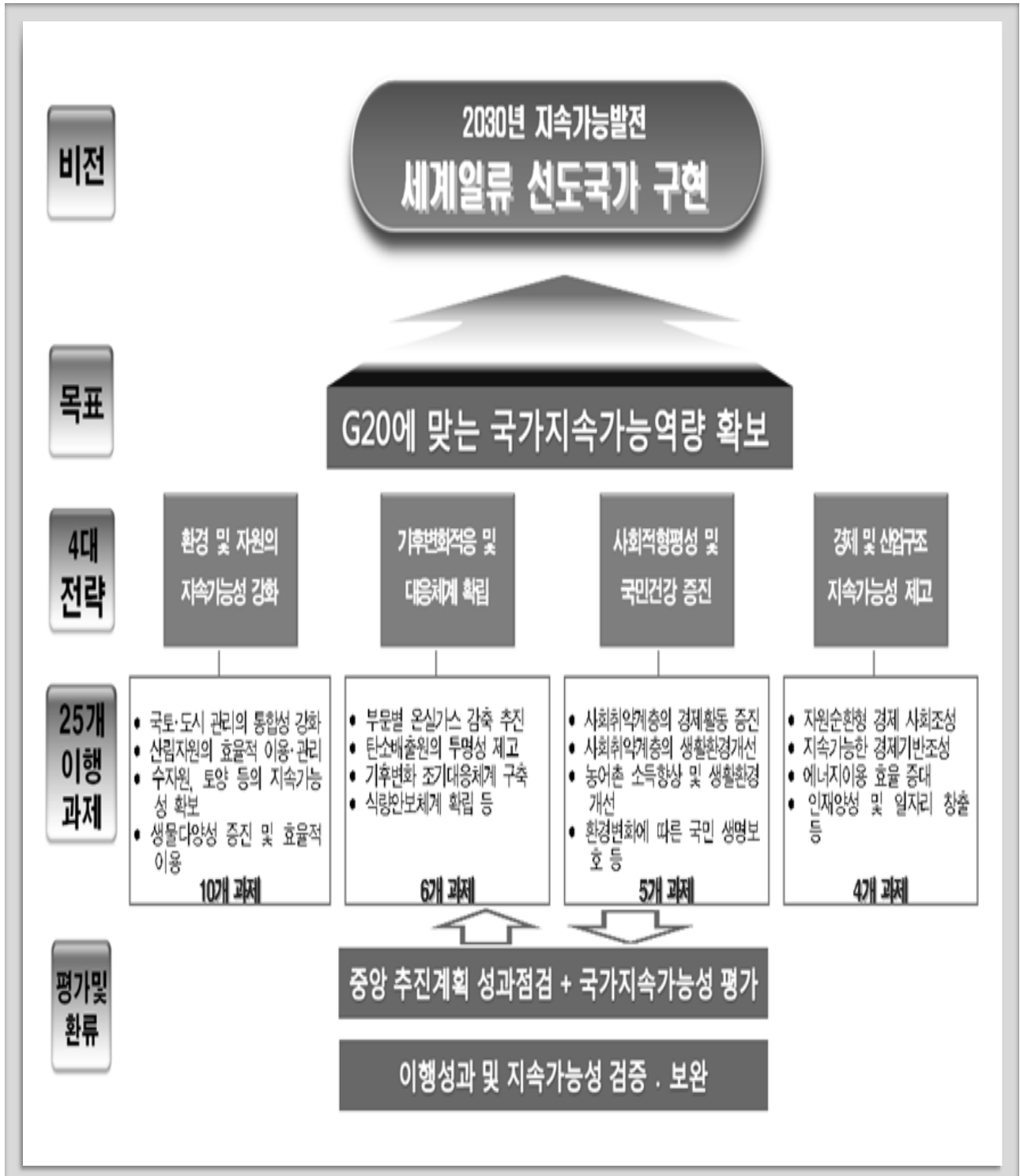
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

- 1 제2차 기본계획 개요
- 2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
- 3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
- 4 시사점



1 제2차 기본계획 개요

- 「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‘11~’30년)」개요
 - 4대 전략, 25개 이행과제, 84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



2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

■ (전략1)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

● 지속가능한 국토·산림·해양 관리 추진

-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('12년), 환경부-국토부 협업으로 국토-환경계획 연동제 근거 마련(환경정책기본법 개정, '15년)
-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('11년 127 → '14년 150천ha), 자연휴양림('14년 162개소)·산림욕장('14년 184개소) 등 산림 보전·서비스 기반 마련
- 국가 자연해안관리 목표제('11년),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제('13년) 시행 등 해양환경 관리 및 개선기반 구축

● 멸종위기종 복원, 습지 보전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

-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('12)
- 42,756종('14년 누적) 생물종 조사, 반달곰, 여우 등 멸종위기종 복원, 국립생태원 설립('13년),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착공('11년) 등 인프라 구축
- 습지보호지역 7개소 추가('11~'15년/내륙 5, 연안 2/총 33개소), 갯벌복원 추진('11~'15년 8개소),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('13.3)으로 총21개소 지정, 산림습원 조사 및 DB 구축 실시('14년까지 993개소)

● 하천 수질개선,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 수자원 관리

-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제고('10년 55.9 → '13년 65.9%),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확대('13.6월)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
- 「물 재이용 기본계획」수립('11.9월),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대상 확대('13.7월) 등 물순환체계 구축

● 국제기구 유치·설립(UNOSD '11년, GCF '12년) 등 국제협력 내실화

■ (전략2)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

● 산업, 교통,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

- 온실가스 목표관리제('11년~)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('15년~), 친환경차 보급 확대('10년 132,451 → '14년 178,942대) 등
- 폐자원에너지화시설 21개소 설치 완료('09~'14년), 고품연료 제조 원료·방법 다양화('13년)등 가용폐자원 에너지화율 제고('10년 2.9 → '14년 11.8%)

● 탄소 배출원 투명성 제고 및 탄소 흡수원 증대 추진

-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확대('10년 301개 → '14년 1,667개),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('12~'14년)
- 유희토지 조림('11~'14년 총 2,791ha), 숲가꾸기('11~'14년 총 1293천ha) 등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
- 목재펠릿 등 화석연료 대체용 바이오매스 수요에 대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('11~'14년 23천ha)

● 기후변화 대비 체계 확립

-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유치('11년), 온실가스·대기오염 감시 슈퍼사이트 운영('12년 수도권 등 4개소),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운영('14.5) 등 기후변화 감시망 확충
-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·보급(누적, '10년 16 → '14년 176종) 및 재배·사육·양식 기술 개발 등 기후친화형 식량생산 기반 마련
- 농업생태계 취약성지도('13년 25건), 농업용 전자기후도 작성('13년), 작물 재배적지 및 확산지도 개발('14년 28건) 등 식량생산 영향평가 및 예측 강화

■ (전략3)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

● 사회취약계층 경제·생활 환경 개선

- 최저생계비 인상, 저소득층 아동 지원프로그램(드림스타트) 확대,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확충 등 취약계층 경제 지원 강화
- 60세 정년 의무화(「고령자고용촉진법」개정, '13.5월), 노인일자리 확대('11년 225 → '14년 336천개) 등 고령사회 대비 중고령 인력활용 제고
- 보금자리주택 53.8만호 공급('09~'12년), 공공주택 연 13만호(분양 2만, 임대 11만) 공급계획 추진('13년~)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

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

-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(농촌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, '14.6월), 농업인재해공제 보장수준 확대(유족급여 '11년 70 → '14년 100백만원)로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
-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('11~'14년 50,924동), 불량주택 정비율 제고('10년 79.7 → '14년 84.5%)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

●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 및 공공보건 의료 강화

- 석면 피해자 구제('11~'14년, 1,531명, 278억원),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·개선사업('11~'14년, 8,003개소) 등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
- 전국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('14.2월~), 저공해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('11~'13년 229천대) 등 호흡기 질환 대기오염물질 관리
- 농어촌 등 산부인과 지원사업('11~'15년, 영동, 울진 등 31개소 분만산부인과 지원)을 통해 분만취약지 해소 추진

■ (전략4)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

●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

- 주요 비철금속 및 희속금속 등 63개 금속에 대한 물질흐름 통계 구축 및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'11~'15년)
- 폐전자제품 재활용의무대상 확대(10 → 27개),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(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개정, '13.7월)
-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('13.6월), 음식문화개선 민관협력사업('13년~'14년 34개소) 등 음식물쓰레기 저감

●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

-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고('11년 16,445 → '14년 22,004억), 녹색 매장 지정 확대('11년 50 → '14년 253개소) 등 녹색소비 활성화
-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대상단지 확대('10년 38 → '15년 105개),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전문인력 양성('11~'15년, 781개 중소기업 대상)
- 환경R&D 추진('11년~'15년, 8,813억원),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(환경산업 수출액 '11년 4.9 → '13년 7.9조원)

● 에너지 이용의 효율 증대

-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(RPS) 시행('12년),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증가('10년 2.6 → '13년 3.52%)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기반 조성
-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, ICT활용 고효율기기(LED, 고효율인버터, 고효율냉동기) 보급 등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전환 유도
- 집단에너지(지역 냉·난방) 보급 확대('11년 2,178천호 → '14년 2,440천호)

3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

■ 종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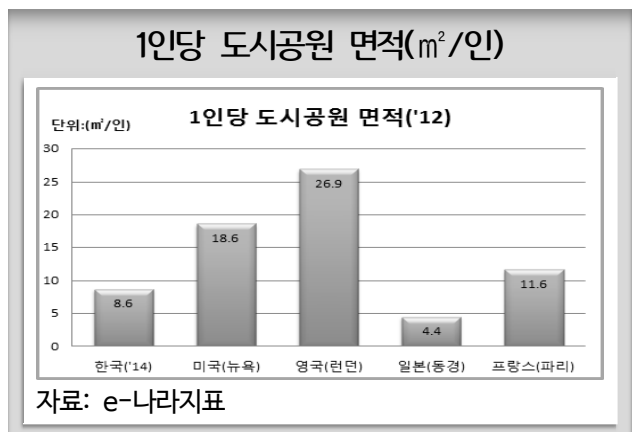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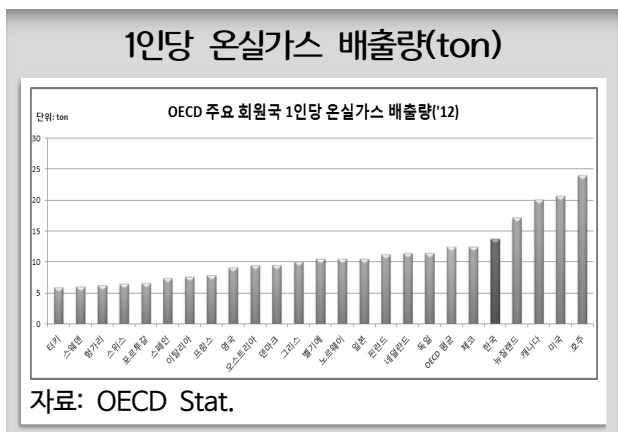
- 64개 지표 중 40개(62.5%) 개선, 24개(37.5%) 악화(*'10~'14 변화율 기준)

| | 계 | 환경분야 | 사회분야 | 경제분야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개 선(개, %) | 40 (62.5) | 10 (43.5) | 16 (76.2) | 14 (70.0) |
| 악 화(개, %) | 24 (37.5) | 13 (56.5) | 5 (23.8) | 6 (30.0) |
| 총 계(개, %) | 64 (100) | 23 (100) | 21 (100) | 20 (100) |

* 77개 중 중립지표 11개(개선·악화 판단 불가) 및 평가불가 2개(통계미비) 제외

■ 환경분야

- 타 분야 대비 환경분야 악화지표가 많음
 - 온실가스 및 농업 분야(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, 식량자급률, 화학비료 사용량, 농약 사용량) 관련 지표가 대체로 악화
 - 수도권 인구 집중도, 연안 오염도, 1인당 물소비량 등의 지표도 악화 추세
- 자원부유국 제외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최상위권,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좁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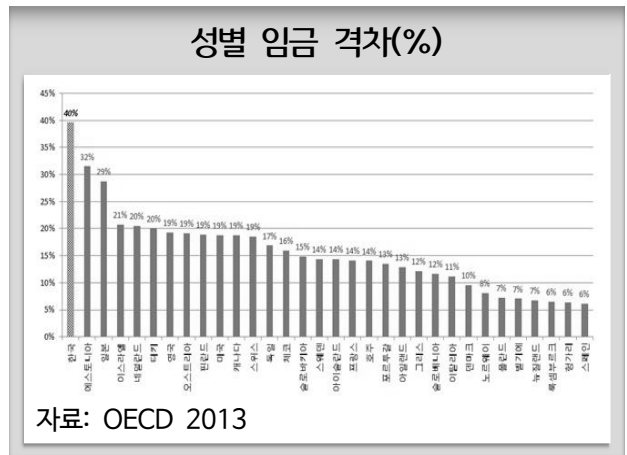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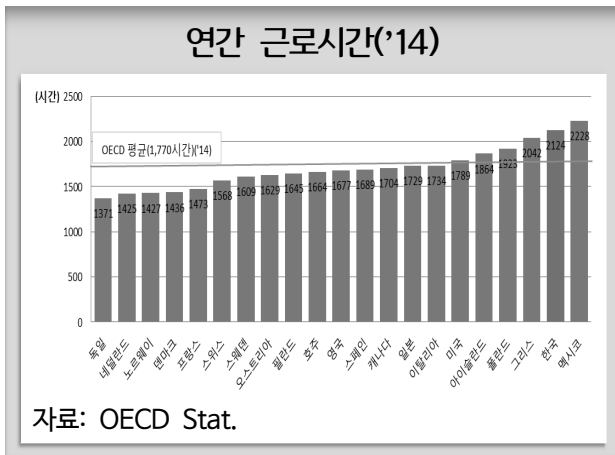
■ 사회분야

- 빈곤, 남녀평등, 수명/사망, 교육 항목의 지표를 중심으로 전반적 개선 추세 (사회분야 21개 지표 중 16개(76%)가 개선)

-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,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,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, 범죄발생률 등은 악화* 추세

* 비정규직 임금 비율('10년 53.3%→'14년 48.4%),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('10년 56.7%→'13년 54.3%),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('10년 4.3%→'14년 4.7%), 범죄발생률 ('10년 10만명당 1,901건→'13년 2,106건)

- 근로시간, 양성평등 관련 지표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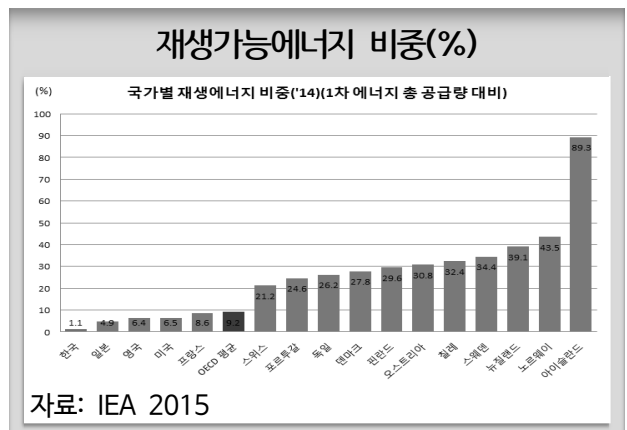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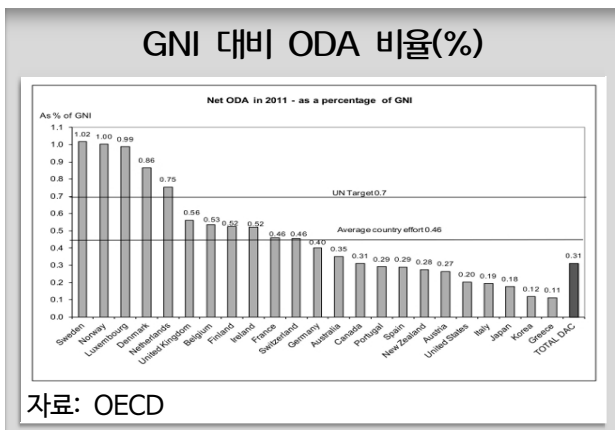


■ 경제분야

- 경제성장, 교통, 정보화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보이는 지표가 많지만, 질적 측면에서 취약(경제성장률, 투자 등)

※ GDP 대비 순투자율 : '10년 32.1% → '14년 29.0%

- 개도국 지원, 신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으나, OECD 국가 평균과 비교시 저조



■ 분야별 지표 변화 추이

가. 환경 분야

| 영역 | 항목 | 지표 | 2010년 | 2012년 | 2014년 | 평가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대기 | 1-1. 기후변화 | 26) 온실가스 배출량(Mt CO ₂ /yr) | 653.1 | 680.6('11) | 694.5('13) | -- |
| | | 27)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(tCO ₂ /인) | 13.2 | 13.7('11) | 13.8('13) | -- |
| | | 28)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(tCO ₂ /10억원, '05년 실질GDP) | 625.7 | 629.0('11) | 612.0('13) | + |
| | 1-2. 오존층 | 29)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(HCFCs; 톤) | 27,823 | 27,888 | 27,843('13) | - |
| 1-3. 대기질 | 30)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(환경기준 초과횟수/측정지점수) | 서울 : 90 부산 : 44 대구 : 94 인천 : 91 광주 : 48 대전 : 60 울산 : 47 | 서울 : 65 부산 : 50 대구 : 68 인천 : 71 광주 : 40 대전 : 57 울산 : 47 | 서울 : 182 부산 : 56 대구 : 103 인천 : 101 광주 : 77 대전 : 94 울산 : 74 | -- | |
| 2. 토지 | 2-1. 농업 | 31) 농지면적 비율 (가구당 농지면적, ha/호) | 1.46 | 1.50 | 1.50 | + |
| | | 32)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(%) | 12.0 | 9.6 | 4.6 | -- |
| | | 33) 식량자급률(사료용 포함, %) | 27.6 | 22.8 | 24.0 | -- |
| | | 34) 화학비료 사용량(kg/ha) | 233 | 267 | 258 | -- |
| | | 35) 농약 사용량(kg/ha) | 11.2 | 9.9 | 11.3 | - |
| | 2-2. 산림 | 36) 산림지역 비율(%) | 63.7 | 63.28 | 63.24 | - |
| | | 37) 1인당 도시공원 면적(m ² /인) | 8.4 | 8.9 | 8.6 | + |
| | | 38) 목재 벌채 정도(%) | 8.40 | 5.15 | 3.0 | 중립 |
| | 2-3. 도시화 | 39) 도시화율(%) | 90.9 | 91.0 | 91.7 | 중립 |
| | | 40) 수도권 인구 집중도(%) | 49.5 | 49.6 | 49.7 | - |
| 3. 해양/연안 | 3-1. 연안지역 | 41) 연안오염도(mg COD/L) | 동해 0.75 남해 1.03 서해 1.26 | 동해 0.71 남해 1.05 서해 1.54 | 동해 1.07 남해 1.17 서해 1.49 | -- |
| | | 42) 폐기물 해양 투기량(천m ³) | 4,478 | 2,310 | 491 | ++ |
| | | 43) 갯벌 면적 증감(km ²) | 2,489.4 ('08) | . | 2,487.2 ('13) | - |
| | 3-2. 어업 | 44) 수산자원량(만 톤) | 850 | . | 860('13) | + |
| | | 45) 양식어업량(천톤) | 1,355 | 1,489 | 1,547 | ++ |
| 4. 담수 | 4-1. 수량 | 46) 취수율(%) | . | . | . | 통계미비 |
| | | 47) 1인당 1일 물소비량(L/인/일) | 277 | 278 | 282('13) | - |
| | 4-2. 수질 | 48) 4대강 수질오염도(mg/L) | 팔당 1.2 물금 2.4 대청 1.0 주암 1.0 | 팔당 1.1 물금 2.4 대청 1.0 주암 0.8 | 팔당 1.1 물금 2.3 대청 0.9 주암 0.7 | ++ |
| | | 49) 하수도 보급률(%) | 90.1 | 91.6 | 92.1('13) | + |
| | | 50) 자연보호지역비율(%) | 11.55 | 11.66 | 12.6 | ++ |
| 5. 생물 다양성 | 5-1. 생태계 | 51) 국가생물종 수(종) | 33,253 | 39,150 | 42,756 | ++ |
| | | 52) 멸종위기종 수(종) | 221 | 246 | 246 | 중립 |

※ 는 악화, ++는 3% 이상 개선, --는 3% 이상 악화

나. 사회분야

| 영역 | 항목 | 지표 | 2010년 | 2012년 | 2014년 | 평가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|
| 1. 형평성 | 1-1. 빈곤 | 01) 빈곤인구비율(%) | 12.5 | 12.2 | 11.0 | ++ |
| | | 02)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| 0.310 | 0.307 | 0.302 | + |
| | | 03) 실업률(%) | 3.7 | 3.2 | 3.5 | ++ |
| | 1-2. 노동 | 04) 근로시간(시간/월) | 184.7 | 179.9 | 177 | + |
| | | 05)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(%) | 53.3 | 52.5 | 48.4 | -- |
| | 1-3. 남녀평등 | 06)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(%) | 62.6 | 64.4 | 63.1 | + |
| | | 07) 여성경제활동 참가율(%) | 54.5 | 55.2 | 57.0 | ++ |
| 2. 건강 | 2-1. 영양상태 | 08) 유소년 영양 상태(%) | 부족 6.47 과잉 3.20 | 부족 8.07 과잉 4.00 | 부족 4.73 과잉 7.77 ('13) | -- |
| | 2-2. 사망률 | 09) 영아 사망률(명/출생아 천명) | 3.2 | 2.9 | 3.0 | ++ |
| | 2-3. 수명 | 10) 기대여명(세) | 80.79 | 81.44 | 82.40 | + |
| | 2-4. 식수 | 11)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(%) | 56.1 | 62.2 | 65.9('13) | ++ |
| | 2-5. 건강관리 | 12)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(%) | 56.7 | 54.9 | 54.3('13) | -- |
| | | 13) 사회복지지출(%) | 9.23 | 10.51 | . | ++ |
| | | 14)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(%) | . | BCG 99.7 B형간염 99.0 백일해 93.9 폴리오 98.8 홍역 99.4 | BCG 99.8 B형간염 99.4 백일해 96.8 폴리오 99.4 홍역 99.6 | + |
| 3. 교육 | 3-1. 교육수준 | 15) 중등학교 순졸업률(%) | 94.6 | 95.0 | 95.1 | + |
| | | 16)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(명) | 26.6 | 24.3 | 22.8 | ++ |
| | | 17) 공교육비 지출(%) | 7.6 | 7.6 ('11) | . | 통계미비 |
| 4. 주택 | 4-1. 생활환경 | 18)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(%) | 10.6 | 7.2 | 5.3 | ++ |
| | | 19) 주택 수(인구 1천 명당 (호/1,000명)) | 363.8 | 371.0 | 385.3 | ++ |
| | | 20)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(배) | 4.3 | 5.1 | 4.7 | -- |
| 5. 재해·안전 | 5-1. 범죄, 재해 | 21) 범죄발생률(건/10만 명) | 1,901 | 2,077 | 2,106('13) | -- |
| | | 22) 자연재해 피해(명/억 원) | 14 /4,267 | 16 /10,892 | 2 /1,800 | ++ |
| 6. 인구 | 6-1. 인구변화 | 23) 인구 증가율(%) | 0.46 | 0.45 | 0.41 | 중립 |
| | | 24) 인구 밀도(명/km ²) | 494 | 499 | 503 | 중립 |
| | | 25) 고령인구비율(%) | 11.0 | 11.8 | 12.7 | 중립 |

다. 경제 분야

| 영역 | 항목 | 지표 | 2010년 | 2012년 | 2014년 | 평가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1. 경제 구조 | 1-1. 경제이행 | 53) 국내총생산(억 US\$, 명목) | 10,943 | 12,224 | 14,100 | ++ |
| | | 54) 1인당 GDP(US\$) | 22,147.4 | 22,445.1 | 27,963.6 | ++ |
| | | 55) 경제 성장률(%) | 6.5 | 2.3 | 3.3 | 중립 |
| | | 56) GDP 대비 순 투자율(%) | 32.1 | 30.8 | 29.0 | -- |
| | | 57) 소비자 물가지수 | 100 | 106.3 | 109 | 중립 |
| | 1-2. 무역 | 58) 무역수지(백만 US\$) | 41,172 | 28,285 | 47,150 | 중립 |
| | 1-3. 재정상태 | 59) 조세부담률(%) | 19.3 | 20.2 | 17.8 | 중립 |
| | | 60)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(%) | 32.9 | 33.5 | 30.2 | ++ |
| | 1-4. 대외원조 | 61) GNI대비 공적개발원조(ODA) 비율(%) | 0.12 | 0.14 | 0.13 | ++ |
| | 2. 소비/생산 | 2-1. 물질소비 | 62) 자원생산성(원/kg) | 1,305 | 1,329 | 1,382 |
| 2-2. 에너지 사용 | | 63) 1인당 에너지 소비량(TOE/인) | 5.34 | 5.57 | 5.61 | -- |
| | | 64) 총에너지 공급량(1,000 TOE) | 263,805 | 278,698 | 282,938 | 중립 |
| | | 65)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(%) | 2.60 | 3.18 | 4.08 | ++ |
| | | 66) 에너지 원단위 (TOE/백만 원, '05년 기준) | 0.253 | 0.252 | 0.247 ('13) | + |
| 2-3. 폐기물 관리 | | 67)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(ton/일) | 365,154 | 382,009 | 382,081 ('13) | -- |
| | | 68) 지정폐기물 발생량(ton/일) | 9,488 | 12,501 | 12,417 ('13) | -- |
| | | 69)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(200L 환산드럼) | 2,419 | 843 | 1,255 | ++ |
| | | 70) 폐기물 재활용률(%) | 83.4 | 84.4 | 84.0 ('13) | + |
| 2-4. 교통 | | 71) 대중교통 수송분담률(%) | 41.9 | 41.5 | 42.0 ('13) | + |
| | | 72) 자전거 도로 총 연장(km) | 13,036 | 17,066 | 19,717 | ++ |
| | | 73) 자동차 사고 건수 (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) | 2.6 | 2.4 | 2.0 | ++ |
| 3. 정보화 등 | | 3-1. 정보접근 | 74)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(천 명, %) | 17,224 | 18,253 | 19,199 |
| | 75) PC보유 가구비율(%) | | 81.8 | 82.3 | 78.2 | -- |
| | 3-2. 정보 인프라 | 76)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(건) | 3,020 | 2,933 | 2,968 ('13) | - |
| | 3-3. 과학기술 | 77) GDP 대비 R&D 지출 비율(%) | 3.47 | 4.03 | 4.15 ('13) | ++ |

■ 한국·OECD 회원국 평균 비교

| 구분 |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| 한국 | OECD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사회 | 01) 빈곤인구 비율 | 11.0%('14) | 11.2%('12) |
| | 02)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| 0.302('14) | 0.32('12) |
| | 03) 실업률 | 3.5%('14) | 7.3%('14) |
| | 04) 월평균 근로시간 | 177시간('14) | 147.5시간('14) |
| | 06)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| 63.1%('14) | 84.5%('13) |
| | 07)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| 57.0%('14) | 62.6%('13) |
| | 09) 영아사망률 | 3.1명/천명('14) | 4.1명/천명('13) |
| | 10) 기대여명 | 82.4세('14) | 80.5세('13) |
| | 13)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| 10.5%('12) | 21.8%('12) |
| | 17)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| 7.6%('11) | 6.1%('11) |
| | 25) 고령인구비율 | 12.7%('14) | 15.1%('12) |
| 환경 | 35) 농약사용량 | 11.3 kg/ha('14) | 0.7 kg/ha('08) |
| | 50) 자연보호지역비율 | 12.6%('14) | 21.6%('14) |
| 경제 | 54) 1인당 GDP(명목, PPP) | 33,395\$('14) | 39,230\$('14) |
| | 56) GDP 대비 순 투자율 | 29.0%('14) | 19.44%('12) |
| | 58) 무역수지 | 471.5억\$('14) | -333.4억\$('12) |
| | 61) GNI대비 ODA 비율 | 0.13%('14) | 0.30%('14) |
| | 65) 재생에너지(국제기준) 공급비중 | 1.1%('14) | 9.2%('14) |
| | 66) 에너지 원단위 | 0.25toe/천\$('13) | 0.14toe/천\$('12) |
| | 77) GDP 대비 R&D 지출비율 | 4.15%('13) | 2.40%('12) |

※ 는 OECD 평균 대비 저조한 분야

4 시사점

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범위 확대 필요

- 제2차 기본계획 대부분의 이행과제들이 환경 분야에 집중
 - 25개 이행과제 중 非환경분야 과제는 5개(3-1, 3-2, 3-3, 3-5, 4-4)
- 국제사회 공통의 정책목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에 따라 기본계획 포괄 범위의 확대 필요
 - 건강·웰빙(SDG 3), 교육(SDG 4), 양성평등(SDG 5), 불평등(SDG 10), 도시공간(SDG 11), 포용적 성장(SDG 8) 등

■ 추세 변화와 국제사회 위상을 모두 고려한 입체적 평가 필요

-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지표(과제)의 경우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
 - 에너지원단위, 재생에너지, 양성평등(여성경제활동참가율,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), 개도국 지원(GNI 대비 ODA 비율) 등
-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서 더 이상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과제의 경우 조정 필요
 - 기초건강(기대여명, 영아사망률), 기본교육, 정보접근성(초고속인터넷 보급, PC보유 가구) 등

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반영 필요

- (환경) 선진적 오염배출 관리체계, 건강·웰빙에 대한 관심, 생태계서비스 개념 확산 등
- (사회) 사회적 구성원의 다양성, 에너지복지, 환경성질환, 환경오염 피해구제, 지하공간 안전 등 사회 안전, 기후변화 적응 등
- (경제) 혁신, 안전한 일자리, 청년일자리 확보, 사회적 기업 등

IV

제3차 기본계획 개요

- 1 구성 및 특징
- 2 비전 체계도

mev

1 구성 및 특징

■ 구성

- 환경·사회·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, 사회, 경제, 국제 분야 4대 목표, 부문별 14개 전략, 50개 이행과제로 구성

■ 수립방향

- UN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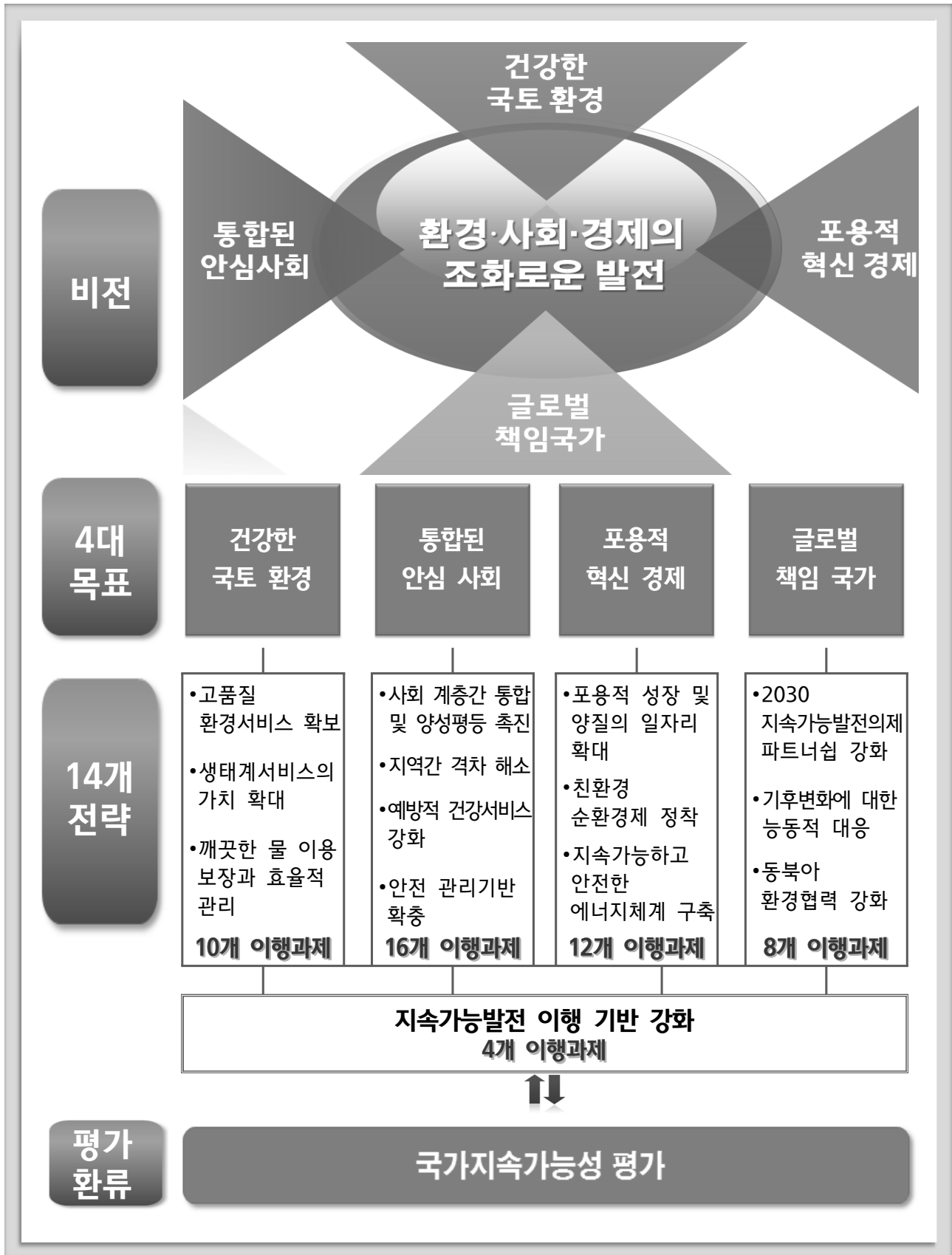
※ SDGs 국내외 이행 체계 구축은 글로벌 지표('16.2월 유엔통계위원회 확정), 이행 검토 체제('16.7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논의) 등을 고려하여 별도 추진

-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사용, 신재생에너지 비중, 비정규직 차별, 양성평등, 재해·안전 등 **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** 취약 분야 반영
- 양극화, 에너지, 지역불균형, 일자리, 취약한 거버넌스, 저출산 고령화,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전문가 진단(포럼, 자문)에 따른 **위험요인** 반영

■ 2차 기본계획 대비 특징

- **(환경)** 화학물질 사전관리 및 피해구제, 생태계 서비스기반 국토환경관리,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,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,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 강화
- **(사회)** 양성평등, 장애인·다문화가족 지원, 사회안전 확충, 예방적 건강관리 등 정책 강화
- **(경제)** 일자리 창출,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성, 공정거래 기반 확충 등 정책 강화
- **(종합)** 환경-사회-경제 각 부문간 **통합성 제고정책 강화**

2 비전 체계도





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와 제3차 기본계획 전략 비교

| |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(SDGs)의 17개 목표 | 제3차 기본계획 14개 전략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빈곤 | 2-1.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|
| 2 | 식량/농업 | 2-2. 지역간 격차 해소 2-3.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|
| 3 | 건강/웰빙 | 2-3.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|
| 4 | 교육 | 2-1.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|
| 5 | 양성평등 | |
| 6 | 물 | 1-3.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|
| 7 | 에너지 | 3-3.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|
| 8 | 경제성장/일자리 | 3-1.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|
| 9 | 산업화/혁신 | |
| 10 | 불평등 | 2-1.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|
| 11 | 도시/공간 | 1-1.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-4. 안전 관리 기반 확충 |
| 12 | 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 | 3-2.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|
| 13 | 기후변화 | 4-2.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|
| 14 | 해양생태/자원 | 1-2.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확대 |
| 15 | 육상생태/자원 | |
| 16 | 정의 |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|
| 17 | 글로벌 파트너십 | 4-1.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4-3.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|



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

- 1 건강한 국토 환경
- 2 통합된 안심 사회
- 3 포용적 혁신 경제
- 4 글로벌 책임 국가
- 5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



1 건강한 국토 환경

(1) 중점 추진 방향

| | | |
|--|---|---|
| 건강위해 방지를 위한 환경서비스 강화 | 자연자원 보전·이용의 선순환 정착 | 환경관리 과학화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해물질 관리 • 미세먼지 저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계 보호 • 생태계 위협요인 저감 • 지속가능한 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합환경관리제 • 국토-환경계획 연동제 • 오염총량제 |

(2) 전략 및 이행과제

| 전략(3개) | 이행과제(10개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-1.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| 1-1-① 깨끗한 대기질 확보 |
| | 1-1-② 도시 생태공간 확충 |
| | 1-1-③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|
| | 1-1-④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|
| 1-2.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| 1-2-①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|
| | 1-2-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위협요인 저감 |
| | 1-2-③ 연안·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|
| 1-3.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| 1-3-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|
| | 1-3-②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|
| | 1-3-③ 물순환 체계 강화 |

(3) 주요 성과지표

| 주요지표 | 2015년 | 2020년 | 2035년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(연평균 $\mu\text{g}/\text{m}^3$) | 25 | 20 | 15 |
|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 (만 m^2) | 109 | 344 | 1,034 |
| 자연보호지역 비율(%) | 12.6('14) | 17.0 | 20.0 |
| 국가 자생생물 목록화 수 | 42,756('14) | 60,000 | 85,000 |
| 깨끗한 물 확보 수준 | 2등급 이상 79.8%('14) | 전국상수원 1등급 이상 | 도심하천 2등급 이상 |

1-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

1-1-① 깨끗한 대기질 확보

소관부처 **환경부**

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최소화

- 위해성에 입각하여 미세먼지(PM10, PM2.5)의 대기환경기준을 단계적 강화 (현 WHO 목표 2단계 수준에서 '35년 3단계 수준*)

* WHO PM2.5 목표 2단계($25\mu\text{g}/\text{m}^3$), 목표3단계($15\mu\text{g}/\text{m}^3$), 권고기준($10\mu\text{g}/\text{m}^3$)

-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 및 위해성 경보체계 구축
 - 미세먼지 예보 권역 세분화 및 예보모델 개선 등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
 - 황사 중 중금속 성분 측정, 건강 영향조사 등 위해성 경보체계 구축

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제작차 기준 강화

- 저탄소차 및 온실가스 무배출차 보급 확대
 - 행정·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의무율 상향(30→50%) 및 대상기관을 렌트카사, 민간 대형사업장까지 확대
 - * ~'20년 친환경차 108만대(전기차 20만대, 하이브리드·수소차 88만대) 보급, ~'30년 전기차 100만대 보급 목표(누계)
 -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를 전기차, 수소연료전기차 등 무배출차(Zero Emission Vehicle) 판매의무제로 전환
 - CNG버스를 CNG하이브리드버스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고, 전기차 공공 충전망 확충 및 수소충전인프라 구축

-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
 - (휘발유·가스차) 제작사별 평균배출량(FAS) 측정항목에 현행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기준 강화
 - (경유차)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(3.5톤 이상 대형 '16.1~, 3.5톤 이하 중·소형 '17.9~) , 미세입자개수 규제 도입

-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강화 및 제작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의무화

■ 지역·업종특성을 고려한 대기유해물질관리 강화

- HAPs(유해대기오염물질) 비산배출 저감제도 적용 업종 단계적 강화 및 사업장 기술지원 강화
 - 원유정제처리업, 고무·플라스틱 제조업 등 20개 업종으로 확대('16~)
 - 확대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업장 기술지원 강화
 -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물질에 대해 단계적 배출허용기준 설정('16~)
- 수도권 배출허용총량제 적용 대상사업장 확대 및 기준 강화
 - 기존 1~2종에서 연간 NO_x, SO_x 각각 4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3종 사업장까지 대상 확대('16~)
 - *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NO_x 196톤, SO_x 191톤 추가 총량관리 예상
 - 오염 우심지역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제 확대 적용 검토
-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기준이 되는 현행 최적방지시설(BACT) 기준보다 50% 정도 강화된 기준 적용('18~)

■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강화

- VOCs 배출규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장 시설관리 강화
 - VOCs 배출규제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 적용('17~)
 - 인쇄업,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VOCs 배출시설로 추가·관리('19~)
 - 세탁소 관련 친환경 제품(용제·세탁기기) 기준을 설정하고 환경마크 인증제를 시행('18~)
-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및 NOx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판매 허용
-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강화로 생활속 악취의 획기적 저감
 -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확대 시행('17~)
 -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전기차 보급대수 | 5천 | 200천 | 전기차 보급대수(누적) |
|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(연평균, $\mu\text{g}/\text{m}^3$) | 25 | 20 |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|

1-1-② 도시 생태공간 확충

소관부처 환경부, 산림청

■ 도심속 자연생태공간 확대

- 파편화 되어있던 도시서식처의 복원을 위해 자연복원면적 확보제 도입 검토
 -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과거 도시화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지역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자연 복원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
 - 재생도시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여 도심속 생태공간 확충
- 도시내 훼손·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습지·숲 등 다양한 생태공간을 조성,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생태휴식공간으로 제공
 - 녹지가 부족한 대도시 등의 5만㎡ 이상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생태거점으로 자연마당 조성
 - 도시 주거생활권의 유휴 자투리땅, 노후놀이터 등을 활용하여 자연과 생태를 접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 조성
 - 기타 유휴공간, 폐도, 옥상 등 활용 가능한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생태 공간으로 조성

■ 인문·예술·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친수공간 조성

- 생태하천복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열린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심하천 랜드마크* 조성
 - * 해외사례 : 미국 뉴욕 주 허드슨 강,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 마인강, 프랑스 파리 시 세느강 등
- 물 문화·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험의 장소로 주민 들을 위한 여가관광의 장소로 조성

■ 도시 숲 조성 및 연결성 강화

- 도시열섬 완화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숲 등 녹색네트워크 구축
 - 녹색쌈지숲, 생활환경숲, 산림공원 등 도시숲(258개소)과 명상숲, 전통 마을숲 등을 조성하고 이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가로수 조성확대

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실적 (’15) | 목표 (’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면적(m ²) | 109 (’13~’15년 누계) | 344 | 생태공간(자연마당, 생태놀이터 등) 조성면적 누계 |
|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(m ²) | 8.32 | 8.50 | 생활권도시림면적/도시지역 인구 |

1-1-③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

소관부처 환경부, 국토부, 산림청

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

- 국토-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체계 정비
 - 국가·지자체의 관련계획을 연계 수립하고 실천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-환경계획 연동제 도입*
 - * 국토기본법, 환경정책기본법 개정
 -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적용범위,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「환경부-국토부 공동지침」 마련
 - 공간성을 강화하도록 「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」을 개정하여 국토·개발 계획 활용도 제고
-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·운영 및 정밀도 개선
 - 국토 환경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보전가치 높은 생태공간 확보로 국토환경의 건강성 유지
 - 환경정보와 국토공간정보의 호환성 향상 및 공유체계 마련

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

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및 제도 개선
 - 국토계획,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환경 영향이 큰 주요 핵심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포함 추진
 - 평가대상계획 추가 또는 삭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Screening, Tiering 절차 도입

-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환류 강화
 -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사후관리대상사업 DB 구축 및 자료 공개, 각종 보고서식 표준화 추진 등
 -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검토업무 매뉴얼 마련·운영 및 작성 가이드라인 지속적인 보완
-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
 - 기후변화에 취약한 평가대상 선정, 사업별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시 등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기법 마련
-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 검토
 - 개발사업시 환경훼손 최소화와 훼손지 복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침해 조정제도 도입 검토

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

- 산지이용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
 - 산지의 원형과 경관을 고려한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고도화
 -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에 부합되는 계획적 산지 이용
 - 산림경관·산지유역 유형을 고려한 계획적 산지관리를 실현하고 산지의 합리적 보전·이용을 위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추진
- *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통한 산지구분도 갱신·고시 및 산지정보시스템 반영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국토계획평가 실적(건) | 6 | 8 | 국토계획평가 시행 건수 |
| 산림지역비율(%) | 64 | 64 | 산림면적/국토면적×100 |

1-1-④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

소관부처 환경부

■ 사업장 환경관리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

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제정, 대규모 사업장(수질 대기 1, 2종)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('17~'21)
 - 매체별 분산된 허가를 통합·간소화하고, 오염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활용, 사업장을 맞춤형*으로 관리
 - 기존 사업장(4년 유예) 및 소규모 사업장 등에도 통합관리 적용 확대

| 구분 \ 종류 | 현행 환경관리방식 | 통합환경관리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인허가 | 6개 법령, 10개 인허가 | 1개 통합허가 |
| 배출기준 | 획일적 배출기준 | 사업장별 맞춤형 기준 |
| 이행점검 | 일회성·단속성 점검 | 주기적·상담형 진단 |

* 제도 도입시 행정비용 절감(10년간 655억원), 환경설비 투자증대(연 3,300억원) 등 기대

-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(BAT)* 마련, 기술 발전 등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개선·보완('14~'10, 기준서 작성, '21~, 검토·수정·보완)

* 최적가용기법(Best Available Techniques) : 원료투입부터 오염배출의 순과정에서 시설·기계·기구 등 각 부분별로 적용되는 경제성 있는 우수한 환경관리기법군

- 사업장 단위 배출영향분석 방법론 마련, 지역별 환경질 목표수준 정비,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통합환경관리 기술기반 마련

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신규 구축 및 인프라 도입 |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시범운영 및 기능보완 |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시작 및 확산 | | 통합환경 허가시스템 안정화 |
| 법률 입법 완료 하위법령 설계 | 하위법령 입법 완료 | 법률 시행(2개 업종) | 법률 시행(3개 업종) | 법률 시행(4개 업종) |
| 통합허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| | 원활한 통합허가 절차 지원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,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 및 제공 | | |

■ 폐기물 수거·처리시스템 개선

- 폐기물 흠날림, 낙하 방지 등 환경개선 위해 수집·운반차량 선진화(밀폐화), 재활용 선별장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
- 단독주택, 농어촌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거점수거시설(재활용 동네마당) 시범설치 추진
- 유해폐기물 등 추적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안전관리
 - 유해폐기물의 취급·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재난 사고를 IOT기술을 활용, 실시간 관리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(관리시스템)
 - 의료폐기물을 담아 운반하는 전용용기의 제조업 등록제 신설 및 수집·운반 및 처리업자의 격리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단축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수 | 0 | 10 |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수 |
| 폐기물 매립률(%) | 9.6('13) | 5 | 폐기물 매립량/폐기물 발생량×100 |

1-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

1-2-①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

소관부처 환경부, 통일부, 해수부, 산림청

■ 국토생태축 연결성 확보

- 훼손된 생태우수지역의 복원으로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 강화
 - 한반도 핵심 생태축 50곳에 생태통로 설치(‘~20)
- 백두대간 훼손지역의 단계적 복원 및 생태적 관리강화
 - 훼손유형별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복원 및 경관 등 고려한 협력적 생태관리 추진
- DMZ의 한반도 생물 거점화 및 국제적 보호구역(UNESCO MAB 등) 지정 등 추진
 - DMZ 및 접경지역 생태계 조사,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, 접경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등 추진
- 하구역법 제정 등 도서·연안 자연환경 통합관리체계 확립 및 내실화
 - ‘하구역법’(가칭) 등 하구역 환경복원 및 관리 통합프로그램 추진
 - 유류오염 피해지역, 갯녹음 피해지역 해조류 서식지 조성 등 해양오염, 연안개발로 인한 훼손서식지 개선·복원

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

- 전국 수체의 건강성 목표 및 기준(등급)* 마련
 - * 최상(high), 양호(good), 보통(moderate), 불량(poor), 최하 등급(bad)
 -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 확대* 및 양호(B) 이상 등급 목표** 달성
 - * 하천 수생태계 조사·평가지점 확대(960개 → 약 3,000개) 및 조사주기 설정(3년)

-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

- 훼손이 심각한 경우 지자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의무화하고, 여러 지자체가 포함된 대하천 및 지류는 환경부가 직접 복원
-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호·복원 대책 수립 및 보호구역 지정
- 수생태계 분야 전문 조사·연구 조직 신설로 과학적 연구 기반 강화

- 수생태계 종·형적 연결성 확보

- 회유성 어종이 본·지류의 상류까지 이동하도록 이동경로 조사 및 어도개선 등을 통해 종적연결성 확보
- 직강화된 하천 대상 옛 물길터 복원 추진(본류와 지류·지천의 생태적 연계) 등을 통해 하천과 하천 좌·우안의 생태계 온전성 극대화

■ **건강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**

-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·운영관리 강화

- 육상·담수 보호지역 통합관리 등을 위해 ‘(가칭)국가 보호지역 운영협의회’ 구축·운영 및 보호지역 D/B 구축 등

- 생태계 대표성 등에 기반하여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

-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국내 보호지역(습지, 생태경관, 특정도서, 지질 공원 등)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의 지역유형을 개발
- 생태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*에 대해 국립공원 추가지정 확대

* 태백산, 금정산, 팔공산, 순천만, 무안·신안갯벌 등

- 산림에서 생활환경·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,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·증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확대 지정

■ 생태계서비스 평가 관리

- 생태의 조절(대기질, 수질 등), 공급(생산성), 부양(서식지 훼손정도 등 생태계 건강성) 및 문화(생태관광) 등 4개 분류(55개 지표)에 따라 생태계서비스(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) 평가 추진
-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,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 방안 검토
 -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부·지자체 계획 및 개발전략에 통합
- 생태계서비스 활용·증진을 위한 기반연구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|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핵심생태축 복원율(%) | 30.9 | 83.3 | $(\text{면적사업실적}/\text{면적사업목표} \times 0.8 + \text{개소사업실적}/\text{개소사업목표} \times 0.2) \times 100$ |
| 생태하천 복원 구간(km) | 1,149 | 1,330 |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(누계) |
| 자연보호지역비율(%) | 12.6 | 17 | 자연환경보호지역/국토면적*100 |
| 산림보호구역(천ha) | 446 | 455 | 산림보호구역 누계 |

1-2-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

소관부처 환경부, 농식품부, 산림청

■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체계 마련

- 나고야의정서 발효('14.10)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 사전승인과 이익공유,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신고 등 국내 이행체계 마련
 - ※ 「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」제정
- 자생생물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·발굴·연구 확대
 -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, 발굴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제고하고, 매년 신종·미기록종 1,000종 이상 발굴 및 목록화
 - * '16~'20년까지 신종·미기록종 5,000종 이상 발굴하여, 종목록을 '14년말 기준 42,756종에서 '20년 말까지 60,000종·'35년까지 85,000 종으로 확대
 - 도서·연안 생물자원 조사·발굴·관리 및 전시·교육·체험을 위한 생물자원관 건립 확대
- 정부-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역량 강화
 - 대표협회(바이오, 제약 등)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물다양성보전 활동 계획·추진, 주요사례 공유·확산, 해외동향 대응 등 논의
 - ABS 포럼, 뉴스레터, Help Desk, 기업 방문 컨설팅 등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산업계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지원
- 야생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관리기반 구축
 - 자생 생물자원을 통한 생물소재 국산화, 해외 유용생물자원(표본, 유전자원 및 유용물질 탐색시료) 37.2만점 수집 및 확보(~'20년)

- 자생 생물자원의 증식·배양·보전기술 개발
 - 토양오염 정화용(미생물), 토질 개량용(지렁이 등), 수질정화용, 폐기물 자원화용 각종 생물자원 소재의 국산화 추진
 - 생물자원의 증식·복원 기술개발로 상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적 활용도대 마련

■ 야생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 기반 강화

- 자생생물 실물자원 정보제공 및 분양서비스 확대
 - 민간 부문의 자생생물 실물자원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·학·연 연구 개발 능력 확대
 - * 생물다양성 관리기관(야생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39개소 지정('14년)) 운영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
 - ** '20년까지 60개 기관의 실물자원 정보 DB화 추진
- 멸종위기생물 보호시스템 정비, 증식복원·보전 인프라 건립('16~)
 -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시 지정·해제 운영 체계 정비 및 증식·복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
 - 멸종위기종 증식·복원 계획수립, 원종확보, 증식연구, 사후관리·평가 등을 총괄 관리하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·운영
 - 국가 생물주원 확보를 위한 도서·연안생물, 육상생물 등 권역별로 특화된 국립호남권·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·운영('18~)
- 산림습원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
 -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
 - *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'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'으로 지정

- 희귀·특산식물의 현지의 보전 강화를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
 - 2020년까지 위협식물종의 75%를 현지의 보전함으로써 세계식물보전 전략(GSPC)의 의무사항을 이행
 - * 지역별 공립수목원을 활용하여 희귀·특산식물 전시·보존원 조성

■ 생물다양성 유지·증진 및 위협요인 저감

- 생태계의 기후변화 위협요인 평가 및 적응방안 마련
 -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다양성 및 국가 생태계 전반의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과학적 평가 체계 수립·운영
 - * 5년 단위 주기적인 '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' 사업을 통한 국가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전략 수립 지원
 - 환경변화의 복합적 요인에 대한 생물의 반응현상 연구를 통하여 기후 변화에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 및 적응방안 마련
 - * 환경변화 요인 : 온실기체, 고온, 저온 고염, 건조, 병원균 등
- 기후변화 취약 종 보전관리
 - 기후변화 취약종(양서파충류 및 거미류 등)을 대상으로 잠재적 생육지 변동 예측 분석, 생태계 유형별 생물종 보호전략, 우선적용 대상지 선정 및 관리 강화, 연결성 확보 계획 추진
 -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(100종)의 개화·개엽시기 모니터링 및 고산지역·풍혈지 등 특수지역의 취약 식물종 생육환경 조사·분석
 -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·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·증식·보존 및 현지(서식지) 내 복원·적응사업 실행
- 외래생물 생태계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강화
 -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관리대상 외래종을 포괄적으로 확대지정* 하고 생태계 위해 방지 강화
 - * 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 지정 100대 악성외래종, 글로벌 침입종 DB(GISD) 등

- '18년까지 전국 확산 또는 생태계피해가 높은 외래생물 30종을 선정하여 정밀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
- 주요 유입경로 조사, 3년단위 외래생물 전국 실태조사(3개권역), 생태계 교란 생물(동물 6종, 식물 12종) 전국 모니터링 추진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에 대한 효과적 관리로 안전성 확보
 - 위해성 심사 기법 개선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강화

■ 산림자원의 가치제고

- 산림지속성지수 산출 및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를 통해 국민인식 제고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
- 침엽수 인공림을 우량 활엽수림으로 유도하고 댐유역 숲가꾸기 추진을 통해 수원함양 기능 강화
 - 활엽수 조림 매년 1만ha이상, 전국 11개 댐유역 산림 숲가꾸기 추진
- 적지조림을 위한 맞춤형 조림지도 고도화 및 한국형산림인증제 도입
- 종자·묘목 생산시스템의 개선으로 우량종자·묘목생산 촉진
 - 우수 산림용 종자 공급을 위한 2세대 채종원 조성 및 양묘시설 현대화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('15) | 목표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국가 자생생물 목록화 수 | 42,756('14) | 60,000 | 한반도 자생생물 목록화 종수(누계) |
| 숲 가꾸기 면적(천ha) | 293('14) | 1,000 | 숲 가꾸기 면적('14년 이후 누계) |
| 위해우려종 지정 | 50 | 100 | 위해우려종 지정 수 |

1-2-③ 연안·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

소관부처 **해수부**

■ 연안·해양 오염원 관리 강화

- 환경관리해역(9개소)별 연안 유입 오염물질관리를 강화하고, 특별관리 해역에 대해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* 추진
 - * 마산만(제2차, '12~'16), 시화호(제1차, '13~'17), 부산연안(제1차, '15~'19)
-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('16.1.1~), 폐기물 해양배출 해역(3개소)에 대한 해양환경모니터링(저서생물, 퇴적물 등) 실시 등 폐기물 해양오염 예방
- 주요항의 오염퇴적물 정화복원* 하고,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**,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*** 추진
 - * 울산장생포항('15~'19), 진해행암만('15~'19), 부산다대포항('16~'19), 포항동빈내항('17~'18), 여수구항·포항구룡포항·울산온산항(잠정)
 - ** 해양침척쓰레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거쳐 관리해역 102개소 대상 연차별 사업계획(5개년) 수립
 - *** 전남 신안 1개소(296억원, '10~'16), 제주도 1개소(260억원, '16~'18)

■ 연안·해양 보호구역 확대

- 해양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·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랍사르 습지 등록 확대
 - 전국 해역(갯벌, 연안역, 근해, 하구, 무인도서 등)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지속 실시
 - 해양(생태계, 생물, 경관) 보호구역* 및 갯벌 습지보호지역**의 확대
 - * 해양 보호구역 : '10년 기준, 4개소에 향후 연 1개소씩, '20년까지 총 14개소
 - ** 갯벌 습지보호지역 : '10년 기준, 10개소에 연 1개소씩, '20년까지 총 20개소 확보

- 신규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 신청을 위한 정보 기록지(Ramsar Information Sheet) 작성 및 협의
- 훼손된 갯벌 복원 사업 추진
 - 우선복원 대상지를 선정하여 갯벌 복원사업을 진행하고, 단순복원에서 생태관광과 갯벌어업을 연계한 복합형 복원으로 확대

■ 해양수산생태계 건강성 유지·보전

-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물 보호 및 생물학적·화학적 위협요인 최소화 등 해양수산생태계 주요 요소별 체계적 관리 실시
 -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리계획 수립으로 서식현황 조사, 위협요소 관리, 증식·복원 및 국민의식 증진 등 보호종 관리 시행
 - 유해·교란생물의 생리·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, 전국단위 분포 및 이동 경로 예측·예보 시스템 구축 및 위해성평가 실시
 - 전국연안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(POPs) 조사 및 해양수산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(LMO) 안전관리 실시
- 국가적 차원의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·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기반 구축
 - 동·서·남해(제주포함) 권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현황, 서식지 등 기초조사, 지속적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이용 추진
 -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용물질·기능을 이용하여 신약, 신소재, 바이오 에너지 생산원천기술 및 산업화기술 개발

*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(R&D, '04~계속)

-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
 - 수산자원, 수질, 해양환경, 어업수단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·분석 실시
 -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설정하고, 생태환경 데이터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
-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
 -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의 해양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조사, 진단, 평가, 회수 및 복원 기술 개발
 - 적조·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의 조기탐지, 예보, 처리기술 및 제거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인적·물적 피해 최소화
 - 해양폐기물, 해양산성화* 등의 피해평가·복원기술 개발

* 대기 중 CO₂가 해수로 녹아들어 해수의 PH(약8.2, 약염기성)가 정상보다 낮아지는 현상

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계 혁신

- 어선 감척사업을 비롯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추진으로 연근해어업허가 관리 및 적정수준의 수산자원량 유지
 - 연근해 어선척수를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원남획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지정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
-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정책 확대 추진
 - TAC(총허용어획량제도) 참여 업종 및 어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 관리의 성과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TAC 활성화

- 자율관리어업을 자원관리 효과가 큰 전국 또는 품목 단위 공동체 및 대형 업종으로 확대
- 바다숲,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해역별 생태계 특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입체적 통합시스템 구축
- 주변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확대
 - 수산협력 강화 및 생산량 증대 도모
 - 주변국과 수산협력 강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 도모
 -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강화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연안오염도(ppm) | 1.13('14) | 1.09 | 동해/남해/서해 평균 COD 농도 |
| 연안·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비율 (국토면적대비)(%) | 1.5 | 10 | 국토면적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|

1-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

1-3-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

소관부처 환경부, 국토부

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·공급

-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확대로 안전한 물 생산·공급 실현
 - 녹조 상습 발생으로 독성물질 및 맛·냄새에 취약한 정수장에 우선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
 - 공급관리 감시·제어로 수돗물 수량 관리 강화
- 고도정수처리 미도입 시설은 염소 및 분말활성탄, 응집제 등 수처리제의 충분한 확보로 맛·냄새물질 적정처리
- “수돗물 안심확인제” 확대 시행 등 국민이 자신이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

■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

-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「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(13~17)」을 지속 추진하여 '17년까지 보급률 80% 달성(면지역)
 - * '15년 73% → '17년 80%
- 물복지 수준이 낮은 섬, 해안지역에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도서지역 용수공급 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('16.6)

■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인프라 강화

-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·공급과 보편적 물 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낙후지역 노후 상수도시설 단계적 정비 추진
 - 지방 상수도시설 노후도는 30% 이상(관로 30.6%, 정수장 58.8%) 깨끗하게 생산된 물이 안전하게 가정까지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
 - * ('13년 직접음용율/원인) 5.4%, 물탱크나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(30.8%)
 -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(2개소)을 거쳐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
-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, 기준미달 제품 등 불법·불량 수도용 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 및 행정처분 등 관리대책 추진
 - 수도꼭지류, 물탱크 등 위생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, 인증시 제품시험 면제 제품(수도계량기) 등에 대한 집중 조사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(%) | 65.9('13) | 80% | (농어촌 면지역 급수인구/농어촌 면지역 총인구)*100 |
| 물공급 안전율(%) | 86('13) | 93% | 생활용수 공급능력 / '25년 생활용수 수요 |
| 고도정수처리 시설 비율(%) | 22('13) | 60 | 고도정수처리 시설 / 전체 정수처리시설*100 |

1-3-②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

소관부처 환경부, 농식품부

■ 지류·지천 중심으로 수질개선

- 오염지류 또는 녹조발생 우심지류를 “조류 증점관리 지류”로 선정하여 봄철부터 오염지류 책임관리
 - 조류발생 상황 주기적 모니터링, 오염원 단속, 녹조발생시기 유량확보, 녹조 직접제거 조치 등 조류저감대책 수립·추진
 - 지류별로 개선이 필요한 수질오염물질(유기물, 영양물질, 유해물질 등)을 선정하여 지자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지류총량제 시행
- 통합·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추진으로 수질개선 효과 제고
 - 생태하천복원, 하수처리시설 확충,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오염지류에 단기간 내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·집중형(패키지형) 지원시스템 강화

■ 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배출 감축

- 감시물질 지정 및 신규 규제항목 도입으로 대상물질 확대
 -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(28종) 외 감시물질 지정·확대

| 현 행 | 단기 추진(~'16년) | 장기 검토('16~'25) |
|---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리대상물질 28종 • 관리체계 미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리대상물질 54종으로 확대 • 업종별 규제물질 목록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리대상물질 82종으로 확대 • 사업장별 물질관리체계 구축 |

- 난분해성 물질 관리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등에 TOC 도입 검토
-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배출기준 설정하도록 관리체계 전환
 - 업종별 감시물질 배출기준은 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적용
- 유해물질 배출 저감 최적 가용기법(BAT) 확대하여 처리 고도화
 -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한 완충저류시설 순차적 설치

■ 오염총량제에 의한 수질관리 기반 강화

- 기본계획의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오염총량제 시·도 경계 목표수질 강화
- TOC 항목 도입(4단계, '21년~)으로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고, 총질소(T-N) 등 지역별 현안물질 관리를 위한 지류총량제 도입
- 도로청소 등 신규 비점저감 기법 및 친환경 농업 등 비구조적인 비점관리 방안도 폭넓게 오염총량의 삭감량으로 인정

■ 농·축산업 분야 비점오염 절감유도

-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를 위해 양분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질소, 인 등 토양영양물질 관리 강화
 - 지자체(시·군)별로 가축분뇨 퇴·액비의 적정량을 설정, 초과발생된 가축분뇨 중 일정량은 공공처리를 유도하고,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통한 지역별 양분관리* 추진
 - * 가축분뇨 고형연료화 확대, 질소·인 회수, 지역간 퇴·액비 이동, 보통비료 대체 등
 - 기업형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
 - * TN : 850mg/L → 250mg/L('19) → 단계적 강화 / TP : 200mg/L → 100mg/L('19) → 단계적 강화
- 토양·수질 등에 대한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여 친환경농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
 - 환경지표를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의 지원 근거로 활용
-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영농기법을 마련하고, 기법별 이행효과 및 저감효율 도출
 - 물관리 시험포(물꼬), 완효성 비료 시비, 식생 받두렁 조성 등

●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 시범사업

- 새만금호 수질 목표달성을 위하여 간척농지 비점오염 저감기술, 논·밭 최적관리기술 등을 연구하여 현장 적용(~'16.12)
- 관리 필요성이 높은 이천 설성천 지역(한강유역)을 선정하여 저감시설 설치, 최적관리기법 적용, 저감효과 모니터링 등 통합관리 추진('16~)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감시물질 지정 항목 | 28종 | 54종 |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 지정 항목 수 |
| 수질 등급 달성 | 중권역지점 2등급 이상 79.8%('14) | 전국상수원 1등급 이상 | 도심하천 2등급 이상 |

1-3-③ 물순환 체계 강화

소관부처 국조실, 환경부, 국토부, 농식품부, 국민안전처, 기상청

■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

- 가뭄 극복 대응을 및 수자원 통합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 등으로 통합 물 관리 추진
- 현행 「물관리 정보유통시스템('04~)」에 종합분석기능을 추가하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 고도화*
 - * 각 부처의 수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강화하고, 강우-유출분석 등 분석기능을 보강하여 유역별 물 배분, 시설간 연계 등 의사결정 지원
- 가뭄 예·경보 시행을 위해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추진

■ 전 국토의 물의 저류·함양 기능 유지 및 향상

- 도시지역 친환경 빗물관리기법인 저영향개발기법(LID) 및 그린인프라의 적용·확대·유지관리를 위한 기술·제도·재정적 기반 구축
 - 한국형 저영향개발기법*을 개발·보급하고, 도심지역 LID 시설에 대한 성능검사제 도입 및 유지관리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
 - * 유역전반 소규모·분산형 시설과 유역말단 중소규모 저류형 시설 혼합·연계
 - 하수도 요금제에 강우유출수 요금제를 도입하여 재정조달체계를 마련하고, 빗물관리비용 부담 차등화로 투수층 확대 유도
- 투수면적 확대 및 저류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 확대를 추진하고, 물순환 및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기준 설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
 - 경제적 유인책과 연계한 도심지역 LID 시설 확충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강화를 통한 개발사업의 투수면 확대
 - * 도심 LID 시설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불투수면 과다 지역 집중관리(51개 소관역)

-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별 바람직한 투수면적 비율기준을 설정하고, 기준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 불투수면적 관리 의무 부여
 - * 기준 초과 시 도심 녹지공간 창출 및 개발사업의 투수면 확대 등 의무화
- 수변생태벨트 내 물순환을 고려한 녹지공간 조성 기준을 정립하고, 천변 저류지를 확대 설치하여 수변의 물순환기능 향상

■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생태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

- 환경생태유량 법제화로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유량 관리 기반 구축
 - 환경에 대한 수자원 배분을 통해 하천의 온전한 기능을 유지하고, 댐·보·저수지 최적 연계 운영에 반영
- 환경가뭄지수를 도입하여 단계별 가뭄 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량·수질관리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가뭄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
-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지원을 위한 가뭄전망정보 고도화
 - 선제적 가뭄 지원을 위한 3개월 이상 장기가뭄전망 기술 개발
 - 기상학적 가뭄지수의 농업·수문학적 가뭄 활용 및 연계 예측기술 개발
- 갈수기에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 및 하·폐수 방류수를 수생태계 유지를 위한 긴급유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설비 정비

■ 물이용요금 현실화 및 상수도 수요관리 강화

- 물이용요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원가의 산정주기에 장기적 원가변동 예상분을 반영토록 조정하여 요금 안정성 확보
 - 지역별로 다양한 요금적용 업종체계를 단순화하고, 누진단계는 영리성 등을 반영토록 조정함으로써 요금부과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및 물다소비 업종의 물 절감 유도
 - 지자체별 중장기 요금적정화 목표계획 수립시 장기적 원가변동 예상분을 원가산정에 반영토록 유도

- 수도사업 효율성 증대와 수요관리 강화를 통하여 한정된 기존 수자원의 활용도를 증대
 - 노후관로 및 계량기 교체, 검침시스템 선진화 등 지속적인 우수율 제고 활동을 통하여 물 손실 최소화,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도모
 -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통해 용수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여유량을 부족지역으로 전환·공급 확대

■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

- 물재이용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등
 - 인체접촉유무에 따른 사용용도 구분 및 용도별 수질기준 합리적 조정, 특히 공업용수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토록 개선
 - 풍수기에 저장된 빗물을 갈수기시 사용방안, 빗물이용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
 - 관할 지자체 용수이용계획(수도정비 기본계획 등)과 연계하여 지역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리 강화
- 물 재이용 확대 및 재이용수의 고급화 추진
 - 대규모 하수 발생 처리장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
 -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을 대규모 민자사업(BTO)으로 추진
 - * '15년 3개소 추진 중(아산, 구미, 포천)
 - 양질의 수질을 가지는 빗물과 안정적인 수량을 가지는 중수도 등과 연계한 물재이용시스템 구축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하수처리수 재이용률(%) | 14.3 | 15.8 | (하수처리수재이용량/하수처리량)×100 |

2 통합된 안심 사회

(1) 중점 추진 방향

| | | |
|--|---|---|
| 사회통합 촉진 |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 | 사회 안전대책 강화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층, 여성, 장애인, 다문화 가족 지원 지역 간 격차 해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환경성 질환 관리 감염병 예방·관리 식품 안전 신뢰 제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학물질 안전관리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자연재해 예방 |

(2) 전략 및 이행과제

| 전략(4개) | 이행과제(16개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-1.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| 2-1-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|
| | 2-1-② 고용-복지 연계 강화 |
| | 2-1-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|
| | 2-1-④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|
| 2-2. 지역간 격차 해소 | 2-2-①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|
| | 2-2-②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|
| | 2-2-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|
| 2-3.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| 2-3-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|
| | 2-3-② 어린이 건강 증진 |
| | 2-3-③ 감염병에 대한 예방·관리 강화 |
| | 2-3-④ 식품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|
| | 2-3-⑤ 휴양·치유 인프라 확충 |
| 2-4. 안전 관리기반 확충 | 2-4-①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|
| | 2-4-②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 |
| | 2-4-③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|
| | 2-4-④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|

(3) 주요 성과지표

| 주요지표 | 2015년 | 2020년 | 2035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여성 고용률(%) | 54.9('14) | 61.3 | 61.3* |
|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수(만명) | 42('14) | 35 | 30 |
| 유통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(%) | 5 | 50 | 80 |

* 5년후 여건 고려하여 목표 재설정

2-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

2-1-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

소관부처 복지부, 교육부, 국토부, 산업부

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·강화

-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로 맞춤형 개별 지원
 -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 하고, 주거·교육급여 대상 확대
- 급여 지급대상 확대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
 - 50% 이하 가구에게도 주거·교육 급여 지원을 확대
 - * 급여 수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하고,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
 -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 무자 소득기준을 완화
 - * 특히,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는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, 교육급여는 예외적 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
-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
 - 전국단위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, 잠재 위기가구 DB 구축, 보건복지콜 센터 홍보 강화 등
-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에 학생정보 노출 없이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
 - * 고교학비, 급식비, 방과후 수강권 등을 저소득 수급자격자 및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지원

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지원 확대

- '17년까지 연평균 11만호, 총52.7만호의 임대주택 지속 공급
 - * ('13) 8만호, ('14) 10.2만호, ('15) 12만호, ('16) 11.5만호, ('17) 11만호

- 행복주택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건설임대를 공급(준공, 연 7만호), 도심내 거주 저소득층에게 매입·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(연 4만호)
- 임대주택리츠,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추진
 - * 리츠 : '14~'17년간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6.0만호 추가공급추진(사업승인기준)
- 저소득* 임차가구에 대해 실제임차료를 고려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,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
 - *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%(4인기준 182만원)이하 가구

■ **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**

-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 에너지 보조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* 확대
 - * '15년 신규 사업으로 중위소득 40%이하로서 노인, 영유아, 장애인을 포함하는 에너지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0만원 내외 바우처 지원
-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용에너지와 주거형태에 따른 맞춤형 차등 지원 강화
-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으로 국가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빈곤 완화
 - 저소득층의 단열, 창호 등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고효율 LED조명 보급사업 실시
 - ※ 긴급지원 성격의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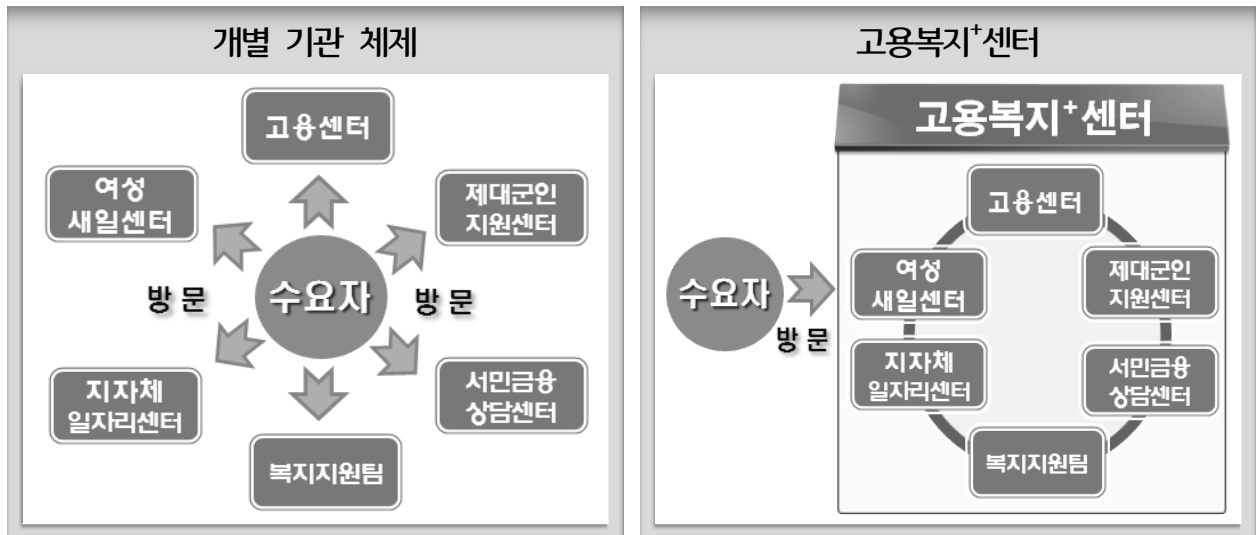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기초생활보장제도 | - | 실태조사 1회, 종합계획 수립 |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(전국) 실시 횟수 및 기초생활 보장종합계획 수립 횟수 |
| 공공임대주택공급(호) | 12만 | 11만 |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1만호 공급 |
| 에너지바우처 수혜 가구 (만명) | 50(목표치) | 80 | 수혜대상 가구 수 집계 |

2-1-② 고용-복지 연계 강화

소관부처 복지부, 고용부

고용복지+센터 확산

- 국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고용,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복지+센터 구축·확산
 -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기관과 복지상담인력이 한 곳에서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



-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을 고용센터(취업성공패키지)에 참여토록 하여 일 반노동시장 진입 지원
- 고용(워크넷)-복지(사회보장정보시스템) 연계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구현
 - 복지급여 자격 및 수혜이력 등을 워크넷(고용부)에서 확인하여 사업 및 서비스 신청·관리 시 제출서류 등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
 - 공공부문 일자리망 추가 연계로 구직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 제공

■ 사회보험 보장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

- 고용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장 강화
 -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*하고, 신규가입자 우대방향 개편 검토 추진
 - * (10인 미만 사업장)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
(건설업종)총공사금액 1억 원 미만 → 10억 원 미만
 - 가입제한 완화 등 고용보험제도 개편 추진
 - * 자영업자, 예술인, 특수형태업무종사자
 -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 마련*
 - * 국회 입법처리 지원, 하위법령 마련

-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
 -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고용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 경비·청소근로자 등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 특례 허용
 - 일정기간 근로내역 없는 건설일용근로자*에도 실업급여 지급
 - * 직전 한 달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더해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|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고용복지+센터 개소수 | 40 | 100 | 고용복지+센터 운영 개소 수 |
| 고용-복지 정보 연계수 | 5 | 60 | 참여기관 업무망에서 고용-복지 정보연계 개수 - 정보연계 증빙자료(MOU, 협약서, 공문서 등) |
| 공공부문 일자리망 연계수 | 2 | 5 | 연계 일자리망수 - 워크넷과 공공부문 일자리망 연계 증빙자료 (공문서 등) |

2-1-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

소관부처 복지부, 문체부, 여가부, 교육부, 국토부, 환경부

■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

-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도 개선
 -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복지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* 및 사후관리 강화
 - * 일자리, 재활서비스,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(응급안전서비스, 야간순회방문서비스) 등
 - 기존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를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범주 확대 등 개편
 - 발달장애인법 시행('15.11월)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재활·사회참여지원 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
- 장애인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및 주거지원 강화
 - 장애인연금 인상*,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,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강화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
 - * 소득하위 70%까지 기초급여 20만원
 - '중증장애일자립생활지원센터' 운영 국고지원 확대
 - 장애인 주거약자에 대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(우선)공급 지속 추진
 - * 5·10년 공공임대주택 10%, 국민임대주택 20% 범위내 장애인 우선공급
-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체육활동 강화
 - 분야별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
 -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
 -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장애인체육시설 인프라 구축

■ 교통약자 보호 정책 강화

- 사회적 약자 교통편의 증진
 -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등의 승·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
 - 장애인 전용 콜택시 확대 등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
- 국립공원 내 교통약자를 위한 탐방로 및 야영지 확대
 - 각 공원별 무장애탐방로 조성(20개 공원 24개소) 및 무장애탐방로 편의시설(점자, 음성 안내판 및 쉼터 등) 보강
 - 교통약자 접근이 가능한 자동차 야영장 내 무장애 영지 설치, 연계 부대시설(화장실, 취사장 등) 정비
 - BF(Barrier Free)인증 공원시설 확대

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

-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확대
 - 전문강사·내부강사 양성 및 아동, 청소년, 성인 등 사회 전반의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
 -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('16~)
-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
 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(지방비 6개소 포함)에서 가족통합교육, 가족상담, 취업연계, 통번역,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서비스 제공
 - 성평등, 인권 등 가족통합교육 강화 및 가족, 배우자, 부부,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제공
-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
 - 학령기 다문화 자녀 급증에 따른 가족·학교·사회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성 발달 및 역량증진 프로그램 운영
 -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등 다문화 자녀의 잠재력과 역량 강화

■ 장애학생, 다문화가족 및 탈북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

- 국가의 의무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(급) 법정정원 충족학급 확대
 - 특수학교(급) 신·증설을 통해 급당 학생 법정정원* 준수 비율 개선
 - * 급당 학생 법정정원 : 유치원 4명, 초·중학교 6명, 고등학교 7명
 - ※ ('15년)특수학교(급) 학생 법정정원 준수율 : 82.1%
 -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·공립 특수학교 신설 확대
 - ※ ('15년) 국·공립 75개/전체 167개(44.9%)
-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
 -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유치원, 예비학교 및 대학생 멘토링 등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
 - 다문화 중점학교 및 교원연수 확대 등을 통해 전체 학생 및 교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
- 탈북학생의 학습역량, 심리·정서 상황, 사회·문화 적응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1:1 맞춤형 멘토링 실시
- 탈북학생 기초 학력 증진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탈북학생용 표준(보충)교재 수정·개발·보급
 - ※ (초 1~2) 국, 수 (초3~중3) 국, 수, 사, 과 (총 32종)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장애인 복지서비스 경험률 (%) | 94.8('14) | 96.8 | 3년주기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서비스 경험률 (한번이라도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) |
| 저상버스 보급률(%) | 18.5('14) | 22.2 | (저상버스 도입대수/전국 시내버스 대수)*100 |
| 특수학교(급) 학생 법적 정원 충족학급 비율(%) | 82.1 | 85 | (급당 학생 법정정원 충족 학급 수 / 특수학교(급) 전체 학급 수) × 100 |

2-1-④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

소관부처 여성부, 고용부

■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

-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
 - 청년여대생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·보급
 - 청년여성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
- 여성 근로자를 위한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개발 지원
 -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·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추진
 -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

■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직장인 보육 지원

- 사업장 지도점검(반기별), 병원·출판업 등 모성보호 취약업종별 고용평등 협의회 구성 등 기초 고용평등질서 확립
 - 건강보험 임신·출산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, 임신근로자 부당해고·출산휴가 미부여 등 위법사업장 적발률 제고
 - * 건강보험 정보연계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
-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및 인식 개선으로 육아휴직 사용 유도
- 대기업(500인 이상) 설치의무 이행 독려 및 중소기업 산업단지형·지자체 협업형 등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모델 집중 지원
 -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(16), 지자체·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으로 지속 확충

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

- 양성평등위원회,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총괄·조정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추진
 - 양성평등위원회 안건의 다양화를 통해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,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 등을 통해 심의의 전문성 제고
-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확대
 -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 및 사업의 대상을 확대·명확화 하여 정책의 양성평등성 강화기반 마련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직장어린이집 설치 | 780 | 1,210 |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개소수 |
| 30대 여성 고용률(%) | 56.3 | 58.1 | 30대 여성 중 취업자 비율 |
|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| 63.1('14) | 63.8 | 여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/ 남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*100 |
| 남성 육아휴직자 | 2,669('15.7) | 6,700 |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 |

2-2 지역간 격차 해소

2-2-①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

소관부처 농식품부, 국토부, 해수부, 산림청

■ 6차산업 발굴·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

- 6차 산업활성화 지원센터(9개소)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및 창·보육 컨설팅 지원
 - 창업희망자에 대한 창업코칭·시제품 생산 및 자금 등 지원
 - 지역별 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우수업체 인증 및 전문컨설팅 지원
 - * ① 기술, 경영, 법률, 행정 컨설팅 및 맞춤형 행정지원, ②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계 프로그램 발굴 지원, ③ 아이디어·제품 발굴, 시장개척 등 지원
 - 온라인(쇼핑몰, 사이버거래소 등)·오프라인(갤러리아, 대형마트 등) 판매플랫폼을 구축하여 적극적 사업 지원
- 6차산업화 지구를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
 - 6차산업화 지구(9개소)는 사업계획에 따라 컨설팅 지원, 정책사업과 연계한 공동 인프라 구축
 - 지역 특성에 따라 전후방산업 연계, 규제특례 발굴 등 지속 추진

■ 지역 교통·물류망 개선

- 간선도로, 철도망, 거점항만 개선으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
 - 간선도로망 건설, 광역도로·도시혼잡도로·국가지원지방도 건설로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반일생활권 실현
 -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·간선철도로 연결하여 단일 생활권에 진입하도록 철도망 확충
 - 배후산업 및 지역특성에 맞추어 물류·산업 거점 및 해양관광 허브로 무역항(31개소) 및 연안항(29개소) 특화 개발

- 특정지역의 역사문화자원·경관자원을 활용·진흥하고 특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개발수요 변화에 대응
 - 거점지역*과 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접근교통망(연계도로), 문화유적정비 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
 - * 산업·교통·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·물적 기반을 갖춘 중심지역
 - ** (특정지역 지정현황) 내포문화권,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, 해양농경역사문화권, 중원문화권, 동남내륙문화권, 가야문화권, 설악단오문화권, 임진강평화문화권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’15) | 목표 (’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6차 산업화지구(개소) | 3(’14) | 16 | 6차 산업화지구 수 |

2-2-②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

소관부처 농식품부, 해수부, 환경부, 농진청, 산림청

■ 농업인 대상 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

- 농업인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
- 농지연금* 등 농업인에 특화된 노후소득 보장제도 도입 및 가입대상 확대
 - *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 지급
- 고령자 공동이용시설, 농촌형 교통모델 등 체감형 복지사업의 지속 발굴 및 자체적 확산 유도
-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경감
 -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에 대한 주기적 조사*
 - *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(10,000농가, 조사주기 1년)
 - 농작업 편이장비, 보호구, 교육자료 등 개발·보급

■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

- 선도지구 시범사업*을 확대·시행하여 읍면 소재지의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인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
 - * 농촌 중심지 선도지구 : ('15) 15개 → ('17) 54(누적)
 - 전문가 그룹(중앙계획지원단 등)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방식 구체화
 - * 중심상권 활성화, 교육·문화 특화, 복합서비스 거점 등 지역별 특화전략 마련
- 귀산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
 -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사업 개발 및 산촌 마을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
 - 귀산촌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산촌 미리살아보기 캠프 운영

- 농촌경관 개선 및 농촌관광 소득화 기술 개발
 - 농촌마을 환경 개선 및 경관유지·보전기술품 개발
 - 농촌관광 사업유형 다각화 및 운영 전략·프로그램 개발
-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‘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’ 추진
 - 주택개량, 상하수도 정비 등 마을단위의 안전 및 생활·위생 여건 개선
 - * '15년 55개 지역을 선정하여 '17년까지 940억원 지원(국고 기준)
- '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지붕의 석면슬레이트 철거·처리를 지원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
 - '21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18만동 철거(이후 계속)

■ 수산분야 정책보험 및 수산직불제 활성화

-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속적 확대
 - * '15년 21개 품목(감성돔, 농어, 굴, 김, 미역 등) → '20년 28개
- 소형·영세 어선원 보호강화를 위한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
 - * 당연가입대상 확대 : (현행) 5톤이상 → ('16년) 4톤이상 → ('18년) 3톤이상
-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확대
 - * 제주본섬(읍면지역) 사업대상 포함('16년) 및 직불금 단가 단계적 인상(50(현행) → 55('17) → 60('18) → 65('19) → 70만원('20))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(개) | 21 | 28 | 어업재해보험 상품 출시 개수 |
| 슬레이트 철거동수(동) | 70,789 | 180,000 | 지자체 철거실적 |
| 농어촌 최저주거기준이상 가구 비율(%) | 88.3('14) | 90 | 농어촌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|

2-2-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

소관부처 문체부, 환경부, 해수부

■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

● 슬로시티* 관광자원화 정책 강화

-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, 주민협의체 활성화, 체험프로그램 개발·확대 등

* 전남 담양, 전남 완도, 전남 신안, 경남 하동, 충남 예산, 경기 남양주, 전북 전주, 경북 상주, 경북 청송, 강원 영월, 충북 제천 등 11곳

● 전국 주요 야생화 군락지 관광 명소화 추진

- 야생화 공원(단지) 조성, 프로그램 운영, 해설사 양성, 축제개최 등

* 경기 가평, 강원 원주, 강원 태백, 전북 부안, 전북 정읍, 전남 순천, 전남 영광, 경북 영주, 경남 남해, 경남 양산 등 10곳

● 쇠퇴한 관광 지역의 관광 인프라 재생 추진

- 농경문화박물관 ICT 활용 리모델링, 암벽스크린 공연, 연극 등

* 전북 김제벽골제, 충북 온달관광지, 강원 영구통일관, 울산 일제 적산가옥, 강원 원주 감성 레저마을·간현관광지 등 5곳

■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

●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

- 생태관광의 성공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엄선·지원, 성공사례를 만들어내,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환경보전과 주민복리를 증진

* 영산도, 제주 선흘1리, 인제 생태마을, 고창 용계마을 선정('14)

- 생태관광 자원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 특성화(브랜드화) 지원

* 명품마을('14년 13개 → '17년 18개), 생태관광지역('14년 12개 → '17년 30개)

- 지역 특색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
 - 국립공원과 생태관광지역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* 운영
 - * 오대산-평창 어름치마을, 한려해상-앵강만 등 7개 공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교과과정을 고려한 소규모 현장 체험형 생태수학여행 운영
-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
 - 생태탐방연수원, 에코촌, 생태탐방로 등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수생태환경을 인접하여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’15) | 목표 (’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민 생태관광 참여율(%) | 20.9(’14) | 25 |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 참여율 제고 |

2-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

2-3-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

소관부처 복지부, 환경부, 식약처

■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 내실화

-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로 환경관련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·감시 강화
 - 인체 내 유해물질농사 조사 위주에서 환경위해인자와 환경성질환간 상관성 분석 중심의 추적조사 기능을 보완하여 4기 조사* 실시
 - *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('18~'20) : 생체 내 유해물질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노출원/노출경로 상세조사 실시
 - 역사조사 및 환경오염사고 영향조사 결과가 피해구제 및 사법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론 개선하여 조사 강화
 - WHO에서 개발된 EBD* 평가 방법론과 국내 환경성질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도입방안 마련(~'17)
 - * 환경성질환부담(EBD) : 환경성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와 그 중 예방이 가능한 8개 범주의 예방 가능한 환경을 정하고,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성 위해에 대한 질병부담을 의미
 - 환경보건센터 기능·지정 확대로 중이염·노인성 질환 등 새로운 질환과 환경유해인자 노출 연구 강화
- 통합위해성평가 강화, 환경성질환 재분류로 예방 대책 강화
 - 통합위해성평가에 기초한 환경기준 설정 시범사업 추진(~'18)하고, 매체 통합적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제시
 - 통합위해성평가를 활용하여 환경기준설정 플랫폼 구축(환경정책기본법 개정)
 - 질환별 환경기여도를 평가하여 환경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재분류하고 대응대책 마련(~'19)

■ **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강화**

- 고혈압,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 실시
 - 특히 생애전환기 국민(만 40세, 66세)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
-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, 지자체 건강관리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
 - 보건소 하부기관이 없는 지역에 ‘건강생활지원센터’ 설치(지역보건법 개정)

■ **영양섭취의 균형성 제고**

-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개인 맞춤형 영양정보제공 서비스 지원 및 나트륨·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
 - 국민참여 유도를 위한 나트륨 저감 실천방법 개발·홍보 및 가공식품 대상 나트륨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*, 외식·급식 대상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참여** 확대
 - * 식품군별 저감화 가이드라인 개발 : ('14) 20개 → ('16) 30개
 - ** 삼삼급식소 참여 개소수(누계) : ('15) 149개소 → ('17) 380개소
 - 첨가당 DB 구축*, 커피 등 가공식품의 당류 함량표시 확대 및 계층별** 맞춤형 섭취 저감화 교육 확대
 - * ('14) 총당류 DB → ('15~'17)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당 DB 구축
 - ** ('14) 초·중·고 학생 대상 → ('15~'17) 유아 등 전국민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환경기준 설정 물질수(개) | - | 5 | 매체통합위해성평가를 거친 물질 수 |
| 나트륨 일일 섭취량(mg) | 3,890('14) | 3,500('20) | 국민건강영양조사 |

2-3-② 어린이 건강 증진

소관부처 **복지부, 환경부**

■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

- 모성건강과 연계한 산전관리 강화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최소 300병상 이상 확충
- 고위험 영유아 장애발생 최소화
 -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강화, 신생아 난청선별검사,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비용부담 완화
- 모유수유 실천 향상 및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등 영유아 성장발달 및 건강증진 도모
-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기 시력 검진을 시행하여 시각장애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후천적 시각장애율* 감소
 - * 시각장애의 93.2%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며, 취학 전 시기에 약시를 발견하여 치료하면 정상시력 회복 가능

■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 체계화

- 한국형 출생코호트 운영으로 태아 시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유해환경노출 인자와 건강영향에 대하여 장기간 추적조사·연구 수행
 - '15~'36년까지 산모·영유아~18세 청소년 10만명을 대상으로 환경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(대규모코호트, 상세코호트 구분 추진)
 - 성장발달 단계별 건강영향을 추적하여 유해물질 관련 환경성질환 중심으로 5개 분야·39개 중점가설* 입증
 - * 임신·출산, 알레르기질환, 성장발육 및 내분비계, 신경인지발달, 사회성 및 정서발달 5개 분야 / 대기오염, 흡연, 농약, 내분비계 장애물질, 잔류성 유기물질, 중금속, 전자파,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39개 중점가설
 - 산모·태아기, 성장기별 건강영향 분석을 토대로 환경보건 가이드라인 마련

■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

-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선
 - 어린이 활동공간의 적용범위를 아동복지시설, 학원, 놀이방 등으로 확대하고, 스쿨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('16~)
 - 석면, 실내공기질, 라돈, 소음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통합하고, 활동공간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, 유해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
- 어린이 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관리 강화
 - 유통되는 어린이용품별 환경유해인자 실태 조사하여 기준초과용품은 리콜 조치
 - 국제적 이슈물질, 유독물질을 우선 검토하여 현행 4종(노닐페놀 등 4종)인 어린이용품 내 사용제한 물질 지정 확대* 추진
 - * 위해성평가결과 기준초과 환경유해인자 중심으로 확대
 - 추가 관리대상 어린이 용품 발굴*, EU 규제 사례·알레르기 등 신규 환경성 질환 원인 물질 조사 등을 거쳐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확대
 - *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른 유해성 평가 및 표시 대상 어린이제품군은 93개
- 아토피피부염·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겪는 환아들에게 환경과 건강의 긍정적 관계를 상기시키고,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제공
- 국립공원 주관으로 인근 보건소, 환경보건센터,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환경성질환 환아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(연 100회)
 - 전체 참여 어린이의 30% 취약계층에서 우선모집*
 - * 지역아동센터, 지방자치단체, 지역 교육청, 돌봄센터 등과 사전연계를 통한 취약계층(한부모 가정, 저소득층, 소년소녀가장 등) 우선 모집
 -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센터별 증증환아 중 일부를 선정(2~3명)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유도, 환경성질환 개선효과 확인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’15) | 목표 (’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영아사망률(명) | 3.0(’14) | 2.8 | 출생아 1,000명 중 만 1세 이전에 사망한 영아의 수 |
| 고위험신생아 의료비 지원율(%) | 48.2(’14) | 65 | 연간 의료비 지원자수/ 저체중 출생아*100 |
|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참여 산모 수(명) | 500 | 5,000 | ’17년까지 산모 5,000명을 모집하여 연도별 건강영향조사 추진(~’36년) |
| 어린이 아토피질환 환자 수(만명) | 42 | 35 | 9세 이하 어린이 아토피질환 건강보험 진료실적 |

2-3-③ 감염병에 대한 예방·관리 강화

소관부처 복지부

■ 종합적·체계적 감염병 예방·관리

-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,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
 - 국제동향의 적극 감시하여 위험국가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소에서 의심자를 신속하게 격리·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- 24시간 ‘긴급 상황실’을 운영, 의심환자 발생 시 ‘즉각대응팀’이 출동, 역학조사관 현장 조사, 정부·의료기관 간에 환자 접촉 정보 공유
 - 빠른 진단을 위한 진단실험실을 확충하고 중앙·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 지정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
-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
 - 방역조치는 위기단계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컨트롤타워 개편 및 위상 강화
 - 감염병을 위험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 명료화
-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,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, 간병·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 개선
 - 감염병 환자를 분리 진료하고 입원실의 구조를 개선하여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한편, 병원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충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긴급상황실 운영 | - | 운영 | 24시간 운영 긴급상황실 설치 및 운영 |

2-3-④ 식품 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

소관부처 농식품부, 해수부, 식약처, 농진청

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

- 유기농 대상 직불금 지급기간을 연장(5 → 8년)하고, 품목군별 재배난이도 및 소득감소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가 차등화 추진
- 권역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(7개소) 활용, 친환경 실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·잡초관리 등 재배기술 개발·보급 확대
- 저투입 자원순환형 유기농업기술 개발
 - 유기자원이용 최적화, 액비활용 등 유기질비료 사용방법 개선
 - * 친환경·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자원 사용 처방 체계 실용화
 - 유기농업 환경영향 분석 및 다원적 기능 평가
 - * 유기농업 환경지표 및 최적관리방법 개발, 비시장적 가치평가

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

- 농약 등 유해화학 물질 안전관리 강화
 -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기술 개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
 - * 국내 최초 등록농약 분석기술 개발·보급 : ('14) 5종 → ('17) 13종
 - 소면적 재배작물 및 수출유망작물 적용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
 - * 직권등록 농약 품목 : ('14) 75작물 243품목 → ('18까지) 100작물 400품목
 -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술개발
 - * 토양개량제 처리, 물관리를 통한 중금속 흡수 저감화 등
- 유해생물 위생관리 강화
 - 농산물의 유해미생물 신속진단 및 오염예방·저감화기술 개발
 - * 유해미생물 및 생산독소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 공동 R&D 추진
 - 예방위주 안전관리를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(GAP) 활성화

■ **식품안전 신뢰제고**

● **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확대**

-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및 집유업·유가공업 대상으로 HACCP 의무적용 단계적 확대*

* HACCP 적용 비율(식품 / 축산물) ('14) 10.8% / 13.3% → ('17) 18.1% / 21.1%

-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구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'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' 설치 확대

*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매장(누계) : ('14) 52,966개소 → ('17) 80,000개소

● **상시 안전관리 강화**

- (생산·제조 단계)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·점검* 강화

* 고의적·상습적 위반 업체(3년간 5회 이상 위반)를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지도·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원적 차단 등

- (유통·소비 단계) 유통식품 수거·검사 강화* 및 허위·과대광고 차단

* 유통식품 검사 : ('14) 195천건 → ('17) 2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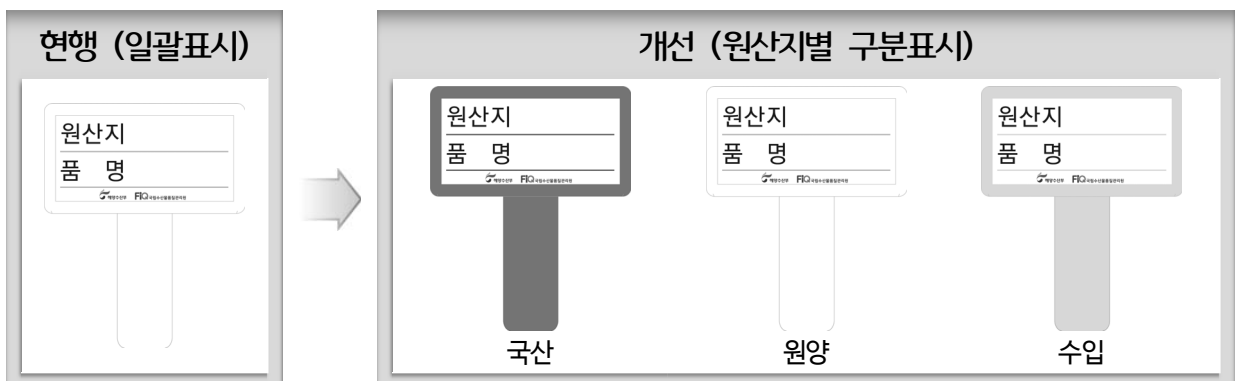
방사능 검사 : ('14) 140품목, 8,400건 → ('17) 170, 11,400

● **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**

-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, 표시방법 개선 및 가공식품 사용 원료의 원산지 표시 확대 등 추진

*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수 : ('13) 16 품목 → ('17) 20 품목

-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률 제고를 위한 색상형 원산지 표준 표시판 도입



- 신뢰가는 농수산물 인증관리 및 인증제도 등 개선
 - 인증기관 역량강화 및 심사기준개선 등 국가인증 농산물(GAP·친환경)에 대한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
 - 인지도가 낮고 세분화된 수산물 인증제 단순화 추진
 - ※ 수산특산물, 전통식품, 유기식품 등으로 세분화된 인증제를 “우수수산물 인증제”로 단순화 ('16 : 8종 → 1종)
 - 포장·유통 수산물에 대한 의무표시제 도입('16)
 - ※ 의무표시 내용 : 포획방법, 권장소비기한, 영양, 취급주의 사항 등

■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

-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식량자급률 기본계획 수립
 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, 목표 달성방안을 마련('17~)
 - 밭농업 활성화, 답리작 확대, 사료곡물 수입대체, 국산농산물 소비확대 등 추진
-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,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 R&D 추진
 - 벼,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고온, 기상재해 및 병충해 저항 품종개발
 - 과수 등 원예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열대·아열대 작물 도입 및 보급
 - 고온 저항성 가축유전자원 발굴 및 재래가축 복원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|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(%) | 4.9('14) | 7.5 | 전체 농지면적 대비 유기·무농약 재배면적 |
| 수리안전답 비율(%) | 60.1('14) | 80 | 10년빈도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한 논 |
| 비료사용처방 발급 건수(건) | 310천 | 360천 | 화학비료사용량 저감을 위한 비료사용 처방 발급 건수 (휴토람(soil.rda.go.kr)) |

2-3-⑤ 휴양·치유 인프라 확충

소관부처 산림청, 환경부

■ 산림휴양·치유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산림을 활용한 체계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
 - 산림복지서비스 인증 및 심의위원회 운영,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및 전문업 등록관리 제도 운영
- 자연친화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산림휴양시설 확충
 - 휴양·치유·문화·교육 등 산림 내 활동을 복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복합 휴양단지 조성
- 사회적 약자 및 사회공헌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 확대
 - 소외계층 대상 자연휴양림 숲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대상별*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
 - *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요보호아동, 장애인가정, 특정 질환자 등
 - 장애인의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우선 예약객실 운영 및 객실이용요금 할인

■ 국립공원 체험·휴양 기능 확대

-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대피소 증축 및 신설
- 국립공원 내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인프라 확충
 - 자연 체험형 교육과 생태관광 수요 대비 생태탐방연수원 조성
 - 미래세대 전용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시설 네이처센터 조성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체류형 공원시설 조성 수 (개소) | 61 | 105 | 야영장, 대피소, 생태탐방연수원, 네이처센터 등 |
| 산림휴양 및 치유 이용객 (만 명) | 1,510 | 1,800 | 전국 자연휴양림, 치유의 숲 이용자 수 |

2-4 안전 관리기반 확충

2-4-①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

소관부처 국민안전처

■ 국민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

- 부처간, 중앙-지자체간 협업 강화
 - 중앙안전관리위원회, 안전정책조정회의, 중앙-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 활성화로 범부처 안전정책 조정협의 강화
 - 지역안전지수 공개 및 생활안전지도 확대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유도
- * 교통사고, 화재, 자연재해, 범죄 등 7개 분야에 대해 안전등급(1~5급) 부여

-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체계 개선
 - 주요 안전분야*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
- * 기반시설(교량, 터널 등), 다중이용시설(영화관, 쇼핑몰 등), 운송수단(여객선, 지하철 등)
- 일상에서 사고 확률이 높은 분야별 표본을 대상으로 기존 점검체계를 심층 분석, 개선방안 도출 후 확산

■ 재해 예방 투자 확대

● 침수, 붕괴 등 재해취약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

-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, 수시·정기점검 실시 등으로 위험 요인 신속 해소

- 신속한 투자로 적기 해소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운영

*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: 추진근거-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 등, 지원형태-지방자치단체 보조 (국비 50%), 사업시행-지방자치단체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재난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률(%) | '14년 사망자 대비 2.25% 이상 감소 | '19년 사망자 대비 최근 7년간 연평균 감소율 이상 감소 | 교통사고, 산업재해, 풍수해, 물놀이, 화재, 해양사고, 유해화학 물질, 폭염 사망자수 감축률 |

2-4-②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

소관부처 환경부

■ 화학물질 전(全)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

- 유통이전 화학물질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공고화
 - 법령 정비, IT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화학물질 등록·평가 기반 확립
 - 만성독성 중심으로 유독물질 지정 확대하고, 건강 위해성에 기초하여 허가제한물질 지정 확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유통관리 강화
- 유해물질 함유 생활화학제품(위해우려제품) 및 살생물 성분 안전관리 강화
 -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,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
 -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의 생산·관리 및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및 제품 안전사고 예방
- 수은, 잔류성유기오염물질(POPs) 등 국제적 취급 금지·제한 물질의 생산부터 사용·배출·폐기까지 전과정 관리 강화
 - PCBs 제로화(25),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POPs의 단계적 근절 추진

■ 화학사고 피해저감 기반 구축

-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사전에 담보하도록 장외영향평가·위해관리계획제도 정착
- 거점별 합동방재센터 설립 등 신속·정확한 화학사고 초동 대응으로 인명·재산·환경피해 최소화
-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, 사고예방·대응 공동협력을 위한 대·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 운영

■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정착화

- 원인자 책임배상원칙 확립 및 신속한 피해구제체계 구축
 -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피해배상책임을 강화 (무과실책임 부과)하여 원인자 책임배상원칙 확립
 - 인과관계 추정, 정보청구권 도입 등을 통해 피해배상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
-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활성화
 - 특정유해물질·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보험 의무 가입토록 하여 위험분산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확보
 -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개발·보급하여 의무 가입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활성화
-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피해구제 재원 확보
 -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을 설치하여 원인불명·무자력 피해 등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
 -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피해구제 재원의 통합적 운영 추진
- 취약계층 등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
 - 소송지원변호인단 구성·운영을 통해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피해배상 관련 소송 지원
 - 피해조사단을 설치·운영하여 환경오염피해 원인조사 등 지원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화학물질 유출사고 사상자수(명) | 806('14) | 589 | 1~10월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사상자수(고용노동부 통계) |
| 유통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(%) | 5 | 50 | 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 |

2-4-③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

소관부처 국토부, 환경부

■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

-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·서비스
 - 지하시설물 및 지반 정보(15종)를 3D로 통합하여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'19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
 -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정보의 중개·안내 등을 서비스하는 지원센터 설치·운영
-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강화
 -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“지하 안전영향평가” 제도를 도입
 -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·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
-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
 - 국가 - 지자체 - 사업자 및 시설관리자의 위계에 따라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
 -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 설치,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, 생활 속 지반침하 징후의 발굴·홍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추진
 -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하여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취약한 상하수관의 정밀조사 실시 및 파손 등 관로결함에 대한 개보수·교체 등 정비 추진
 - 취약한 상하수관 정밀조사 실시 및 파손 등 결함관로에 대한 개보수, 교체 등 정비 추진

-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기반 조성
 -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하고, 지반안전 관련 R&D 과제도 적극 발굴·추진
 - 새로운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이전에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*에 공사장 주변의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개선

*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계획으로 지하 10m 이상 굴착 시 의무적으로 수립

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

-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,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사고 사전예방
-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 졸음쉼터 확대 설치
- 차량, 도로간 교통정보 실시간 공유를 통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(C-ITS) 도입 추진

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

-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준공영제 및 수도권 통합 교통운영체계 정비
- 버스·지하철·자전거 등 수단 간 연계성 강화
 - 복합 환승센터 구축, 철도역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및 자전거 도로 확대 설치 등
-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개인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및 광역 환승센터 단계적 확충
- 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및 예·발매 불편해소
 -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
 - 고속·시외버스에 항공·철도 수준의 전산망 구축, 지정좌석제 도입
- 스크린도어, 안전발판 등 생활밀착형 철도안전시설의 확충 추진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자동차 사고건수(명) | 2.0('14) | 1.6 | 자동차 1만대 당 자동차사고 사망자 수 |
| 대중교통 분담률(%) | 32.8 | 35 | (버스, 철도, 지하철 교통수단 수송인원 / 전체 수송인원)*100 |
| 교통약자 배려시설 조성수 (개소) | 27 | 63 | 무장애 탐방로, 무장애 영지, BF인증 공원시설 등 |
| 지하공간정보 통합 구축률(%) | 2 | 100 |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자체수 / 전체 지자체수(시단위) |

2-4-④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

소관부처 국토부, 안전처, 환경부, 산림청, 기상청

■ 침수 피해 방지대책 강화

- 홍수 저류공간 확대 및 기존 댐의 안정성 확보
 - 댐 등을 통한 홍수 저류공간을 2022년까지 현 51억 톤에서 62억 톤으로 21% 확대
 - 극한 홍수에도 댐의 월류·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청댐 등 24개 기존 댐의 안전도 증대 사업 추진
-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
 - 상습침수가 발생하고 각 부처 계획으로 홍수예방이 어려운 21개소 도시 하천유역을 대상으로 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치수계획 마련
 - 홍수 범람시 침수지역과 침수 깊이 등을 알려주는 홍수 위험지도를 제작·배포
 - 강우레이더를 설치하여 강우이동과 공간적 분포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돌발 홍수에 대비
- 기후변화 대비 우수유출저감시설 확충 활성화 추진
 -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및 집중호우 증가시 인명·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 시설(침투 및 저류시설) 확충
-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 인프라 구축
 -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의 우수배제 기능 강화를 위한 하수관로, 하수저류시설 및 하수펌프장 확충

- 수문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물관리 지원 수문기상예측체계 구축
 -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1~3시간 단위의 유역별 상세 강수예측정보 생산 및 신뢰도 향상
 - 장기확률예보 등을 활용 이수기 물관리 지원을 위한 장기 예측기술 개발

■ 산사태 예방 및 재발방지 체계 구축

- 산사태취약지역 안전관리체계 구축
 - 사방댐, 계류보전 등 사전 예방사업 추진,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강화 및 현장대응 전담조직 신설·확대
 -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운영 내실화
-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조사 및 복구역량 강화
 -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·피해조사 체계 구축 및 체계적 복구기반 마련
 - 산림토양의 물리적 특성 파악을 위한 산림지반특성지도 제작 등 산사태 분야 연구 강화

■ 원인별·맞춤형 산불예방

- 산불조심기간 운영 및 대책본부 구성을 통한 총력 대응
 - 산불 위험도에 따른 예보 발령시 소각일체금지 등 탄력적 대응
-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감시로 산불위험요인 차단 및 확산방지
 - 무인감시카메라, 단말기와 연계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감시와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한 초동대응
- 산불위험·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 발생 최소화
 -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‘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’ 등 자발적 예방확대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실적('15) | 목표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산사태 인명피해(명) | 9.6 | 5 | 산사태 인명피해 사망자수 |
| 건조일수 당 산불피해 면적(ha/일) | 6.2 | 4.5 | 연간 산불피해면적(ha)/ 연간 건조일수(일) |
| 수해 피해액(십억 원) | 415 (‘05~’14년 평균) | 207 (‘16~’20) |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 (5년 평균 금액) |

3 포용적 혁신 경제

(1) 중점 추진 방향

| | | |
|--|---|--|
| 포용적 성장 지향 | 자원순환 정책 강화 | 친환경·안전 에너지 강화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자리 창출 • 고용안정성 • 공정거래 문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순환 경제 • 친환경 생산-소비 정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재생에너지 보급 • 원전 안전관리 |

(2) 전략 및 이행과제

| 전략(3개) | 이행과제(12개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-1.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| 3-1-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|
| | 3-1-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|
| | 3-1-③ 공정거래 문화 확산 |
| | 3-1-④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|
| | 3-1-⑤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|
| 3-2.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| 3-2-① 재사용-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|
| | 3-2-②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|
| | 3-2-③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|
| | 3-2-④ 저탄소생활 확산 |
| 3-3.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| 3-3-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|
| | 3-3-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|
| | 3-3-③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|

(3) 주요 성과지표

| 주요지표 | 2015년 | 2020년 | 2035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고용률(%) | 64.7('14) | 70 | 70* |
| 자원생산성(원/kg) | 1,382('14) | 1,719 | 3,500 |
| 재활용률(%) | 83.2('13) | 90 | 97 |
| 에너지 원단위(toe/백만원) | 0.247('13) | 0.226 | 0.180 |
|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(%) | 4.08('14) | 5.0 | 11 |

* 5년후 여건 고려하여 목표 재설정

3-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

3-1-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

소관부처 고용부, 기재부, 미래부, 환경부, 중기청

■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

-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를 위하여 공공·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
 - 교원 명예퇴직 확대 등으로 공공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, 기업의 청년 고용창출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및 양질의 인턴·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
-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,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 및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통하여 미스매치 해소
 - 학교교육에 산업계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일·학습 병행제를 확산
 - 주거·교통·육아 등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
- 청년일자리 사업 재편, 취업지원 서비스 효율화 등 청년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추진
 - 기존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통·폐합, ‘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’ 및 해외취업 촉진

■ 중소기업 인지도 제고 및 일자리 정보제공·매칭 강화

- 워크넷의 중소기업 페이지를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, 온라인 취업카페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정보 제공 강화
- 청년 대상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, ‘강소기업 서포터즈’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

-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하여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
- 워크넷 중심의 공공·민간부문 일자리 정보망 연계강화

■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

- 혁신형·사회문제 해결형 등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 추진
 - 벤처형, 노동통합형, 서비스제공형 등 인증유형 다변화 및 인증요건 등 개선(연구용역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)
- 사회적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인건비 지원 비율 단계적 축소 등 재정지원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간접지원을 확대
 - e-스토어 365 사이트 활성화, 온·오프라인 연계 강화, 공유매장 도입 등 제품 정보 제공 및 구매접근성을 강화
 - 클라우드 펀딩대회 확대, 사회적금융 네트워크 구축, 시니어 재능기부 플랫폼 구축, 대기업 CSR 연계 강화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

■ 혁신형 창업지원 확대

-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강화
 -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지원, 파이낸스 존 활용 지원, 주요 해외 투자자 연계 유치 등 글로벌 진출 지원
 - 아이디어 수준과 숙성단계에 따른 다양한 트랙을 구축하여, 원스톱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 지원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업 수요기반의 아이디어 | 대기업의 엔지니어, 전문 멘토단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사업화,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기사업화 |
| 일반 아이디어 | 사업화 가능성, 센터별 전문분야, 제안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멘토링 후 선별하여 집중 지원 |
| 기술창업 | 출연(연)의 중소·중견기업 지원사업인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 |

- 기업가 정신 확산 및 벤처·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 - 청소년 비즈쿨(Bizcool) 확대, 자유학기제 운영 등으로 청소년때부터 기업가정신 함양 유도, 보다 자유로운 벤처창업과 일자리 창출 유도
 - ※ Bizcool : business + 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배운다는 의미
- 유망 환경신기술 창업자 발굴 지원
 - 환경산업 분야 벤처기업 등 유망 환경신기술 창업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*으로 성공적 사업화 지원,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 도모
 - * 사업모델 개발, 멘토링, 아이템 검증 및 개발, 시장진입 및 네트워킹,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/연계 등
 - 환경분야 창업·행정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및 환경분야 청년 창업 아카데미 캠프 개최 등으로 환경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참여 인원 | 11,000 | 15,000 | 탐방 참여인원(명) |
| 청년 고용률(%) | 41.4 | 48 | 청년층(15세~29세) 고용률 |
|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업체 수(개) | 1,500 | 3,000 |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기업수(누계) |

3-1-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

소관부처 고용부, 산업부, 국토부

■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

- 상시·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견지하면서,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남용 방지
 - 공공부문은 상시·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고용 원칙 견지
 - * 1단계('13~'15년) 65천명 전환 완료 및 신규 사업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2단계('16~'17년) 추가 전환계획 수립·추진
 - 중소·중견기업 기간제·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
 - 「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가이드라인」의 노사 자율 준수협약 체결 지원
 - * 상시·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, 경력 인정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·차별시정
-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강력한 장치 시행·추진
 -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(~'20) 등 차별 적극 적발·시정

■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

-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관련 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하여 지원
 -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 및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공동복지시설 설치,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취업 유인을 강화
- 합동공모 참여 대상사업 확대
 - 합동공모 참여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, 통합·연계 가능한 사업을 단일건물에 통합·집적하는 융합과제로 추진

■ 안전한 일터 조성

-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관 전담관리, 수시점검 등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 및 유해·위험요인 상시 파악·지도
- 사업장의 정비·보수 작업 등 사고 위험징후를 사전 파악·관리하는 「화학 사고 위험경보제」 확대
 - * PSM 대상 사업장의 지역별·사업장별 사고위험 징후 분석 → 위험정도에 따라 위험경보 발령 → 등급별 관리
-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* 및 책임강화**, 도급인가제도 실효성 강화 (산업안전보건법 개정)를 통한 도급인의 협력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
 - * 도급인이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(현행) 20개 위험장소 → (개정)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도급사업장 내 모든 장소
 - ** (현행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→ (개정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,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- 유관기관(관계부처, 시민사회단체, 지역별 안전협의회 등)과 공동으로 4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전개
 - *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질서 : ① 보호구 착용(쓰자), ② 안전보건 표지부착(붙이자),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(배우자), ④ 안전작업절차 준수(지키자) 등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(한시적) 근로자 비율(%) | 18.2% | 17.7% | 통계청, 경찰부가조사결과 |
| 사고사망만인률(명) | 0.58 | 0.39 | 근로자 1만명당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(사고사망자수×10000)/ (근로자수) |
|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(%) | 48.4('14) | 55.3 |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/ 정규직 시간당 임금*100 |

3-1-③ **공정거래 문화 확산**

소관부처 **공정위**

■ **공정거래 확산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**

- **공정거래협약 체결 장려를 통한 대·중소기업간 자율적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**
 - 협약제도의 효용성을 구현시킨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협약 평가기준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함으로써 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기업 수 확대 유도
- **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타파**
 - 각종 실태조사나 수급사업자의 제보 등을 통해 범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원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법집행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정거래협약 제도 확산 | 192('14) | 220 | 공정거래협약 체결 참여기업 수 (개사) |

3-1-④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

소관부처 산업부, 미래부, 환경부, 기상청

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민-관의 개방적 협업 생태계 조성

- ‘창조경제혁신센터’를 통한 특성화된 지역 산업 육성
 - 기후변화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촉진, 실증·시범사업 참여, 테스트 베드 구축·공동 활용 등으로 지역의 기후변화대응 산업 육성

| 충북센터(LG) | 충남센터(한화) | 광주센터(현대차) | 제주센터(다음)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친환경에너지 | 태양광에너지 | 수소연료전지 | 에너지 신산업 테스트베드 |

- 미래 수요 기반의 기술개발 기획, 공공부문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연계 등을 위해 분야별 ‘수요기업협의체’* 구성·운영

* 미래부·산업부 등 정부 부처, 200여개 대·중소기업 및 에기연·에기평 등 기술간사기관,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참여

■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

- 기존 개발기술을 연계·활용하되, 핵심 취약기술에 대해서는 산학연 공동 개발
 -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핵심SW 연계개발 추진
-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, 시장진출이 필요한 경우 전략적으로 국제협력 추진
-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창의·융합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 및 원천소재 개발 및 시험평가용 연구장비 구축
- 개발한 기술·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및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화 및 인증 지원체계 구축

■ 기후변화 적응 산업 육성 및 지원

-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 -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후적응기술 보유기업을 선정하여 전문가(기후변화·경영·기술)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행
 - 기후변화 적응산업 지원 협의체 운영 및 적응산업 인벤토리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
 - 민간 기후적응 컨설팅 시장 확대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방향, 구성항목, 교육, 인증, 인센티브 등 기후변화 컨설팅업 제도화
 - 유형별 및 권역별 기후변화 적응 관광산업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기후변화 관련 신규 관광자원 발굴
- 기상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 - 날씨경영 인증제도 운영,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활성화,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등
 - R&D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·사업화 과제 집중 투자, 기상청 보유 기상시술 민간이전 활용도 제고 등
 - 글로벌 기상기후산업 수출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,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민·관 네트워크 구축 등

■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

- 국내 환경기업 육성지원
 - 환경산업체 경영지원, 해외시장 진출, 생산설비투자 등 산업체의 안정적 성장과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
 - 유망 환경기술·제품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초기 및 사업 성장 단계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전략수립, 자금지원
 -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환경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우수환경산업체* 지정

* '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10~15개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

- 환경기업의 환경기술 전문인력 채용 지원,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
- 환경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
 - 아시아, 중남미 등 수출 유망국*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 가능한 신규 사업 발굴, 수주지원을 위해 환경시장개척단 파견,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,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
 - * 아시아·중동·중남미·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은 연평균 7%내외 급성장
 - 전문 환경컨설팅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중소환경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역량진단부터 최종계약 성사까지 수출 전 과정 지원(Green Export 100*)
 - * '18년까지 100개 중소기업 수출지원
 - 환경산업 분야 해외 유명 바이어 초청행사 개최(GGHK*)로 국내 환경산업을 홍보하고 해외 네트워크 확충을 지원
 - * Green-Global-Hub-Korea(그린글로벌허브코리아)
 - 해외 유망 환경 인프라 민관협력(PPP*) 투자개발사업 모델개발 및 시범 사업 추진
 - * Private-Public-Partnership(민관협력사업)
 - 녹색기후기금(GCF) 사업모델(감축·적응 등)을 개발하여 국내 환경산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및 지구환경금융(GEF) 등 여타 국제환경기금 사업개발에 기여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환경산업 수출액(십억 원) | 7,922 | 9,500 | 환경산업의 환경부문 수출액 |

3-1-⑤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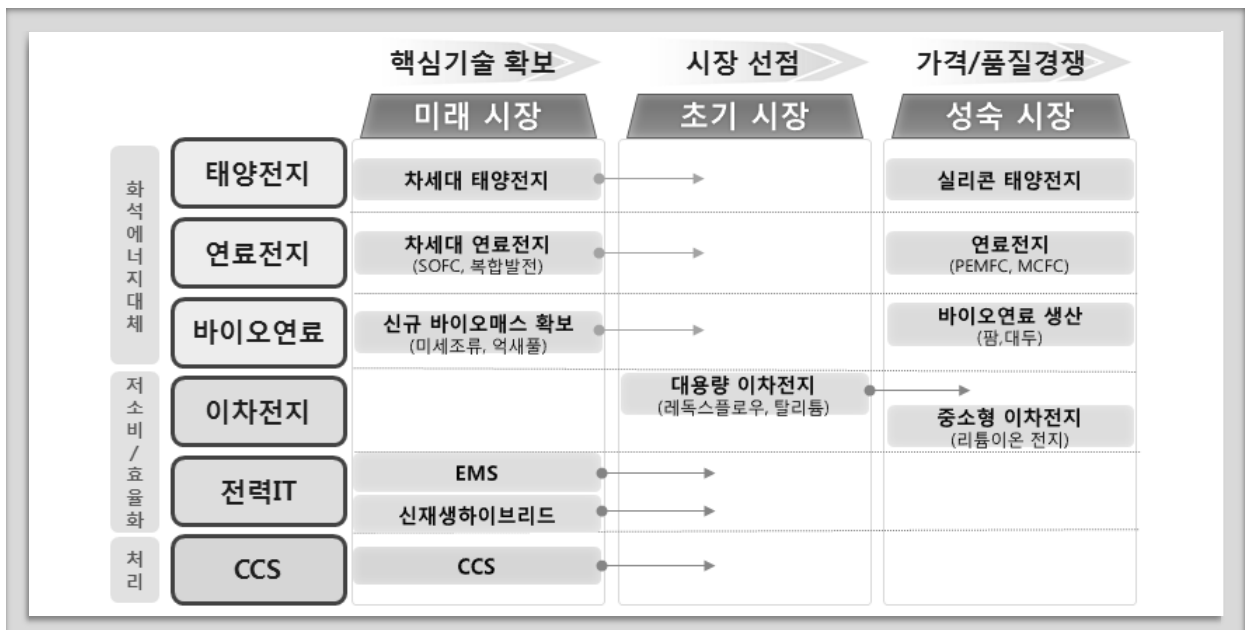
소관부처 미래부, 산업부, 농식품부, 농진청, 환경부, 해수부

■ 미래 유망 신기술 추가 발굴·확산

- 국내 연구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기술이나 해외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 등 新유망 기술 발굴
 - 발굴 과제는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재정 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R&D 사업에 적극 반영
- 석유 의존도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등의 재활용 기술 개발
 - C1 가스를 활용하여 화학제품(플라스틱, 섬유, 염료 등) 원료 및 수송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촉매(바이오, 화학) 및 공정기술 개발
 - * C1 가스 : 셰일가스, 천연가스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(C) 수가 1개인 메탄(CH₄) 및 일산화탄소(CO) 가스를 의미(CO₂ 제외)

■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 분야별로 차별화된 R&D 추진

- 기술 분야별로 관련 시장을 ‘성숙 시장’, ‘초기 시장’, ‘미래 시장’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정부의 기술개발 전략 차별화
 - * 성숙 시장은 화석연료와의 가격 경쟁을 측면 지원, 초기 시장은 파일럿, 테스트베드 등 실증, 미래 시장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중심



- 「범정부 ‘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 전략(14.7)」을 실행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계 부담 경감 기술 집중 개발·지원

| '15년 기준 6대 핵심기술 분야 정부 R&D 투자 | |
|--|--|
| 분야 | 핵심기술(총 4,313억원) |
| 화석연료 대체 | 태양전지(389억원), 연료전지(348억원), 바이오연료(413억원) |
| 에너지 저소비/효율화 | 이차전지(566억원), 전력IT(312억원) |
| 이산화탄소 처리 | CCS(402억원) |
| * Post-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'30년 BAU 대비 37% 감축)와 관련하여 6대 핵심기술 분야는 약 30백만톤(BAU 대비 3.5%) 감축에 직·간접적으로 연계 | |

■ 에너지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 기술 발굴

- (에너지 IoT+빅데이터 플랫폼) 센싱데이터가 플랫폼으로 집약되고,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효율 운영전략 및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
 - 가정, 건물, 공장 등의 특성을 반영한 자동화된 에너지관리서비스산업 창출기반 마련
- (고효율 에너지 변환·저장) 기존 기술의 한계와 한정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, 친환경적,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
 - 연료전지 시장과 연계한 시장창출, 고에너지밀도 전지 활용처 개척
- (미래형 에너지발전)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발전의 한계 극복을 위한 mW~MW급 소형 발전시장
 - MW급 열발전, 웨어러블 압전시스템, 초임계 CO₂발전 등 시장 확대
- (무선전력 송수신) 배터리 크기 최소화 및 전선제거를 통한 전기차 및 가전기기 편의성 증대
 - 무선전력전송 표준 및 인프라 조기 구축, 사막 등 오지 신시장 진입

■ 융·복합 환경기술개발 확대 추진

- 정보통신기술·바이오기술 등 異種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악취, 녹조, 초미세먼지 등 환경난제 해결
 - 센서기반의 환경피해예방 첨단 환경감시기술, 환경피해 오염 저감소재 개발, 로봇을 활용한 환경재난 대응기술 등
-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력 증진과 환경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
 - ICT 기반 생태계 및 환경·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기술, 화학 사고 등 환경재난 대응기술 개발 등
- 다부처 R&D 및 Bridge 프로그램* 확대를 통한 투자효율성 강화
 - * 미래부 등 타 부처에서 개발한 우수 기초·원천 연구성과 중 환경분야에 실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후속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과 연구성과 제고

■ 농업분야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·보급

-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 기술 개발
 - ICT융합 스마트원예시설 산업화 모델 개발, 스마트 농작업 자동화·로봇화 기술 개발
- 작물생육 정밀관리 기술개발
 - ICT 기반 작목별 생육단계별 최적 환경설정 모델 개발 등
-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
 - 시설농업 ICT 융복합 운영활성화 모델 개발, 스마트팜 측정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등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GDP 대비 R&D 지출 비율(%) | 4.15('13) | 5.0 |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 / GDP |
| GDP 대비 순 투자율(%) | 29.0('14) | 33.0 | GDP 대비 총생산자본 형성 비율 |

3-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

3-2-① 재사용-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

소관부처 환경부, 산업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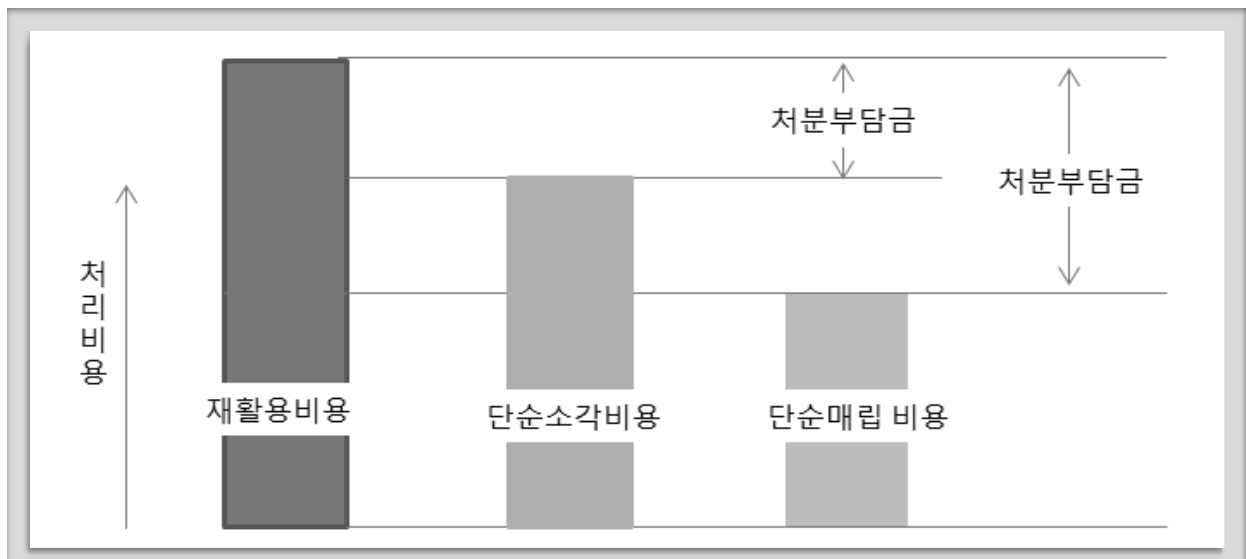
■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

● 자원·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자원순환사회의 제도적 기반마련

※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('16)

- 폐기물이 일정요건(경제성, 환경성)을 충족시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부담완화와 국민 안전성 담보
- 폐기물 다량배출업종(발전·철강 등 18개 업종)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 관리제도*를 운영하여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, 폐기물 처분 최소화
- * 폐기물처리 전 과정을 고려하여 최종처분율, 재활용률, 에너지회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자의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목표를 할당 후 평가·환류하는 제도
- 직매립제로화를 위해 매립·소각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도입

※ 단, 자가 처리의 경우나 중소기업 등에는 처분부담금을 감면



- ‘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’을 기본 골격으로 폐기물 관련 법률을 목적과 기능 조정 등 법령체계 개편
 - 폐기물 처분 분야는 「폐기물관리법」에, 재활용 분야는 「자원재활용법」과 「건폐재활용법」으로 이원화하여 유사·중복규제 해소 및 사업자 부담 경감

■ 자원의 재사용·재이용 촉진

- 빈용기보증금 현실화, 폐자원(폐가구, 가전제품 등) 수거체계를 개선(거점수거 → 문전수거)하여 재사용 등 고부가 자원순환 극대화
- 폐기물로 버려져 낮은 가격의 소재로 순환되는 자원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품화하는 업사이클(Upcycle) 산업 활성화
- 재활용 관리제도를 선진화(포지티브방식 → 네거티브 방식)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발굴
 - 환경과 인체건강에 위해성이 없는 재활용 가능자원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, 관련 신기술의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단축(2년 → 즉시 또는 6개월 이내)
 -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(폐기물 분류 세분화, 재활용 가능여부 제시 등)
-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지속(~'20)
 - 재활용기술 업그레이드 및 희유금속 대체금속 개발 등 폐금속·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강화
 -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

■ 도시광산 산업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

- 희소금속 회수 상용화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등의 재활용 기술개발
 - 도시광산 전략금속을 선정하여 자립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무해한 공정부산물을 활용한 value-up 소재화 기술개발 지원
 - * 「자원순환이노베이션로드맵 2016」의 도시광산 분야에서 관련된 중점기술 및 핵심기술을 선정
- 도시광산 회수 재활용 금속의 품질인증 및 정부비축
 - 도시광산 산업을 통하여 회수한 재활용 금속에 대한 GR인증 품질표준 및 정부 비축대상 재활용 금속을 지속 확대
-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
 - 자동차 부품, 화학촉매, 생활용품 등 품질인증 대상 품목 확대, 중소 재제조기업 맞춤형 현장진단지도 지원 및 품질인증 취득 촉진
 - * 「재제조 대상부품」 공동고시(산업부, 환경부) 개정을 거쳐 재제조 대상 제품 확대 : ('14) 자동차 부품 등 39개 → ('20) 소산업분야 100개
- 품질인증 재제조시장 확산 및 안정화 기반 구축
 - 대형마트 연계 판매 확대, 재제조산업 발전협의체 발족 등 중장기 안정화 기반 마련

■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기반 조성

- 물질흐름분석(MFA) 및 물질흐름 통계 구축·갱신
 -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63개 금속별 전과정에 대한 물질흐름분석 및 통계구축·갱신
 - * '15년까지 63개 금속에 대한 통계구축을 완료하며, '16년도부터 통계갱신 추진
 - 전과정 물질흐름단계별(8단계) 통계분석, 금속별 물질흐름분석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자원 전과정 프로파일 구축 등 수행

-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운영
 - 구축한 물질흐름분석통계를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운영
 - 산업계(제조)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
 - 체계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보급·확산으로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
 - 쉐생산공정(폐기물관리 포함)에서의 물질·에너지 손실 최소화, 품질·수율·가동률 최대화 등을 통한 산업계의 효율적 자원관리 지원
 - 자원관리 전문기업 육성 및 수요기업 공정 개선 지원을 통한 자원관리 시스템의 산업계 확산
 -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자원관리 전문기업 육성, 자원관리 전문기업을 통한 자원관리 수요기업*의 공정개선 지원
- * 철강, 비철금속, 자동차부품, 전기·전자부품 제조업체(자원多소비 업종)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재제조 대상제품(개수) | 39 | 100 | 재제조 대상 제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|
| 물질흐름분석 통계구축·갱신 금속 수(개) | 15 | 20 |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연도별 통계제공 금속 수 |
| 자원생산성(원/kg) | 1,382('14) | 1,719 | GDP/(국내채취량+수입량) |
| 재활용률(%) | 83.2('13) | 90 | 재활용량/국내 폐기물 발생량 |

3-2-②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

소관부처 산업부, 환경부

■ 중소·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

-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중견·중소기업 사업장 중심의 청정 제조기술 개발 및 보급
 - (기술개발) 다수의 중소·중견기업 보급 가능성이 높은 범용적 장비·공정에 IT, 서비스 등 이종(異種)기술을 융합하여 효율성을 높인 기술 개발과 보급에 초점
 - (기술보급) 보편적인 R&D사업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“개발 - 이전” 방식과는 달리 “발굴 - 개발 - 보급” 방식의 수평적 이전(산업계 보급)으로 확산을 도모
- 대기업의 환경경영 기법·기술 등 노하우를 중소협력사에 이전하여 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공동 대응기반 구축 지원
 - (기반구축) 화학물질·에너지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모기업-협력사간 그린파트너십 체계 구축
 - (성과확산) 중소협력사 지원을 위한 산업부-모기업 대표간 자발적 협약식 개최, 성공사례집 발행 등 산업계 성과보급 및 확산 추진
- 중소기업, 비제조업 분야 등의 친환경 경영 역량강화 [환]
 - 중소기업 조합·협회 단위의 효율적인 환경경영 확산 위한 그린업 프로그램 운영
 - * 참여 조합·협회의 소속기업을 대상으로 ‘Green-Up 멘토링’ 도입·운영
 - 의료기관·영유아 교육기관 등 비제조업 분야의 친환경 경영 컨설팅 지원
 - * 보건·의료분야 환경경영 협의체 운영(4회) 및 환경경영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
 - 중소기업의 친환경 아이템을 발굴하여 녹색시장을 확산하기 위한 혁신형 에코디자인 지원사업

■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

-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인식 확산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컨설팅 제공
 - 국가별·산업별 환경규제 최신 동향 및 대응 가이드 제공
 - * 환경규제 제개정 동향 분석을 통한 이행방법 및 유망 기술 등을 제공
 -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지원 및 역량 강화
 - * 콜센터, 인터넷 상담, 1:1 맞춤형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지원 및 수출 애로를 해결
- WTO/TBT 협정* 역이용을 위한 국제표준기반 친환경제품(서비스) 인증 체계 및 신제품 R&D 인프라구축 추진
 - * 세계무역기구 기술무역장벽 철폐협정, 국제표준에 근거한 환경 관련 인증은 기술무역장벽의 예외로 인정
 - 국제표준에 따른 물발자국 인증 체계구축 추진을 통한 EU 등 선진국 시장과 호환성 있는 친환경제품 인증기반구축 추진
- 자원순환 및 친환경제품설계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및 유니소재* 화 제품 개발
 - *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재 종류의 개수 저감, 제품의 구조개선을 통한 단순화, 단일화된 소재
 - 자원순환형 친환경제품 개발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상용화 지원, 제품 개발을 위한 방법론의 국내외 표준화 추진

■ 기업의 친환경정보와 녹색 금융연계 강화

- 금융권과의 친환경금융 연계기반 구축을 통한 우수 환경기업 금융지원 수혜체계 내실화
 - “녹색금융지원 정보시스템(enVinance)”을 기반으로 금융권과 연계하여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우대 확대

- 환경정책자금 용자사업의 운영규정* 개정으로 공공부문 용자사업의 녹색 금융화 추진 및 민간부문의 녹색금융 활성화 지원
 - * 환경정책자금 용자운용요강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용자심사승인기준 등
- 선진국 사례분석, 국제기구* 협력 등을 통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보 평가기법 개발 및 국내 유관기관** 교육·홍보 추진
 - * OECD(환경정보작업반, 환경경제통합계정 TFT), UNEP Financial Initiative 등
 - **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제1금융권(은행), 제2금융권(손보사, 투자사) 등
- 신뢰도 높은 환경정보 제공 및 제도 홍보, 활용교육을 통한 환경정보공개 제도 활성화 도모
 - 환경정보 현장검증 및 검증위원 역량 강화* 등 환경정보 신뢰 제고
 - * 검증위원을 경력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관리 체계화(관련 고시 개정)
 -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정보 등록 교육 및 등록 지원 확대
- 녹색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친환경경영 관리 강화, 인지도 제고를 통한 친환경기업 경쟁력 제고
 - 중소기업 맞춤형 혜택 발굴, 녹색경영보고서 검토 강화, 협의회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기업 내실화 및 제도운영 효과성 증진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
|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참여중소기업 지원 수(누계) | 1,768 | 2,280 |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참여중소기업 지원 수 |
|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정보 및 인식 공유(명) | 13,537 | 22,000 |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(www.compass.or.kr) 이용자 수 |
| 환경경영 보급사업 실시사업장 수(개소) | 45 | 50 | 그린업 프로그램, 에코디자인 현장진단·지도 등 녹색경영 실시 사업장 수 |

3-2-③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

소관부처 환경부, 조달청

■ 친환경소비 실천률 향상

- 친환경소비 정책 기반 강화
 - 녹색제품 정보를 공공·산업 기관별 구매시스템(경영정보망, MRO 등)에 연계
 -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-중소기업간 “동반성장 파트너십 인증지원 사업” 실시(대기업이 협력사의 친환경제품 인증 획득 지원)
 - “친환경 소비생활 지표” 개발(녹색제품 구매율, 대기 전력 차단률 등)
- 국민의 친환경소비 실천 인식 제고
 - 친환경소비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로 학교 교육과 연계 강화 (친환경소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)
 - 친환경소비 관련 웹툰, 이모티콘 개발·보급

■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

-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 정책기반 확대
 - 지자체 조례 제·개정 지원으로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률 제고
 - 공공기관 녹색구매 실적 업무평가 반영기관 확대
 - 물품규격에 환경요소(에너지소비, 유해물질저장, 재활용 등)를 반영하고, 최소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 허용
- 녹색제품 구매 우대제도 운영
 -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
 - 공공분야 녹색구매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녹색구매 활성화 정책 추진

| 녹색제품 우대제도 | |
|-----------|---|
| 분 야 | 인센티브 |
| 물품구매 적격심사 | 신인도 가점 부여(0.7점) |
| 우수조달물품 | 1차 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|
| 종합낙찰제 |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평가시 평가요소에 가격평가와 성능평가 외 환경평가 포함 |

■ 수요기반 녹색제품 생산·유통 활성화

- 녹색제품 생산·유통 정책 기반 확대
 - 녹색매장* 지정 확대('15년 300개소 → '20년 550개소) 및 인센티브 강화
 - * 환경친화시설, 경영시스템, 경영활동, 환경개선 등 친환경성을 갖춘 환경부 지정 매장
 - 에코인테리어 업소 확대('20년까지 누적 200개소)로 친환경건축자재 유통망 개척
 - 신규 친환경제품 개발시 환경표지 제도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환경표지인증 기준 개정
-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
 - 어린이용품, 생물다양성 환경표지 신규 도입
 - 환경성·안전성이 탁월한 환경표지 제품 대상 '프리미엄 환경표지' 인증제도 도입
 - 인증마크 통합로고 개발(디자인 통일화로 인식도 제고)
- 친환경위장 제품 관리 강화로 녹색생산, 유통의 건전화
 - 부당한 표시·광고 시장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확대
 - 환경성 표시·광고 사전검토 제도 시행('16~'20년, 50건 이상)

■ **친환경시장 경쟁력과 국내·외 협력 강화**

- **친환경시장 경쟁력 강화**
 - 제품품질과 환경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100개에 수출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(~'20년)
 - 우리기업의 UN, KOICA 등 국제기구 조달입찰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판로 개척
- **국내 협력 네트워크 확대**
 -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확대로 지역 거점 마련('15년 5개소 → '20년 17개소)
 - 국립공원, 국립생물자원관, 국립생태원 등 자연보전 기관과 연계한 방문객 맞춤형 기획 전시, 교육 프로그램 개발
- **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**
 - ‘아시아 지속가능구매 지식허브 센터’ 유치*
 - * ‘UN 지속가능 소비·생산 10개년 계획(10YFP)’에서 설립 추진 중인 ‘대륙별 지속가능 공공구매 지식허브 아시아센터’ 유치
 - 유엔환경계획(UNEP), 생물다양성협약(CBD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등 역량 있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녹색매장 수(개) | 300 | 550 | 녹색매장 지정심의위원회 승인 점포 수 |
|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(%) | 39('14) | 60 | (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액) / (공공기관의 녹색제품 분류군내 총구매액) |
| 녹색제품 구매실적(억원) | 61,000('14) | 72,000 | 녹색제품 구매실적 |

3-2-④ 저탄소생활 확산

소관부처 환경부, 국토부, 산업부

■ 녹색건축 인증제도 내실화

- 자원 절약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 내실화
 - 국제적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, 기술발전 및 시장의 흐름에 맞춰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주기적 개정 및 운영
-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설계전문가 양성
 - 녹색건축전문가와 기존 설계실무자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녹색건축 인증의 체계적 추진

■ 친환경 운전 확대

- 친환경 운전방법*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연료소모량·연비 등 주행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친환경경제운전 안내 장치 및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앱 보급
 - * 일정속도(70~80km 이상) 주행 중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연료 소모 없이(Fuel-Cut) 관성으로 이동
- 경제운전 체험교육 시행 및 가상체험관을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유도
 - 에코드라이브 홍보물품 제작·배포,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개최 및 홍보작품 공모전을 통한 에코드라이브 실천 홍보
 - * 에코드라이브 체험교육인원 : 22,539인('15) → 36,700인('18)
 - 기관·단체·기업 등과 에코드라이브 실천협약(MOU) 체결 확대
 - * 협약체결 기관(누계) : 2,666개('15) → 3,100개('18)

-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

- 대국민 친환경운전 공모전 개최하여 운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

- * 표어·포스터, UCC, 실천수기, 사업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여 우수사례를 발굴·전파

- 매년 일반운전자들이 직접 참가하는 ‘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’를 전국 규모로 개최

- 저탄소생활 실천네트워크 확대

-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전개의 중심기구인 한국기후·환경네트워크 활동 확대 및 역할 다변화

- 생활밀착형 저탄소생활 실천프로그램 발굴·보급 및 다양한 친환경 실천 운동과 연계 확산

- 대국민 기후변화 교육기반 확대 및 국민 참여형 저탄소문화 캠페인 전개

- 기후변화주간 행사, 저탄소명절 만들기, 친환경여행 만들기, 쿨(cool)·온(溫)맵시 등 시기별 캠페인 확대

- 저탄소 생활 프로그램 활성화

- 저탄소생활 및 소비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정·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

- 공동주택 참여확대를 위해 단지별 참여율·절감량 등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급·시상

- * 참여방법 : 탄소포인트 홈페이지(<http://cpoint.or.kr>) 가입 또는 시군구 직접신청

- 탄소중립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
 - 사회적 활동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에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 우수기업 발굴 및 모범사례 전파
 - * 기업, 영업점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절약과 탄소저감 실천
 - 프로그램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대단위 국제경기 등 국내·외 행사의 배출량 산정과 상쇄실행 지원
 - 탄소중립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지원
 - * 기부감축으로 조성된 상쇄금을 활용,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건수(건) | 7,909 | 9,704 |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한 건수 |
| 지역기후변화교육센터 (개소) | 90('14) | 110 |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기후변화교육센터 개수(연말 지자체별 추진실적 자료) |
| 친환경 경제운전 이수 실적(명) | 5,500 | 8,860 | 에코드라이브 연간 교육이수생 수 (상주센터, 교육실행인증기관) 매년 10% 향상 실적 |
| 탄소포인트제 운영 CO ₂ 절감량(만톤) | 106 ('14) | 230 | 당해연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세대의 온실가스 감축량 (전년도 7월~당해연도 6월) |

3-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

3-3-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

소관부처 산업부, 국토부

■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 시행

- 전기요금 체계는 수요관리를 강화하고, 원가에 기반하여 전기소비자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
- 수요관리형·선택형 요금제*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
 - *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원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시간대는 할인하는 선택형 요금(I. 자발적인 절전 유도형, II. 수요관리투자유도형)
 - 계절별·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 확대하고, 전기소비자별 상이한 전력사용 패턴 등을 고려한 선택형 요금제 개발·적용
-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용도별 요금격차 왜곡 최소화

■ 에너지공급시스템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

- 집단에너지(지역 냉·난방) 보급 확대
 - 폐열·여열을 활용하여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난방 보급 확대
 - * ('14) 244만 가구에 공급 → ('20) 345만 가구에 공급
 - 수도권 서부지역 미활용열에너지를 서울 도심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
 - * ('15) 경제적 타당성 검증 → ('16) 배관망 건설공사 → ('16) 열공급
- 고효율인증, 효율등급 등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국가에너지 절감
 - * 대상기기 : 전기냉장고, 김치냉장고, 전기세탁기 등 27개(등급), led램프, 펌프 등 45개(고효율)

■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확보

- 건물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재, 외피, 시스템 통합운용의 상용화를 통해 제로에너지 건물 달성 촉진

- 에너지다소비 산업군의 공통 산업기기 효율향상과 효율운영 분석 기반 에너지절감 솔루션 등 EMS 모듈화 기술개발
- 스마트그리드의 분산전원화를 촉진,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구현, ICT 기반 ESS, EMS, TEN(열에너지네트워크)의 에너지 통합 솔루션으로 공급인프라의 확충을 저감
- 국가 전력시스템의 전체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간망 전력저장시스템 개발
 - * UPS, 전압보상, 신재생 에너지저장, 계통 안정화 등

■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강화

- BEMS* 원격광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, 분석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수요관리방안 제공
 -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사용 패턴정보를 축적하고 다양한 조건(계절별, 시간별 등)에 따른 통계분석을 통해 건물특성에 따른 에너지수요 솔루션 제공
- * BEMS(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) :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·제어·관리·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량 | 1,778 | 1,869 | Σ (고효율제품의 연간 소비전력량 - 일반제품의 연간 소비전력량) × 연간 판매량 |
| 에너지절감량(TOE) | 183,716 | 219,365 | Σ (사업화건별에너지절감량 × 보급대수 or 작동시간) ※ '14년 실적 대비 매년 3% 절감 목표 |
| 지역난방 보급가구 수 (만 가구) | 244('14) | 345 | 지역난방 보급가구/전체 가구 |
| 에너지 원단위 (toe/백만원) | 0.247('13) | 0.226 | 1차에너지 소비량 / GDP |

3-3-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
소관부처 산업부, 농식품부, 환경부, 미래부, 산림청, 농진청, 해수부

■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단계적 확산

- (1단계) 정부 주도로 확산 기반 조성('15~'17)
 - '17년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 15~20개소 지정을 추진*하고, 친환경에너지타운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**
 - * 각 부처에서 지자체 등을 통해 발굴된 '15년 후보지역 7~10개소, 이중 주민 참여를 통해 실제 착수 가능한 곳은 5개 내외 수준으로 전망
 - ** 성공사례 창출, 사업지원 시스템 구축, 신재생에너지 수익성 향상 등
- (2단계) 민간 주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본격 확산('18~)
 -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추가 사업지 확대 등 본격 확산, 주요 모델은 수출 브랜드화* 등 추진
 - * 세계은행등과 협력, 동남아 등 개도국 진출 추진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1단계 ('15~'17) | 목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주도의 확산 기반 조성 • 15~20 여개 지정 |
| 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유형 발굴 • 지원 정책 등 제도 정비 • 발전단가 저감기술 등 전략적 R&D |
| 2단계 ('18~) | 목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주도로 본격 확산 |
| 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형별 성공사례 홍보 • R&D 성과창출 • 한국형 모델 수출브랜드화 |

■ 소규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참여 확대

-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물량 지속 확대
 - *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: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REC 판매시 발전사업자-공급의무자간 고정금액으로 장기간(12년) 계약·거래하는 제도
-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계통연계비용 절감방안 마련 및 접속용량 확대, 설비보강 등 검토·추진

- 주민이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,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‘소비자 참여기반’의 수익모델 확산
- 태양광 대여사업 등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보급확대

■ 신재생에너지 R&D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

- 신재생에너지 R&D 역량 강화
 - (단기) 조기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단가저감, 사업화, 실증, 정책연계형 등 실용적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
 - (중장기)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도 기술 및 융복합형 기술개발 추진
- 전기 에너지 중심에서 수송·열에너지로 시장을 확대
 - ※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제도(Renewable Fuel Standard) 확대시행('15.7월)
 - ※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현행 2.0% → ('15.7월) 2.5% → ('18년) 3.0%
- 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등 국내 활용가능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방안 모색

■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

- (농업)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및 기술 개발
 - 농업용 저수지 및 하천 취입보에 소수력발전소* 건설 지속 추진
 - * 소수력발전소(누계) : 25개소 16,676kW('14) → 36개소 17,649W('16) → 42개소 19,889kW('18)
 - 양·배수장 옥상에 태양광발전소*를 설치하고, 서·남해안 방조제의 유휴 부지에 풍력발전기** 설치
 - * 태양광발전소(누계) : 24개소 9,407kW('14) → 34개소 15,224kW('16) → 37개소 18,724kW('18)
 - ** 풍력발전소(누계) : 1개소 3,000kW('14) → 2개소 5,000kW('16) → 3개소 8,000kW('18)
 -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신품종 개발, 바이오디젤용 유채품종 선발 및 안정다수확 재배기술 확립

- (산림) 목재펠릿 수급·유통체계 정비를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
 - 목재펠릿의 수급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
 - 전국적 유통망 구축을 통해 소비자 구매 접근성 향상
- (해양) 해양에너지 분야 보급사업 추진 및 인프라 구축
 - 해양에너지 상용화*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(R&D) 적극 추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체계 구축
 - * 파력, 조류, 해수온도차발전 및 융·복합발전 등
 - 해수냉난방시스템,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시스템 등 해양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
- (폐자원) 기존 소각·매립 등 단순처리에서 벗어나 SRF 제조시설,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자원회수시설 지속 확충 추진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업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규모(MW, 누계) | 29 | 53 |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규모 |
| 해양에너지발전설비(MW) | 255 | 835 |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|
|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(%) | 4.08('14) | 5.0 |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|
|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| 1 | 10 | 친환경에너지타운 개소수 |

3-3-③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

소관부처 산업부, 원안위

■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 전환

-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LP가스·전기시설 등 생활 밀접분야 안전지원 확대
 - 농어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하고 취약계층의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무료교체
 -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기안전 응급조치 수혜대상을 저소득층 가구에서 전체 주거용으로 확대
-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안전 인프라도 중·장기적으로 마련
 - 독성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독성가스 법정 전문교육 신설 및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
 - 고압가스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속품이나 안전설비, 보호장비 및 방호 설비 등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 도입
 - 기업체, 대학, 연구소 등의 사용후 잔가스에 대한 안전한 중화처리를 위해 「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」설치

■ 원전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

- 원자력 안전규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반 혁신
 - 규제 대상 확대* 및 비상 시 방사능 재난 유기적 대응체계** 구축
 - * 설계자, 제작자 등
 - **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등
 -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규제 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

- 방사선 안전 및 재난대비체제 강화
 - 원전 부지별 지역사무소 설치, 전문분야별 전담인력 상주, 원전현장의 전문 기술인력 및 장비 보강
 - 방사능방재 체계를 강화 및 핵비확산 이행 역량 강화
 - 가동 중인 모든 원전에 대해 안전성 개선사항 적용
 - 신규 원전의 경우에는 도출된 안전성 개선사항을 설계·건설단계에서부터 조기 반영
-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을 토대로 「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추진
 -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마련

※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('16)
- 안전 최우선의 원칙하에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·운영 추진
 - '15년부터 1단계 동굴 처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, 방사능 준위가 낮은 방폐물 처분을 위한 2단계 표층 처분시설 건설 추진

* 중저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: 1단계 준공('14) → 운영('15) → 2단계 준공('19)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독성가스 법정 전문교육 이수자(명) | 1,000 | 1,250 | 독성가스 안전관리자 법정 전문교육 이수자 |
| 고압가스 시설 안전인증 건수(건) | - | 100,000 | 검지기(센서류 포함), 제독설비, 초고압가스 부품 등 인증건수 |
|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 | 1단계 운영 | 2단계 준공완료 |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현황 |

4 글로벌 책임 국가

(1) 중점 추진 방향

| | | |
|---|---|---|
| 개도국 지원 강화 |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 | 동북아 환경공조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지원 • 환경분야 지원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30 목표 이행계획 수립 •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후, 황사, 사막화 방지 • 남북 환경협력 |

(2) 전략 및 이행과제

| 전략(3개) | 이행과제(8개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-1.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| 4-1-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|
| | 4-1-②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|
| 4-2.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| 4-2-① 신기후체제 효과적 대응 |
| | 4-2-②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|
| | 4-2-③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 |
| | 4-2-④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|
| 4-3.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| 4-3-①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|
| | 4-3-②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|

(3) 주요 성과지표

| 주요지표 | 2015년 | 2020년 | 2035년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| GNI 대비 ODA 비율(%) | 0.13 (’14) | 0.20 | 0.30 |
|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(tCO ₂ eq/인) | 13.83 (’13) | - | 10.27 (’30) |
| 실질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(tCO ₂ eq/10억원, ’10년기준) | 502.9 (’13) | - | 254.1 (’30) |

4-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

4-1-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

소관부처 국조실, 기재부, 외교부, 환경부

■ 개도국 SDGs 이행지원 전략 마련

-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ODA 지속 확대
 - '20년까지 GNI 대비 0.2% 달성
 - 2030지속가능개발의제가 종료되는 '30년까지 0.3%목표로 추진

- (지역별) 아시아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 점진적 확대
- (소득그룹별)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원조 지원
- (분야별) 보건·교육·농촌개발 등 사회분야와 함께 경제인프라,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등 SDGs의 방향에 부합하게 배분
- (형태별) 프로젝트 외에도 NGO·PPP 지원, 프로그램 원조(PBA) 분야 등 지원 형태 다변화

- 유·무상 전략, 국가협력전략, 다자원조 전략 수립 등으로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합적 ODA 추진
 - ODA 콘텐츠 재정비, 사후관리 강화, 평가환류 강화 등을 통해 내실있는 ODA 추진
 - 범국민 이해·참여 강화, 시민단체·기업·학계 파트너십 다원화, 민간재원 활용 확대 등 함께하는 ODA 추진

■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

- 신재생 에너지,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지원 확대
 - EDCF 우선지원 분야로 금리 인하 등 지원조건 우대 적용

- **(양자무상)** 수원국 개발전략 및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
 -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중점 고려한 ODA 사업 발굴
 -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국내 환경기술을 전파함으로써 개도국 역량강화(capacity building) 및 우호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
- **(다자원조)** 국제기구 기여금을 증액하여 개도국 환경 문제 해결 지원 및 환경외교 역량 강화
 - 기후변화,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
 - 의무·자발적 분담금 납부로 외교 주도권 확보 및 국가 위상 제고
 -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(UNOSD)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한국형 정책모델의 확산 추진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GNI대비 공적대외원조 (ODA) 비율 | 0.13('14) | 0.2 | 국민총소득(GNI) 총액 대비 공적 대외원조 총액(ODA) 비율 |

4-1-②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

소관부처 외교부, 기재부, 미래부, 환경부, 산림청

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강화

- 빈곤퇴치, 식량안보, 전염병 문제 등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협력 강화
 - UNDP(개발), UNICEF(아동), WFP(식량)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
-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 및 지분확대로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
 - 다자개발은행(MDB) 증자 및 양허성 기금의 재원보충에 참여하여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지분을 확대
 - 빈곤감축·기후변화·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은행(WB)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
 - 우리 개발경험 및 기업·인력들의 역량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지역개발은행*에 대한 지원 확대
 - *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(AIIB),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, 미주개발은행(IDB),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
 -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이행기구 인증 추진, 국내 기업 참여지원 등 GCF와의 협력 강화
- UNEP, UNESCAP 등과 환경분야 협력 사업 추진
 - UNEP의 개도국 녹색경제이행 지원사업(PAGE: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)* 추진(~'20)하여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략 수립·이행 및 역량강화
 - * PAGE 사업체계 : 1) 개도국 이해관계자 동원 및 정책개발, 2) 개도국 녹색경제정책 이행 지원, 3) 글로벌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, 4)녹색경제 지식공유 활동
 - UN ESCAP과 공동으로 3단계 “서울이니셔티브사업(SI: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)” 추진('16~'20)하여 아·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및 우리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모색

■ 다자간 환경협력 강화

-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('14, 평창)에서 채택된 국제 이니셔티브 이행 촉진
 - '바이오브리치 이니셔티브' 관련 사업실행계획('16~'20)을 수립하고, 기여국 발굴, 시범사업 개발,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
 - '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' 관련 사업실행계획('16~'17)을 수립, 동아시아 지역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
 -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(FERI)이행 촉진으로 아이치**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

* FERI(Forest Ecosystem Restoration Initiative) :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('14.10, 평창)에서 채택, 개도국 산림생태계복원 직접지원 및 능력 배양 지원

** 아이치 생물다양성 COP10 목표 : 5(서식지 손실 저감), 11(보호지역 확충), 14(생태계 서비스 증진), 15(생태계 복원)

-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의 산림경관복원 매커니즘(FLRM) 이행 지원을 통해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 촉구
 - 경관 차원의 산림복원 촉진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해 개도국* 지원

* 지원국가 : 과테말라, 르완다, 페루, 우간다, 레바논, 필리핀, 캄보디아

4-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

4-2-① 신기후체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

소관부처 환경부, 외교부, 미래부, 산업부

■ 신기후체제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후속협상 대응

-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(BAU Δ 37%) 이행계획 수립
- 新기후체제에서 적용될 세부 이행지침 개발을 위해 국제협상 대응(~'20)
 - 유엔기후변화협약 공식 및 비공식 협상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
 - 기후변화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한편,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
 - 주요국과 기후협상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협력 강화

■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

- 유엔기후변화협약 「기술메커니즘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협력의 주요 정책 제안 및 기여 확대를 위한 한국의 역할 및 리더십 강화
 -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 메커니즘 참여 확대
 - 파리 총회 등을 통한 선진국-개도국 간 기술협력 촉진 기여
- 기술·인력 교류, 글로벌 현안 해결 등 목표에 최적화된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·추진
 -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통해 기술수준 향상
 - 온실가스 감축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프로젝트 활성화
- 관련 부처·기관의 기술협력을 전략적 방향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
 - 국가 기술협력 창구(NDE) 지정('16)
 -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민·관 합동 포럼 구성·운영('16~)

4-2-②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

소관부처 기재부, 환경부, 산업부, 산림청

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정착

- 5년 계획기간 체제로 운영하되, 시행 초기('15~'17, '18~'20)에는 3년 단위로 운영
 - 1차 계획기간('15~'17)은 전면 무상할당 등 목표관리제 방식과 최대한 연계하되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및 유동성 확대 추진



-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관리
 -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급등락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기 대응
- 배출권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
 -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경쟁력 감소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진을 위해 감축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 실시

■ 감축유연성 제고 및 탄소시장 활성화

- 배출권 할당업체의 감축 유연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
 - 외부사업 상쇄제도(Offset)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 발굴 및 수요자-공급자 연계 지원
 - 온실가스 감축실적 배출권 거래소 상장으로 거래비용 절감과 거래 활성화 추진

- 비의무시장 감축사업 활성화 및 활용가능성 제고
 - 중소기업의 감축아이템 발굴 및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그린크레딧 사업, KVER 활성화 도모
 - 우수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등록하여 사업 활용가능성 높일 수 있도록 지원

-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(REDD+) 시범사업 추진
 - 중점 4개 협력국가의 REDD+ 활동 개발과 시범사업 추진, 자발적 탄소 표준(또는 UN-REDD 기준) 적용 등으로 탄소배출권 확보기반 마련
 - * 중점 협력국가 :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미얀마, 라오스

-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활성화 및 거래기반 마련
 - 해외 자발적 탄소상쇄제도(VCS 등)와 연계기반을 마련하여 산림탄소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별 거래 인프라 구축
 - * (초기) 산림탄소센터를 통한 탄소흡수량 중개거래 → (안정화) 산림탄소 등록부를 통한 거래 → (거래량증가) 배출권거래소 및 해외시장 연계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’15) | 목표 (’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(tCO ₂ eq/십억원) | 502.9 (’13) | 254.1 (’30) | 온실가스 배출량 / 실질GDP(’10년 기준, KDI 잠재성장률 전망치(2014) 적용) |
|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건수 (건) | 20 | 25 |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건수 |

4-2-③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

소관부처 국토부, 산업부, 농식품부, 환경부, 해수부, 농진청

■ 산업·발전 부문 감축 역량 강화

- 중소기업 목표관리제도 이행 지원, 대·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동반감축 촉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역량 강화
 -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운영으로 이행지원 강화
 - 신규 개발 또는 기 상용화된 우수 감축기술·설비에 대한 실증보급 및 사업화 지원 추진
 -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확산,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등 지원대상 확대

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

- 패시브건축 의무화('17) 등 건축물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
-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성능을 향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'25년 이후 단계적 도입
- 공공기관, 건축물, 가정 등 건물부문에 대한 녹색기술(BEMS 등) 확산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
-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로 민간부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유도

■ 저탄소 교통·물류체계 구축

- 도심 버스전용차로 통행속도 제고 및 BRT 중심의 버스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* BRT 노선확충 : 207km('15) → 276km('20)
- 물류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행 활동 강화
 - 제3자 물류 및 공동물류 확산,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 확대
 - *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 : 181개('15) → 240개('18)

- 친환경·저탄소 교통수단으로 전환 촉진을 위해 전환교통(Modal Shift) 지원사업 시행
 - 도로에서 철도·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이 전환되는 화물 또는 신규로 철도·연안해운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
-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에너지소비 효율기준 강화
 - 차기 승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(연비 17km/L, 온실가스 140g/km)을 선진국 수준*으로 강화('16~'20)
 - * 선진국 기준 : EU 26.5km/L(95g/km), 미국 23.8km/L(113.1g/km), 일본 20.3km/L

■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

-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농업부문 이행계획 수립·추진
 - 농업 분야 5개 세부이행과제*를 통해 '20년까지 농업분야 감축목표 달성 추진('20년 BAU 28.49백만톤 대비 1.48백만톤(5.2%)을 감축)
 - * ① 논 간단관개 면적 확대, 화학비료 사용 절감, ②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및 양질조사료 보급 확대, ③ 농어업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 축소, ④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및 규제도입, ⑤ 농업배출량 평가체계 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
- 농어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
 - 경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에 대한 검증 방법론 개발
 -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 측정-보고-검증(MRV) 표준화 매뉴얼 개발
 -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탄소 격리효과 우수자재 선발
 - 고효율 LED 집어등(集魚燈) 성능개선, 연근해 호형어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로 연근해 어선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

■ 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강화

- 공공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개선
 - 공공부문 감축잠재량, 감축기술 분석 등을 통해 중·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지원

- 공공부문 감축 선도기관 발굴·육성 및 우수 감축모델 보급·확산, 감축기술 종합 지원센터 구축 등 공공부문 특성에 맞는 감축정책 구현
- 공공부문 건물·시설 특성별 감축 이행방안 구축 및 공공부문 외부감축 사업(Off-set) 발굴·활성화 지원
- 폐기물 부문 감축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 감축정책 및 기술 보급·확대 기반 마련
 - 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이행 지원을 위해 감축 우수사례 전파, 배출시설 유형별 감축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업무 수행

■ 냉매 사용 저감 및 관리 강화

- 환경부-산업부 공동으로 냉매 등 쏘주기(생산-사용-회수-처리)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통계시스템 구축
 - *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생산·사용(오존보호법), 냉매의 관리·처리(대기법), 폐기(폐기물법) 관련 시스템 연계 추진 검토
 - 냉매 관리·처리 등 대상 확대 추진(공기조화기→냉동제조시설 등 포함, ~'17)
 - 냉매 등 회수처리업 등록제 마련으로 냉매 회수·처리 관련 시장 창출(전문 인력 양성 등 병행)
- 친환경 냉매(Low/Non GWP) 개발 등 지원 강화

| 성과지표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(천톤CO ₂) | 509 | 1,484 | 농업분야 온실가스 BAU대비 감축량 |
| 해운분야 CO ₂ 감축량 (만톤) | 30.4 | 40 | • 163* × 백만톤-km(전환물량×거리) * 도로(238)와 선박(75)의 수송 톤-km당 CO ₂ 배출원단위의 차액 |
|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(%) | 15.3 | 30 |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'07~'09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률 |

4-2-④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

소관부처 농식품부, 복지부, 해수부, 환경부, 미래부, 기상청, 산림청, 농진청

■ 기후변화 적응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

- 기후변화 적응개념, 리스크평가, 취약성평가, 기후변화 정보관리, 인력양성 등을 포함하는 ‘기후변화적응’의 법적 기반 강화
 - 국가적응 사업의 목표, 추진방향, 예산의 배분방향, 투자적정성, 감축-적응의 배치·동반효과 등을 심의·의결하도록 법제화
- 기후변화 영향력이 큰 기업·사업장의 자발적·분담금적 성격의 국가·지자체 적응기금* 마련검토 및 사업시행
 - * 영국은 2001년부터 ‘기후변화 부담금(Climate Change Levy)’, 일본은 2011년부터 ‘지구온난화대책세’를 도입하여 화석연료, 에너지사용에 대한 조세도입
- 정책계획, 도시계획,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대규모 공공사업 등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도록 적응 주류화 정책기반 마련
- 민간의 적응대책 수립과 기후적응 컨설팅 시장 확대·운영을 위한 컨설팅 방향, 구성항목, 교육, 인증, 인센티브 등 제도화

■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토대 확충

- 기후변화 관측·감시·예측 역량 강화
 - 다양한 분야(대기, 해양, 지권, 빙권 등)의 다차원적 변화(지상·해상·항공·위성)에 대한 관측-감시-예측체계 구축
 -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상기후 조기탐지 및 조기경보 서비스 체계 구축
-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 기반 확대
 - 지구시스템모델링 운영체계 구축
 - 한국형 부문별(기상·환경·해양·경제·산림) 기후 시나리오 고도화 및 한국형 통합 기후영향 시나리오·모델 개발 및 안정화

- 기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부문별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및 시나리오에 따른 극한현상(폭염, 호우, 가뭄 등) 및 해양환경 상세분석정보 지원체계 구축

-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강화

- 건강·산림·농업·해양·연안 생태계, 문화재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
- 항공관측정보·인공위성정보 등을 활용한 ICT 기반의 해양·하천·산림·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
- 폭염·한파로 인한 온열·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, 극한 기온 건강피해 예측 및 예·경보 체계 구축

-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

-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및 취약성지도의 상세화
- 부문별·부처별로 개별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연계 및 통합할 수 있는 모형(MOTIVE*) 개발

* Model On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

- 경제·사회·환경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도구 고도화 및 시설물 기후변화 리스크 점검체계 마련

■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

- (농업)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추진

- 농업기상 예측정보 생산, 재해발생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추진
- 내재해형 첨단온실 신축 지원, 노후온실 개보수 지원, 온난화 및 이상기상 대비한 적응형 품종 개발·보급 등
- 기후변화가 농어업·농어촌에 미치는 영향,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·평가 및 공표 추진

- **(산림)** 산림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추진
 -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조사·평가·실태조사 방법론 개발 및 평가 실시
 - 기후변화 적응 유망수종 발굴, 유실수·산약초·버섯 등의 신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·보급,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 등으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
 - 산림재해 예측과 대응체계 강화 및 산림생태 통합관리체계 구축
- **(해양)** 해양부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
 - 갯녹음 발생해역이나 바다숲 조성 가능한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(모니터링 등)를 통해 연안 생태계 복원
 - 연안수심 및 지형정보 구축을 통해 해안침수예상도 품질을 고도화하고, 5년 단위로 해안침수예상도 및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 갱신
 - 해안침수예상도,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(15) 등을 구축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
- **(건강)** 건강부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
 -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,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확충(현재 52% → 74%)으로 기상재해지역 응급의료의 지원강화
 - 기후변화 영향 질환관련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센터의 기후변화 영향질환 서비스거점으로 전환 및 예방관리 센터 건립·활성화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'15) | 목표 ('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
|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(면적, km ²) | 700 | 3,000 |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(http://www.agmet.kr)를 통한 정보 제공 면적 |
| 바다숲 조성 면적(ha) | 3,078 | 15,500 | 바다숲 지정 마을어장 면적 합계 |
| 적응대책 수립 기업 수(개) | 10 | 30 | 적응대책 수립 기업의 개수 (결과보고문서) |

4-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

4-3-①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

소관부처 환경부, 외교부, 해수부, 기상청, 산림청

■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및 확대

- 매년 「한·중·일 환경장관회의」 및 정책 대화 등을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3국간 상호 신뢰 구축
- 한·중·일 환경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 추진
 - 한·중·일 3국의 정부, 학계, 기업 관계자간 환경산업, 환경기술 및 정책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
 - * '15.4 중국 상해 개최 완료, '16년 일본 개최 예정
 - '15년부터 한·중·일 환경장관 회의(TEMM*)의 산업계 포럼과 연계
 - * TEMM : 한·중·일 환경장관회의(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)
- NEASPEC*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협력 추진
 - * NEASPEC : 동북아환경협력계획(North-East Asian Sub-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)
- 황사공동연구단, LTP 사업 등 주로 한·중·일 간 추진되어 온 환경협력 사업 참여대상을 몽골, 러시아 등으로 확대

■ 해양환경협력 강화 및 확대

- 해양유류오염, 해양쓰레기, 해양환경 공동조사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 틀 강화
 - 한·일 해양환경 교류협력회의, 한·중/일/러 환경공동위에서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신규사업 개발
 - NOWPAP* 사무국 운영 정상화, YSLME**를 통해 황해 해양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이용 도모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, NEASPEC에서 추진하고 있는 MPA 네트워크 사업 강화 등

* NOWPAP : 북서태평양 해양환경 및 연안역 보전·개발을 위한 실천계획
(Northwest Pacific Action Plan)

** YSLIME : 황해광역해양생태계(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)

■ 기후, 황사, 사막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

● APEC기후센터* 기능 및 역할 확대를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

* APCC : APEC(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) Climate Center

- 지역특성화 기반 아·태지역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
-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대응 협력방안 이행 및 주도적 역할 수행

● 기후변화 감시의 국제협력 강화 및 세계 기술 선도

- 세계기상기구(WMO)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측정·분석기술 보급 확대
- 대기복사 관측의 WRMC-BSRN* 자료 공유 등 국제관측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참여 확대

* WRMC-BSRN : World Radiation Monitoring Center-Baseline Surface Radiation Network

- 전지구 기후변화 원인물질 측정 역량 강화를 위한 KOICA 글로벌연수 추진 및 WMO 온실가스 지역교육센터 설립

● 황사 관련 국제기구 활동 강화

- 황사연구의 통합·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참여
- 「WMO SDS-WAS* 아시아노드 지역위원회」 참석 등 아시아지역 황사 조기 경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
* SDS-WAS : Sand and Dust Storm Warning Advisory and Assessment System

● 동북아 사막화(DLDD)* 네트워크 운영 및 사막화방지 사업 추진

* DLDD : Desertification, Land Degradation, Drought

- 동북아 회원국(한국, 중국, 몽골) 간 사막화(DLDD) 운영위원회 및 사막화방지 포럼 개최(연1회)

* 회원국 정부 및 회원기관 외 동북아지역의 시민사회단체(CSO) 등 참여

- 몽골 및 중국 사막화 지역의 조림사업을 통해 국제 사막화방지 성공모델 제시

4-3-②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

소관부처 통일부, 환경부, 농식품부, 산림청

■ 남북협력 사업을 통한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

- 남북환경협력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 통일대비 환경분야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
 - 북한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면서 남북간 여건변화에 중립적인 환경협력 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
 -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·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
- 병해충 방제, 양묘장 조성, 조림 등 북한 산림복구 및 녹화를 위한 사업 추진
 - 산림 병해충 피해 실태에 대한 남·북 전문가 공동 조사·방제 실시
 - 기존 양묘장 개보수 및 신규 양묘장 조성을 통해 북한 산림생태 및 토양·기후에 적합한 묘목 공급
- 북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농축산·산림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‘마을단위 통합 지원’ 추진
 - 유실수 묘목지원을 통한 식량난 완화 및 연료림 조성을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병행
-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북한 내 환경 분야 역량강화 추진
 - 산림·하천 관리 및 재해대비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
 - 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는 등 남·북·국제사회 전문가 교류 추진

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

기 본 구 상

-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, DMZ를 생태와 협력, 평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계획
 -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역에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
 - 남과 북,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
- * △DMZ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'생태공간' △다방면의 협력을 확산시키는 '협력공간' △남과 북, 국제사회가 서로 소통하는 '평화공간' 으로 조성

- 남북합의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
 - 분야별 연구용역을 통한 「공원 조성 종합계획」 수립
 - 후보지 현지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마련
 - 관계부처와 함께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준비
- 대내외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 전개
 - 심포지엄 개최 등 공론화 활동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
 - 유엔 및 유관국, 환경분야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 협조체계 강화
- 남북관계 상황 주시, 적절한 계기시 대북협의 추진
-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생태자원 현황 등 세부조사 추진을 통해 환경훼손 최소화
 -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생태계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환경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추진

5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

(1) 중점 추진 방향

| | | |
|---|--|---|
|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양방향 소통 강화 |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평가환류체계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 추진기반 강화 평가 강화 및 지표개선 | 사회의 투명성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|
|---|--|---|

(2) 전략 및 이행과제

| 전략(1개) | 이행과제(4개) |
|----------------|---|
|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| ①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③ 사회 투명성 제고 ④ 지속가능발전 평가·환류 체계 강화 |

①

참여적 거버넌스 구축

소관부처 환경부

■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

-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과 실천 확산을 위해 지방의제21등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
 -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,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의 활동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공
 - 지방의제21 활동의 지역실천 확산·공유를 위한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지원
 -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

■ 지속가능발전 소통체계 활성화

- 소통에 기반한 정책을 위한 양방향 민관환경협의회 운영
 - 정부-민간단체 간 주요 환경현안 논의 및 국민생활 속의 환경 애로사항 청취로 실질적 정책수립과 협치 기능 강화
 - 협의회별 희망 논의안건을 사전 협의하여 건전한 정책아이디어 도출 유도 및 제시된 의견 정책 반영으로 정부 신뢰도 및 소통기능 향상
-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공유,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
 - KBCSD(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), 기업환경정책협의회,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등과 협의 강화하여 지속가능경영문화 확산
 -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논의되고 건의된 사항들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산업활동 지원

- 종교단체 환경정책협의회와 환경실천협력 강화
 - 종교단체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, 사회의 정신적 지도 계층인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실천운동 전개 및 협력 강화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’15) | 목표 (’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민간단체, 기업, 종교단체 정책협의회 운영(회) | 4 | 15 | 각 협의회 운영실적 내부결재문서 |

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

소관부처 환경부, 교육부, 산림청

■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

-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·확산
 -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수 운영을 통한 ESD 현장전문가 육성
 - ESD 연구시범학교, 현장교원 중심 연구회 운영 활성화
 - 범교과, 교과 연계 ESD 수업모델 개발·적용 및 학교현장 확산
- 환경교육 기회 확대 및 추진기반 강화로 환경교육 활성화
 - 중앙부처간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하며(환경교육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, '16~), 해양환경교육계획과 환경교육 연계
 - 광역 단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로 환경교육 추진체계를 확립('17~)하고,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연구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
 - 사회 환경교육의 질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('17~)
-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강화
 - 생태탐방·탐구, 자연관찰, 환경프로젝트 등 지역 환경 자원을 소재로 학교,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
 -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 환경원로, 환경전문가 등을 지역사회 환경교육 인력(환경교육홍보단)으로 활용

-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·탐방·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
 - 권역별 산림교육센터 조성 및 유아숲 체험원, 학교숲 확충
 - 수준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)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
 - 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산림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’15) | 목표 (’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ESD 프로그램 개발 건수 | 51(’14) | 61 | ESD 프로그램 개발 건수의 합 |
| 산림교육 수혜 국민(만명) | 186 | 300 | 숲교육 수혜를 받은 학생·학부모 수 |
| 환경교육 수혜자(만명) | 276 | 350 | 환경교육 사업 참여 인력 수 |

③

사회 투명성 제고

소관부처 권익위

■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시행(16.9월)으로 연고·온정주의에 기반한 고질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 근절
-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·보상제도를 강화하여 공공부패와 국민의 건강·안전·환경 등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발생 억제
 -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,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, 신고보상금·포상금 상한액 확대
- 공공재정 누수방지 및 체계적 환수·관리체계 구축
 - 과다계상, 허위증빙 제출,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, R&D 예산 등의 공공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근절

■ 청렴교육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의 규율범위 확장

- 공직자 및 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강화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정착 유도
 -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, 청소년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미래세대의 청렴마인드 정립
-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강화된 공직자 행위기준 확립
 -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

■ 사회 전반의 신뢰문화 확산

- 지역 반부패 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및 시민단체 육성·지원
 - 시민단체, 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단위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추진 및 민간보조를 통한 시민단체 활동 지원
- 「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」를 중심으로 부문·지역 네트워크 간 연대 및 협력사업 개발을 통해 자율적인 청렴운동 확산 유도
- 「청렴시민감사관」제도 운영기관 간 협의회를 구축하여 소통·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운영 역량과 행정 투명성 강화

성과지표

| 구분 | 실적 (’15) | 목표 (’20) | 측정방법/출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 인식 정도(%) | 57.8 | 50 |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‘부패하다’고 응답한 비율 산정 |

4

지속가능발전 평가·환류 체계 강화

소관부처 환경부, 통계청, 관계부처 합동

■ SDGs 지표 연구 및 관련 통계 개발·구축

- UNSD(UN통계처) 국제지표 선정과정 대응(~16.3)
 - ※ '16.3 SDGs 지표에 대한 글로벌 지표체계 확정 예정(UN통계위원회)
- 국제지표의 작성 가능성 검토 연구 및 전략 구축
 - 작성가능 지표에 대해서는 통계개선사항을 도출하고, 작성이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대안 모색
- 지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 모니터링 수행
 - 해당 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지표 관련 오픈 플랫폼 등을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지표개선 등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활용

■ 지속가능발전 평가 강화 및 지표개선

- 국내 지속가능발전계획 성과 평가 및 SDGs 국제 이행평가 수행
 - 격년으로 국내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이행성과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하여 국내·외 공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 평가·환류 체계 공고화
 - SDGs 국제적 이행체계 확정시*, 한국의 SDGs 목표달성 여부 평가를 위해 범부처 협의사항에 따라 수행(관계부처 합동)
- * '16년 UN 경제사회이사회(ECOSOC) 주관 고위급 정치포럼(HLPF)에서 SDGs 이행 후속조치·평가체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를 고려하여 범부처적으로 국내 SDGs 이행체계 방안 논의 필요
- SDGs 지표 확정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 개편 검토

VI

기대효과

- 1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- 2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
- 3 불평등 및 차별 완화
- 4 국민 건강 및 안전 증진
- 5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
- 6 친환경적 경제체제 확립
- 7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
- 8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





1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, 미세먼지 관리 강화, 도심 친수공간 조성, 통합환경 관리제도 도입, 폐기물 수거·처리 시스템 선진화 등으로 생활 속 환경질 제고

2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

자연보호지역 확대, 핵심 생태축 연결,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설립 등 육상·연안·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 유지·확대

3 불평등 및 차별 완화

사회적 안전망 강화, 장애인·다문화가족 지원,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,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적·사회적·생물학적 취약계층도 살기 좋은 사회기반 구축

4 국민 건강 및 안전 증진

환경성질환 및 감염병 예방·관리 강화, 식품안전 신뢰 제고, 재해예방 투자 확대, 화학안전 구축 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기반 구축

5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

청년일자리 확대, 사회적 기업 활성화, 정규직 전환 확대, 공정거래 협약 확대, 융·복합 기술개발 확대 등 대기업-중소기업-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경제성장 실현

6 친환경적 경제체제 확립

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, 청정생산기술 보급 확대, 녹색제품 구매 확대,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친환경적 경제구조로 전환

7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

공적개발원조 확대,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,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,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선도

8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

신기후체제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후속협상 능동적 참여,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노력,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및 적응체계 구축 등으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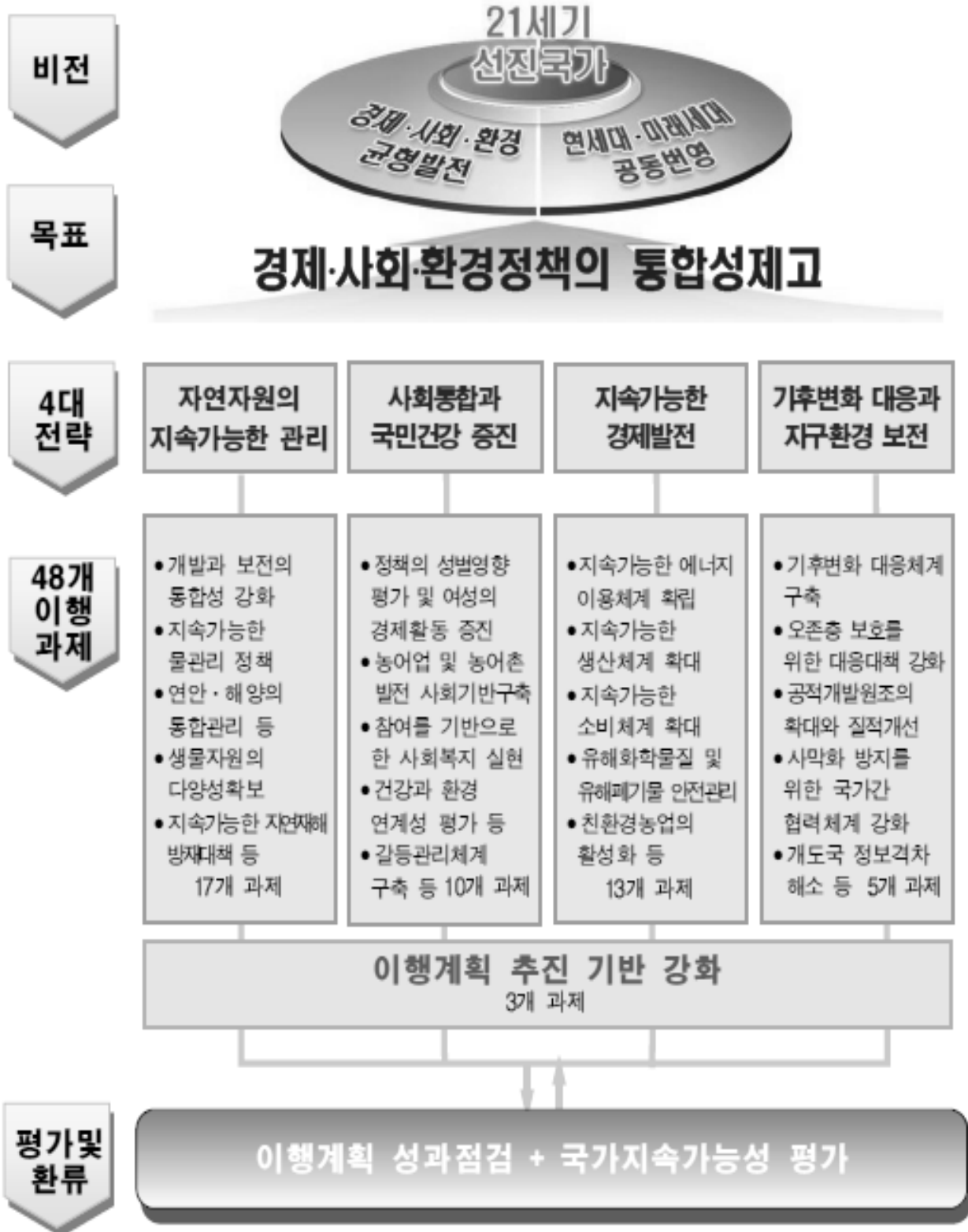
참고 1

제1·2차 기본계획 체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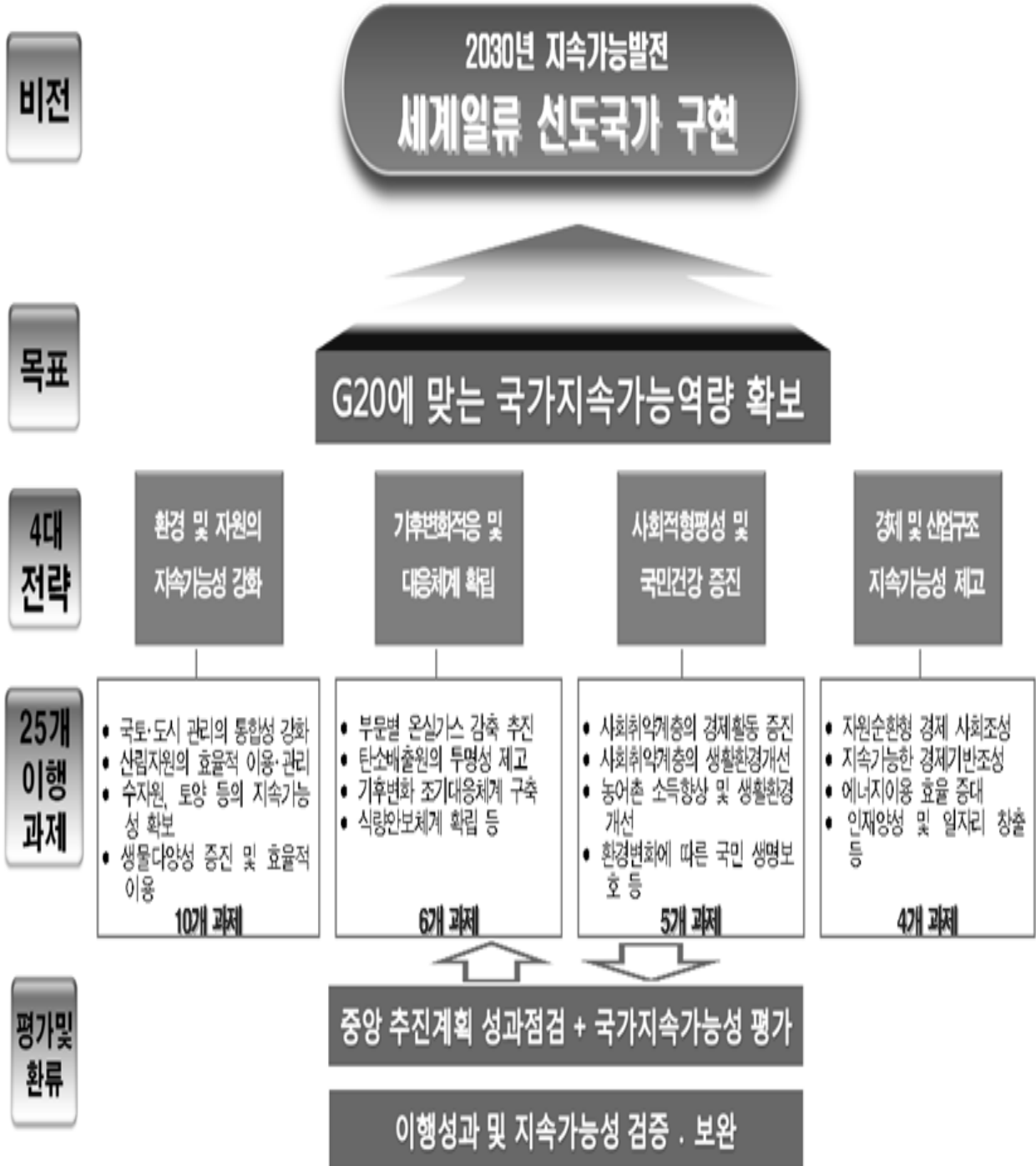
- 1 제1차 기본계획 체계도
- 2 제2차 기본계획 체계도

mev

참고1-1 제1차 기본계획 체계도



참고1-2 제2차 기본계획 체계도



참고 2

추진과제별 소관부처



참고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

| 이행과제 |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건강한 국토 환경 | | |
| 1-1.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| | |
| 1-1-① 깨끗한 대기질 확보 |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최소화 | 환경부 |
| |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제작차 기준 강화 | 환경부 |
| | 지역·업종특성을 고려한 대기유해물질관리 강화 | 환경부 |
| |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| 환경부 |
| 1-1-② 도시 생태공간 확충 | 도심속 자연생태공간 확대 | 환경부 |
| | 인문·예술·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친수공간 조성 | 환경부 |
| | 도시 숲 조성 및 연결성 강화 | 산림청 |
| 1-1-③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|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| 환경부, 국토부 |
| |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| 환경부 |
| |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| 산림청 |
| 1-1-④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| 사업장 환경관리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 | 환경부 |
| | 폐기물 수거·처리시스템 개선 | 환경부 |
| 1-2.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| | |
| 1-2-①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| 국토생태축 연결성 확보 | 환경부, 통일부, 해수부, 산림청 |
| |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| 환경부 |
| | 건강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| 환경부, 산림청 |
| | 생태계서비스 평가 관리 | 환경부 |
| 1-2-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위협요인 저감 |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체계 마련 | 환경부, 농식품부, 산림청 |
| | 야생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 기반 강화 | 환경부, 산림청 |
| | 생물다양성 유지·증진 및 위협요인 저감 | 환경부, 산림청 |
| |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| 산림청 |
| 1-2-③ 연안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| 연안·해양 오염원 관리 강화 | 해수부 |
| | 연안·해양 보호구역 확대 | 해수부 |
| | 해양수산생태계 건강성 유지·보전 | 해수부 |
| |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계 혁신 | 해수부 |

| 이행과제 |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-3.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| | |
| 1-3-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|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·공급 | 환경부, 국토부 |
| |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 | 환경부 |
| |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인프라 강화 | 환경부 |
| 1-3-②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| 지류·지천 중심으로 수질개선 | 환경부 |
| | 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배출 감축 | 환경부 |
| | 오염총량제에 의한 수질관리 기반 강화 | 환경부 |
| | 농·축산업 분야 비점오염 절감유도 | 환경부, 농식품부 |
| 1-3-③ 물순환 체계 강화 |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| 환경부, 국조실, 국토부, 농식품부, 국민안전처, 기상청 |
| | 전 국토의 물의 저류·함양 기능 유지 및 향상 | 환경부 |
| |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생태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 | 환경부, 국토부, 기상청 |
| | 물이용요금 현실화 및 상수도 수요관리 강화 | 환경부, 국토부 |
| |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 | 환경부 |
| 2. 통합된 안심 사회 | | |
| 2-1.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| | |
| 2-1-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|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·강화 | 복지부, 교육부, 국토부 |
| |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지원 확대 | 국토부 |
| |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 | 산업부 |
| 2-1-② 고용-복지 연계 강화 | 고용복지+센터 확산 | 고용부, 복지부 |
| | 사회보험 보장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| 고용부 |
| 2-1-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|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| 복지부, 국토부, 문체부 |
| | 교통약자 보호 정책 강화 | 환경부, 국토부 |
| |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 | 여가부 |
| | 장애학생, 다문화가족 및 탈북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| 교육부 |
| 2-1-④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|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| 여가부 |
| |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직장인 보육 지원 | 고용부 |
| |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| 여가부 |

| 이행과제 |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2-2. 지역간 격차 해소 | | |
| 2-2-①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| 6차산업 발굴·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| 농식품부, 산림청 |
| | 지역 교통·물류망 개선 | 국토부, 해수부 |
| 2-2-②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| 농업인 대상 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 | 농식품부, 농진청 |
| |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| 환경부, 농식품부, 농진청, 산림청 |
| | 수산분야 정책보험 및 수산직불제 활성화 | 해수부 |
| 2-2-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|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| 문체부 |
| |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| 환경부, 문체부, 해수부 |
| 2-3.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| | |
| 2-3-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|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 내실화 | 환경부 |
| |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강화 | 복지부 |
| | 영양섭취의 균형성 제고 | 식약처 |
| 2-3-② 어린이 건강 증진 |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| 복지부 |
| |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 체계화 | 환경부 |
| |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| 환경부 |
| 2-3-③ 감염병에 대한 예방·관리 강화 | 종합적·체계적 감염병 예방·관리 | 복지부 |
| 2-3-④ 식품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|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| 농식품부, 농진청 |
| |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| 농진청 |
| | 식품안전 신뢰제고 | 해수부, 농식품부, 식약처 |
| |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| 농식품부, 농진청 |
| 2-3-⑤ 휴양·치유 인프라 확충 | 산림휴양·치유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| 산림청 |
| | 국립공원 체험·휴양 기능 확대 | 환경부 |
| 2-4. 안전 관리기반 확충 | | |
| 2-4-①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| 국민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| 국민안전처 |
| | 재해 예방 투자 확대 | 국민안전처 |
| 2-4-②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 | 화학물질 전(全)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| 환경부 |
| | 화학사고 피해저감 기반 구축 | 환경부 |
| |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정착화 | 환경부 |

| 이행과제 |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-4-③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|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| 환경부, 국토부 |
| |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| 국토부 |
| |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| 국토부 |
| 2-4-④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| 침수 피해 방지대책 강화 | 환경부, 국토부, 기상청 |
| | 산사태 예방 및 재발방지 체계 구축 | 산림청 |
| | 원인별·맞춤형 산불예방 | 산림청 |
| 3. 포용적 혁신 경제 | | |
| 3-1.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| | |
| 3-1-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| 강소기업 인지도 제고 및 일자리 정보제공·매칭 강화 | 고용부 |
| |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| 고용부, 기재부 |
| |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| 고용부 |
| | 혁신형 창업지원 확대 | 환경부, 미래부, 중기청 |
| 3-1-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|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| 고용부 |
| |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| 고용부, 산업부, 국토부 |
| | 안전한 일터 조성 | 고용부 |
| 3-1-③ 공정거래 문화 확산 | 공정거래 확산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 | 공정위 |
| 3-1-④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|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민-관의 개방적 협업 생태계 조성 | 미래부 |
| |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| 산업부 |
| | 기후변화 적응 산업 육성 및 지원 | 환경부, 기상청 |
| |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| 환경부 |
| 3-1-⑤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| 미래 유망 신기술 추가 발굴·확산 | 미래부 |
| |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 분야별로 차별화된 R&D 추진 | 환경부, 농식품부, 미래부, 산업부, 해수부 |
| | 에너지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 기술 발굴 | 산업부 |
| | 융·복합 환경기술개발 확대 추진 | 환경부 |
| | 농업분야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·보급 | 농진청 |
| 3-2.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| | |
| 3-2-① 재사용·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|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| 환경부 |
| | 자원의 재사용·재이용 촉진 | 환경부, 산업부 |
| | 도시광산 산업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 | 환경부, 산업부 |
| |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기반 조성 | 산업부 |

| 이행과제 |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-2-②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| 중소·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| 환경부, 산업부 |
| |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| 산업부 |
| | 기업의 친환경정보와 녹색 금융연계 강화 | 환경부 |
| 3-2-③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| 친환경소비 실천률 향상 | 환경부 |
| |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 | 환경부, 조달청 |
| | 수요기반 녹색제품 생산·유통 활성화 | 환경부 |
| | 친환경시장 경쟁력과 국내·외 협력 강화 | 환경부 |
| 3-2-④ 저탄소생활 확산 | 저탄소생활 실천네트워크 확대 | 환경부 |
| | 녹색건축 인증제도 내실화 | 국토부 |
| | 친환경 운전 확대 | 환경부, 국토부 |
| | 저탄소 생활 프로그램 활성화 | 환경부, 산업부 |
| 3-3.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| | |
| 3-3-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|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 시행 | 산업부 |
| | 에너지공급시스템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| 산업부 |
| |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확보 | 산업부 |
| |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| 국토부 |
| 3-3-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|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단계적 확산 | 환경부, 미래부, 산업부 |
| | 소규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참여 확대 | 산업부 |
| | 신재생에너지 R&D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 | 산업부 |
| |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| 환경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농진청, 산림청 |
| 3-3-③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|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 전환 | 산업부 |
| | 원전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| 산업부, 원안위 |
| 4. 글로벌 책임국가 | | |
| 4-1.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| | |
| 4-1-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| 개도국 SDGs 이행지원 전략 마련 | 국조실, 기재부, 외교부 |
| |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| 환경부, 기재부, 외교부 |
| 4-1-②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|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강화 | 환경부, 기재부, 미래부, 외교부 |
| | 다자간 환경협력 강화 | 환경부, 산림청 |

| 이행과제 |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-2.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| | |
| 4-2-① 신기후체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| 신기후체제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후속협상 대응 | 환경부, 산업부, 외교부 |
| |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| 미래부, 산업부 |
| 4-2-②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|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정착 | 환경부 |
| | 감축유연성 제고 및 탄소시장 활성화 | 환경부, 산업부, 산림청 |
| 4-2-③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 | 산업·발전 부문 감축 역량 강화 | 산업부 |
| |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| 국토부 |
| | 저탄소 교통·물류체계 구축 |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 |
| |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| 농식품부, 해수부, 농진청 |
| | 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강화 | 환경부 |
| | 냉매 사용 저감 및 관리 강화 | 환경부, 산업부 |
| 4-2-④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| 기후변화 적응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| 환경부 |
| |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토대 확충 | 환경부, 미래부, 해수부, 기상청, 농진청 |
| |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| 환경부, 농식품부, 복지부, 해수부, 산림청 |
| 4-3.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| | |
| 4-3-①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|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및 확대 | 환경부, 외교부 |
| | 해양환경협력 강화 및 확대 | 해수부 |
| | 기후, 황사, 사막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| 기상청, 산림청 |
| 4-3-②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| 남북협력 사업을 통한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 | 환경부, 통일부, 농식품부, 산림청 |
| |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| 환경부, 통일부 |
|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| | |
| ①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|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| 환경부 |
| | 지속가능발전 소통체계 활성화 | 환경부 |
| 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|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| 환경부, 교육부, 산림청 |
| ③ 사회 투명성 제고 |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| 권익위 |
| | 청렴교육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의 규율범위 확장 | 권익위 |
| | 사회 전반의 신뢰문화 확산 | 권익위 |
| ④ 지속가능발전 평가·환류 체계 강화 | 지속가능발전 평가 강화 및 지표개선 | 환경부 |
| | SDGs 지표 연구 및 관련 통계 개발·구축 | 통계청 |